

#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유길상

홍성호

## 目 次

I. 머리말 .....	1
II.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2
1. 임의제도에서 강제제도로 .....	2
2.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	3
III.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최근동향 .....	4
1.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 : 고용보험화 .....	4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엄격화 .....	6
3.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계 경향 .....	9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수준의 단계적 감소 경향 .....	11
5. 부양가족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경향 .....	11
IV.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	12
1. 영국 .....	12
2. 독일 .....	12
3. 스웨덴 .....	26
4. 미국 .....	32
5. 일본 .....	33
6. 캐나다 .....	51
7. 아일랜드 .....	94
8. 호주 .....	102
9. 중국 .....	117

10. 이스라엘 .....	135
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	165
부록. 고용보험실시국가의 실업보상제도(개괄표)	

## I. 머리말

1905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세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실업보험제도는 그동안 노동조합원에게만 가입이 강제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조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제도의 형식이 전환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업이 발생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에서 실업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까지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로 발전해 오면서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제도와 함께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각국은 고용보험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는 <표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실시국가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1996년 7월 1일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각국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I-1>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연도별 실시국가수 추이

(단위 : 國)

	1940	1949	1958	1967	1977	1988	1995
한 가지 이상의 사회보험 실시국가	57	58	80	120	1,129	145	146
산 재 보 험	57	57	77	117	129	136	138
공 적 연 금	33	44	58	92	114	135	139
의 료 보 험	24	36	59	65	72	84	86
고 용 보 험	21	22	26	34	38	40	49

## II.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1. 임의제도에서 강제제도로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실업공제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조합원이 실직을 하면 한정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고용주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개별기업차원의 실업자 구제제도는 재정이 극히 취약하여 실직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실업공제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가 1905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화되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네덜란드(1916년), 핀란드(1917년), 스페인(1919년),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스웨덴(1934년)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노조원에게는 가입이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비노조원으로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을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며, 비노조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1911년에 세계 최초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 벨기에(1920년),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

(1925년), 독일(1927년) 등도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실업보험을 새로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던 많은 국가들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바, 오늘날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3개국밖에 없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강제적 제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 2.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제도형태에 관계없이 초기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이 발생된 이후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정책수단을 실업보험의 체계내로 흡수하거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실업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가미된 형태의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한다. 즉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소극적 개념인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취업시점부터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단 취업된 근로자에게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도 계속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켜주며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고용주의 고용조정을 지원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극적 인력정책수단들을 실업보험의 틀 속에 포함하고 있거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Ⅲ.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최근동향

#### 1.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 : 고용보험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실업보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다.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업에 대한 사후 구체적인 차원의 것이었으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소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훈련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실업급여를 연계시켜 質·量 양면에 걸친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35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을 시행한 스웨덴은 1948년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스웨덴의 영향을 받은 독일이 1929년에 제정된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1969년에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여 고용보험으로 전환하였으며 일본도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법’을 1974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여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



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최근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 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키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한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sup>1)</sup>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①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통하여 노동시장이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갈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고, ② 노동력의 숙련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③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본인 스스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한다는 3가지를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로 삼고 1996년 4월 1일부터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엄격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실업급여 신청자격(qualifying requirements)을 충족시킬 것, ② 실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 ③ 실업급여 수급의 不資格要件(disqualifications)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첫번째 요건은 실직자가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두번째

---

1) Hansen and Byers,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Retraining : Can a Closer Link Be Forged." Hansen and Byers(ed.), Unemployment Insurance : The Second Half-Century(1990), pp. 267~301.

요건은 실직자가 실직 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세번째 요건은 보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危害(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직근로자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는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을 당한 경우에만 충실히 보호하고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요건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문화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실업급여 요건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은 ①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서 일정한 기준기간(base period) 동안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입해야 하고 ②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요건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일할 의사는 물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③ 실업급여 부자격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훈련의 거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이념이 풍미하던 60년대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수준을 인상하여 실직자의 생활보전에 충실하려는 것이 선진국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산업구조 및 고용조정이 가속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도 하향조정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등록만 하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80년대 들어 실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미국의 상당수의 주(州)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은 1988년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업급여의 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추가하여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지난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최고 6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경과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기간이 1970년대에는 크게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은 1988년에는 대기기간을 폐지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1993년부터 5일간의 대기기간을 다시 부활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실업급여 제한기간이 점차 연장되어 급여남용을 보다 철저히 규제하는 것도 주요 특징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초기에는 1~5주간만 실업급여를 제한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급여제한기간을 6주 이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州에서 완전히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 스페인 등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이 1986년까지는 6週간이었으나 1987년 이후부터 1988년까지는 13주로 연장되었고 다시 1989년부터는 26주로 연장되었다.

주요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보면 <표Ⅲ-1>와 같다.

<표Ⅲ-1> 주요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

국명	급여제한기간	국명	급여제한기간
일본	1~3개월	아일랜드	6주
호주	2~12주	네덜란드	없음
오스트리아	4주	뉴질랜드	26주
벨기에	1~26주	노르웨이	4주
캐나다	7~12주	스웨덴	4~10주
덴마크	5주	영국	1~26주
핀란드	6주	미국	완전급여금지
프랑스	완전급여금지	그리스	완전급여금지
포르투갈	완전급여금지	스페인	완전급여금지
독일	12주	한국	완전급여금지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July 1991).

### 3.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계 경향

과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수준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즉 피보험고용기간(insured employment period)에 관계없이 실업급여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동일기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갖추면 고의적으로 실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급여 수급남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고용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길게 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에쿠아도르, 일본, 루마니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중국 및 우리나라가 바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피보험고용기간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 속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급자격자의 연령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계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같은 피보험고용기간의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길게 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준기간을 고령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수준의 단계적 감소 경향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관계없이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동일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가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칠레, 체코, 헝가리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예컨대, 스페인은 첫 6개월간은 실업전 임금의 70%를, 그 다음 6개월간은 60%를 지급한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 85일 이후에는 급여수준을 5% 감액하고 170일 이후에는 추가로 5%를 감액하되 장애인 및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급여수준 90프랑 미만의 저임금계층의 경우에는 감액이 없다. 전액 재정부담에 의한 정액(定額)의 실업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칠레는 1981년부터 실업후 최초의 90일간은 월 6천페소를, 91일 이후 180일까지는 월 4천페소를, 그리고 181일 이후 360일까지는 월 3천페소를 지급하고 있다. 1991년에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 체코는 실업 후 첫 3개월간은 실업전 임금의 60%를, 그 이후 3개월간은 50%를 지급하며, 헝가리는 1990년부터 실업후 첫1년간은 실업전 과세후 임금의 70%를, 2년째에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 5. 부양가족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경향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는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불가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란, 에이레, 몰타, 노르웨이, 스페인, 우루과이, 영국, 스웨덴,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급여 이외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독일, 핀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부양가족 수당 대신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총액이 실업발생전 임금에 비하여 너무 높게 되면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한 실업급여 총액의 상한을 두어 일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63년에 부양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들어 이를 폐지하였다.

## IV.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 1. 영 국

#### 가. 영국 실업보험제도의 연혁

1911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1912년 7월 15일부터 보험료를 징수, 19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26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가 실업을 당하게 되면 1주간의 대기기간 경과 후 15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정당한 사유없는 자발적 이직자 및 취업거부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6주동안 부여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70%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충당하고, 나머지 30%의 비용은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다.

1946년에는 1942년에 제출된 베버리지보고서에 근거하여 「국민보험법」을 제정되었다. 「국민보험법」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국민제도로 통합하여 사회보장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이 국민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26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실업자에 대하여 3일간의 대기기간 후 최고 30주까지 지급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주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아야 하며, 실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취업을 못하면 직업훈련기관에서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발생 전 임금수준과 관계없는 정액제로 하도록 하였다.

1948년부터는 실업발생 전 임금수준과 연계된 임금비례보조급여제도가 도

입되어 최고 156일간 실업발생 전 임금의 85%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 정액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1982년에는 1948년에 도입된 임금비례보조급여제도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자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1988년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13주에서 26주로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였다.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한 결과 영국은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실업부조에 의한 소득보조<sup>2)</sup>를 받는 장기 실업자들로 인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소득보조를 받는 실업자의 비중은 1994년 현재 전체 실업자중 60%나 되어 약 30%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반하여 매우 높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나머지 10%는 실업자 등록만 한 상태에서 국민보험료의 혜택만 받고 있음). 특히 소득보조를 받는 실업자들은 실업급여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1년 이상의 장기실업에 놓여 있는 자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면서 이러한 실업부조제도의 부작용 해소와 실업자들의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정책기조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0월에 영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안을 담은 백서가 발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 이래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영국의 실업보험제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2) 실업급여는 3일간의 대기기간 경과 후 최고 52주까지 지급되는데 국민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경우 1년간의 실업급여가 소진될 때까지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저소득자에 한하여 실업부조로서 정부부담에 의한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을 수 있다. 소득보조금액은 수급자의 경제사정, 연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업급여 수준보다는 다소 낮다.



1994년 10월 24일 발표된 백서 이후에 만들어진 「구직자입법안(Jobseeker's Bill)」이 1995년 6월 24일 여왕의 재가를 받은 이후, 동법시행령은 1995년 가을에 제출되었으며, 1996년 10월부터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혁안은 기존의 실업급여와 소득보조를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으로의 통합한 것으로 '구직급여'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그들에게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구직급여'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시행은 교육·고용부와 사회보장부가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데 특히 교육·고용부는 구직급여가 가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보장부는 수당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나. 구직급여

### 1) 구직급여의 성격

기존의 실업급여와 소득보조를 통합한 구직급여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한 형태(Contribution-based ; 이전의 실업급여에 해당)와 소득에 기초한 형태(Income-based ; 이전의 소득보조에 해당)의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닌다. 국민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험료 부담에 기초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고, 자산액이 8,000파운드 이하인 사람은 소득에 기초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

### 2) 대상

실직된 사람은 유형에 따라 소득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편부모, 중증장애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 장애로 소득이 감소한 장애인, 학생, 해산 예정일이 11주내인 임산부, 60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보조를 받는다. 구직급여는 실업이 되었거나 평균 주 16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실직자 중에서 국민연

금 수급 연령(60세)이 안된 사람으로 재취업이 가능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3)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급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가) 구직자동의서(Jobseeker's Agreement)의 작성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실직자는 구직급여신청서와 구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서비스 상담가와 면담을 한 후 구직자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담에서 구직자동의서는 개별 구직자와 구직자의 취업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직자와 직업상담원과의 상담 후에 작성되며, 구직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와 기회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시키게 된다. 1997년 10월 27일부터는 구직급여신청서가 철저하게 작성되어야 구직급여신청서가 접수된다.

#### 나)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 다)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

구직급여신청자는 당장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돌봐야할 의무가 있는 구직자의 경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더라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신청자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신념을 신봉하는 사람의 경우
- 정신적 또는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소 16시간 동안은 근로할 수 있는 확실한 취업전망이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라) 수급요건에 있어서 예외적용

평균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특정 보호자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자원봉사자, 보호시설이나 양로원에 살고 있는 사람, 특정 직업종사자(예를 들어 구명정 담당원, 시간제 소방관 등), 양부모, 지역의원, 현재 법정에서의 다툼이 있는 사람, 장애로 인한 저소득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마) 구직센터

일반적으로 구직자급여 수급자는 2주에 한번 구직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근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한다. 그러나 여행중이거나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도 된다.

바) 소정급여일수 및 급여수준

보험료 납부에 기초한 구직급여는 6개월간 지급되며, 소득에 기초한 구직급여는 소득이 적정 수준 이하이고 수급조건을 만족시키면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된다.

1998년 4월 6일부터 적용된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IV-1> 영국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단위 : 파운드)

기여기반형 1인당 급여		소득기반형 1인당 급여	
18세 미만	30.30	18세 미만	30.30
18-24세	3.85	18-24세	39.85
25세 이상	50.35	25세 이상	50.35
		부부	79.00

구직급여는 실업자 1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 지급액은 소득보조와 동일한 액수이며, 소득에 기초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소득지원에 추가되는 부가급여<sup>3)</sup>를 받을 수 있고 개별적인 자산조사 없이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에 기초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주거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전에는 구직자의 배우자가 1주 16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구직자는 소득보조를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 이 근로시간 한도를 1주 24시간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구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주에 24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을지라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근로유인 프로그램

구직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다음과 같은 근로유인 프로그램이 있다.

##### 1) 30시간 부가급여(30 Hour Premium)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아동부양 저소득 가족급여(Family Credit), 그리고 부양아동이 없는 저소득자 급여(Earnings Top-up)를 받고 있는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각각의 급여에서 10.80파운드를 부가하여 지급한다.

##### 2) 육아지원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육아지원급여(Child Support Maintenance)를 받고 있는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보조나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를 받지 않

---

3)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주는 가족 부가급여, 장애아 부가급여, 장애인 부가급여, 만성환자 부가급여, 간병인 부가급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한 부가급여가 있으며, 여러 부가급여에 수급요건이 되어도 가장 높은 수준의 부가급여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고 직장을 구한 경우, 최고 1,000파운드의 육아지원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 3) 시용근로에 대한 지원(Employment on Trial)

근로의 계속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시용적으로나마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자가 주당 16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직장에서 4주 이상 일을 하고 12주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지시키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고용재활프로그램(Employment Rehabilitation Programme)

고용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구직기술을 향상시키고 근로경험을 제공 받는 장애인의 경우 주당 38.00파운드의 급여를 받는다.

### 5) 아동부양이 있는 저소득가족을 위한 급여(Faster Family Credit Award)

아동부양이 있는 저소득 가족을 위해 이들이 구직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6)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Housing Benefit/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소득원조나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수입이 증가되었을 경우 소득보조나 구직급여가 끝난 뒤 8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를 4주간 연장하여 준다.

### 7) 취업장려금(Jobfinder's Grant)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가 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임금이 주당 150파운드 이하(세전)인 직장을 구했을 경우 취업한 실업자에게 일시불로 200파운드를 지급한다.

8) 직장알선(Jobmatch)

2년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정규근로의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거나 1시간 이상의 시간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당 16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를 할 경우 6개월 동안 주 50파운드의 수당을 지급하며 300파운드에 해당하는 직업훈련바우처를 제공한다.

9)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금 면제(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oliday for employers)

장기실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 구직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주분의 국민보험 기여금의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 주는 제도이다.

10) 부양아동이 없는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New in-work benefit pilot : Earnings Top-up)

저소득자의 취업과 취업의 유지를 격려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독신자나 부양아동이 없는 부부에 대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26주 동안 정액제로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액은 부부인 경우 주당 47.65파운드, 25세 이상의 독신자의 경우 주당 28.75파운드, 그리고 25세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 주당 23.35파운드를 지급한다.

11) 공공근로사업프로그램(Project work scheme)

장기실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센터에 출석하고 2년 동안 급여 지급의 중단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28일 이상 급여의 지급중단이 없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13주 동안 구직도움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취직이 안되는 경우 13주간의 강제적인 공공근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10파운드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다.

12) 근로복귀보너스

구직자가 노동시장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재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실업한 자가 취업하는 경우 근로복귀보너스를 지급한다. 근로복귀보너스는 수급자가 시간제로 주당 5파운드(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파운드) 미만의 임금소득을 갖는 경우 그는 재취직수당 명목으로 주당 5파운드(배우자가 있는 경우 10파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의 근로로 인한 임금소득이 주당 5파운드 이상이 될 경우, 실업자와 배우자를 위해 구직급여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액수의 감소분에 대해 1파운드당 50펜스를 일종의 적립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들이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기간동안 최대 1,000파운드까지 적립될 수 있다. 이러한 재취직수당은 실업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1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단, 실업자의 배우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24시간)가 되면 일시불로 지급된다.

## 2. 독일

### 가.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연혁

독일의 고용보험은 고용촉진법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sup>4)</sup>, 예컨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래지향적 사업,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임금대체급여 등과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독일 최초의 실업보험(고용보험)은 18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근대적인 실업보험의 모습을 갖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업기금을 조성한 1918년과 사용자와 근로자도 임금에 비례한 각출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1923년의 일이다.

이후 1924년에 노사의 각출료 합이 임금의 3%에 이르렀으며 1925년에는 무기한으로 지급되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39주로 제한하고 근로단축수당

---

4) 이와 같은 분류는 연방고용청의 예산지출서에 나타난 사업분류이다.

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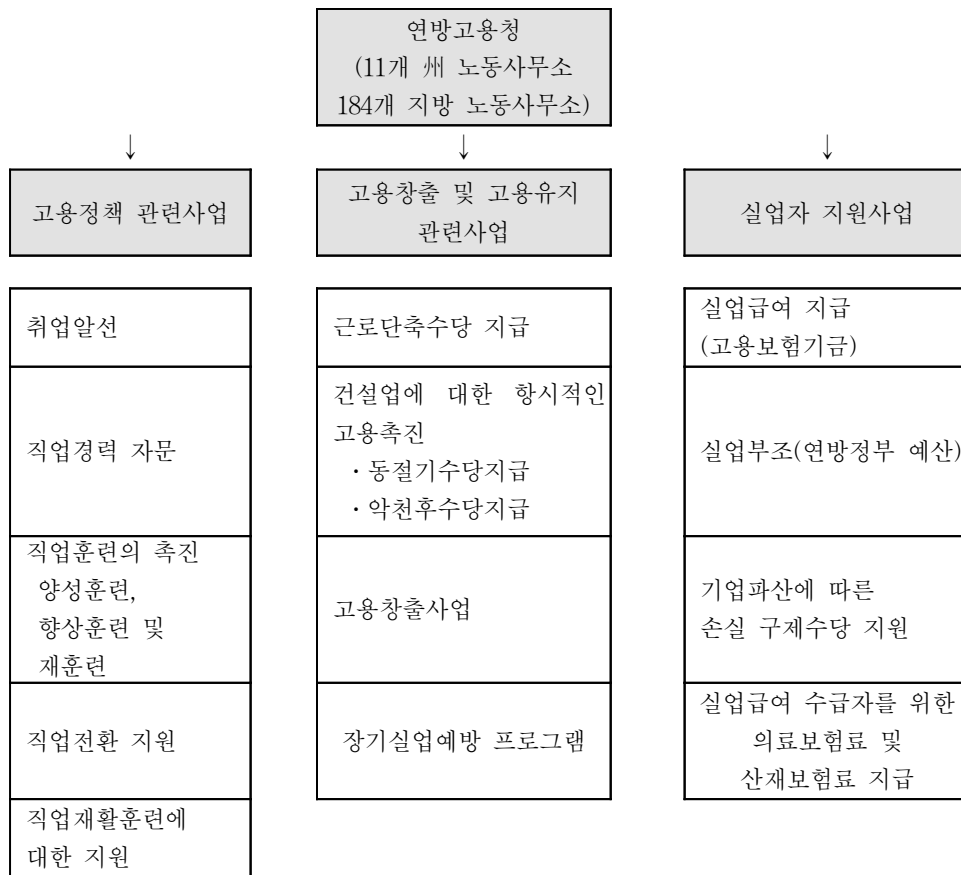
한편 1920년 노·사·정 대표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알선을 위한 중앙조직을 설립한 다음 1922년 州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취업알선사무소를 설치하여 취업알선업무를 해왔었는데 1927년 10월 1일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의 취업알선기능과 실업기금을 통합하게 되었다. 고용촉진법은 이러한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69년 7월 1일 제정되었다.

고용촉진법 제정을 기회로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종전까지 실업발생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순수한 실업보험제도에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직업선택과 직장 및 교육훈련을 알선하며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정책차원으로 전환되었다.

고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을 위해 존재하고 있던 고용청은 연방고용청으로 확대·개편되어 고용촉진법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독일의 실업보험은 바로 고용촉진법의 각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연방고용청의 업무도를 살펴보면 <그림IV-1>과 같다.

[그림IV-1] 독일의 연방고용청의 업무도





자료: 독일연방공보처, 「Internations Press」, 1995년 7월호

#### 나. 실업자 지원사업

##### 1) 실업급여

##### 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난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12개월동안 1주에 18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 직업훈련생을 포함한 모든 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 ① 자영업자, 공무원, 판·검사, 직업군인 등 독립된 보상제도를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자
- ②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 ③ 연간 2개월 이하 취업한 근로자(주 5일 이상 계속 취업할 경우)
- ④ 연간 50일 이하 취업한 근로자(주 5일 이하 취업할 경우)
- ⑤ 아르바이트생
- ⑥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인 자

#### 나) 고용보험료율 및 부담원칙

고용보험기금은 연방고용청의 운영기금에서 조달되며 이 운영기금은 주로 관련당사자의 각출료로 모금된다. 이밖에도 연방고용청은 사용자 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기관들로부터 각출료를 받는다.<sup>5)</sup>

사용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험료는 1995년 7월 현재 근로자 임금총액의 6.5%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을 부담한다.

독일에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1995년 7월 현재 이러한 임금의 상한액은 서독지역에서는 월 7,600마르크이고 동독지역에서는 월 5,900마르크이다. 이러한 임금 상한액의 존재로 예컨대 서독지역의 어느 근로자의 월임금이 10,000마르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7,600마르크의 3.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 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지난 3년동안 적어도 최저 12개월(360일)동안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에게는 보다 유연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데 기준기간 3년동안 180일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전제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체없이 노동사무소에 실업등록을 등록하여야 하고,  
둘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5) 실업부조는 연방정부의 세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된다.

셋째, 연방고용청에 의한 취업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표IV-2> 독일의 피보험고용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기간 (年)	피 보 험 고용기간(日)	연령계층별 실업급여 수급기간(日)				
		42세 이하	42세 이상	44세 이상	49세 이상	54세 이상
3	360	156	156	156	156	156
7	480	208	208	208	208	208
7	600	260	260	260	260	260
7	720	312	312	312	312	312
7	840		364	364	364	364
7	960		416	416	416	416
7	1,080		468	468	468	468
7	1,200		520	520	520	520
7	1,320			572	572	572
7	1,440				624	624
7	1,560				676	676
7	1,680					728
7	1,800					780
7	1,920					832

#### 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실업발생 이전 3년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의해 달리 결정되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하여 최저 12개월에서 최고 32개월까지 지급된다.

1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준은 실업 이전의 임금소득에서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법정 공제항목을 차감한 소득(순임금)의 67%이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소득(순임금)의 60%이다.

#### 2) 실업부조

##### 가) 실업부조의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실업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의 충족 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 ① 노동사무소에 실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연방고용청에 의한 취업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③ 실업부조를 신청하여야 함.
- ④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함.
- ⑤ 노동사무소와의 동의하에 지역의 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실업부조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나) 실업부조의 지급수준

적어도 1인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부조 지급수준은 실업 이전의 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소득(순임금)의 57%이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순임금의 53%이다.

실업부조는 소득이나 자산이 소득심사에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또는 지급이 아예 중지된다. 소득심사는 근로자 자신의 소득 및 자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심사대상이 된다.

실업부조는 실업자로 등록되기 이전 1년 중 150일간 피보험기간에 속해 있었거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12일간 지급될 수 있다.

#### 다. 관련제도와 프로그램

##### 1) 근로단축수당

###### 가) 지급요건

사내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줄어들때 따라 근로자의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근로단축수당이 지급된다.

###### 나) 지급수준

근로단축수당은 회사를 통하여 임금인하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재

정은 고용주의 기여로 충당되며, 근로단축수당은 사용자 또는 종업원평의회에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단축수당의 지급수준은 실업 이전의 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소득(순임금)의 67%이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순임금의 60%이다.

## 2) 기업파산에 따른 손실 구제수당 지원(광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

### 가) 수급요건

연방고용청은 회사파산 시 사용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근로자 소득의 손실액을 보상·지원하고 있다. 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파산절차의 개시 또는 통지 또는 회사의 운영이 완전히 정지된 이후 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 나) 지원수준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체불된 임금전액을 지원한다.

## 3) 동절기 수당(동절기 약천후 수당<sup>6)</sup>)

### 가) 수급요건

건설업부문의 항시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되지 않았고, 조합이 동의한 경우 건설근로자는 동절기(11월에서 3월 31일) 기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 동절기수당이 지급된다.

### 나) 동절기수당 지급수준

12월 15일부터 2월 1일 기간(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제외)중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2 마르크를 동절기수당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

6)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약천후로 인하여 총 15시간 이상의 근로손실이 발생할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약천후수당을 지급한다. (1996년 3월 이후로 폐지되었다.)

다.

#### 4) 고용창출사업

##### 가) 고용창출사업의 지원대상

고용창출사업은 청년근로자 또는 근로활동의 중단 이후 직업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 그리고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실업자중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금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한다.

첫째, 최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생계유지수당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셋째,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 중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 예컨대 장기실업자, 장애인 및 중고령근로자 등은 고용창출사업의 우선대상이 된다. 그리고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전체 예상되는 고용창출사업 대상자의 5% 한도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요건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업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지원이 되는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지원 없이는 시작이 불가능할 때,

둘째, 공법상의 법인일 경우 고용창출사업의 대상은 그 사업이 사회구조개선이나 환경개선 및 경제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 나) 고용창출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

실업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취업 곤란한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사용자는 단체협약 임금의 50~75%를 1년간 보조받을 수 있다.<sup>7)</sup> 매우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취업 곤란한 구직자는 임금의 100%를 지

---

7) 고용창출을 이룬 기관이 보조를 받지 아니하는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까지 지급이 연장된다.

원한다. 이자 지급을 위한 대부와 지원 또한 가능하다.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에 그가 취업한 회사의 사용자에게는 임금비 보조금 명목으로 단체협약임금의 50~70%에 해당하는 부가적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1년에 10%씩 감소하여 최대 5년까지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18개월 이상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18개월까지 임금의 100%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이 때 매년 10%의 보조금 감소조치는 없다. 실업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보조금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

#### 5) 개별근로자의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지원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 연방고용청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수준은 지원대상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그 새로이 채용하는 근로자가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별근로자의 직업훈련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직업훈련수당 : 사업내에서 현장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계 출신의 훈련생 또는 양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급
- 생계비 지원 : 향상훈련 또는 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순임금(net pay)의 67%(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0%(자녀가 없는 경우)의 생계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 또한 고용창출사업에 대하여 시간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가 향상훈련 또는 재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앞의 경우보다는 적은 비율로 생계비가 지급된다.
- 생계비 지원 이외에 고용사무소는 훈련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작업복 구입비 및 교통비 그리고 탁아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 6) 취업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사무소는 실업자 또는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 구직 비용(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조비 지원 : 6개월 동안 200마르크까지 지원
-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 광역구직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대부 또는 보조비 지원
- 작업에 필요한 의복과 도구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작업복구입비는 300마르크, 도구 및 장비구입비는 500마르크까지 대부 또는 보조비 지원
- 취업에 따라 가족과 불가피한 별거시 별거수당 지급 : 1년동안 보조비 지급이 가능한데 그 액수는 근로자의 수당을 포함하는 총임금소득에 따라 달라짐.
- 취업후 첫달의 급여일까지 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기간중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도기수당(transitional allowance) 지급 : 1회에 한하며 1,000마르크까지 대부 또는 보조비 지원
- 사용자가 취업알선이 매우 곤란한 실업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조비(Eingliederungsbeihilfe) 지급 : 최장 2년까지 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가능하나 7개월 이후부터는 10%씩 감소되어 지원

#### 7) 창업지원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최저 4주 동안 지급받던 자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고용사무소는 자영업 운영의 초기의 생계보장을 위해 과도기급여(transitional benefit)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받던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액과 동일하며 최대 26주까지 지원된다.

4주 이상 고용창출사업 또는 생산적인 고용촉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전의 동·서독지역의 근로자 또는 근로단축수당을 지급받던 근로자는 이전에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과도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8) 장기실업의 예방 프로그램

사용자는 장기실업자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보



조받을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총투자비용<sup>8)</sup>의 80%까지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1999년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인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조치’로 이루어졌다.

장기실업자에게 정규직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고용 첫해에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이전의 실업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50~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라. 최근 독일의 실업보험급여 등 각종 임금대체급여 지원을 변화추세

최근 독일의 고용보험료율(1997년 현재 6.7%)과 각종 급여 및 수당 지원율은 모두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율을 낮추면서 그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율도 낮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금대체급여의 변화율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지원을 인하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생계유지수당과 실업부조의 인하폭이 높았다(표IV-3 참조).

자녀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실업부조, 조업단축수당, 악천후수당 등의 감소율이 낮았던 반면 생계유지수당의 감소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IV-3> 독일의 임금대체급여의 변화

(단위 : %)

---

8) 총투자비용에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소요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투자비용도 포함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		1994년 1월 1일부터		변화율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고용보험료율	임금총액의 6.8		임금총액의 6.5		- 4.4	
실업급여	68	63	67	60	-1.5	-4.8
근로단축수당	68	63	67	60	-1.5	-4.8
악천후수당	68	63	67	60	-1.5	-4.8
실업부조	58	56	57	53	-1.7	-5.4
생계유지수당	73	65	67	60	-8.2	-7.7

자료: 독일의 연방고용청 홈페이지

#### 마. 통일이후 독일의 적극적 노동정책

##### 1) 동독지역

통일 이전인 1990년 6월 22일에 제정된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서독의 고용촉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동독의 예상되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몇몇 조항이 수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고용촉진법은 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조항을 규정하였다.

##### 가) 고용정책 관련사업

1995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의 지원은 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훈련기관에서 행해지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적인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 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통일 이후 동독지역을 위한 고용창출사업지원은 1995년까지 적용되었는데 지역의 실업률과 관계없이 최저 75%에서 최고 100%의 임금보조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다만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그러한 사업체가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만 임금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업단축수당의 경우 조업단축으로 줄어든 순임금의 60% 그리고 자녀가 있을시에는 순임금의 67%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고용촉진법 제249조에 따른 새로운 고용촉진사업은 실업자는 물론 고용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1993년부터 환경, 사회서비스분야 및 청소년지원분야 그리고 문화, 체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와 동일한 금액의 임금보조비를 최고 3년까지 지원받는다. 단 여기에는 첫째, 보조를 받지 않는 근로자 임금의 9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둘째, 근로시간이 정규적인 근로시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 다) 실업자 지원사업 : 실업급여

1990년 2월 ‘직업소개 기간 중 시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조정지원에 대한 시행령’을 통해 국가재정에 의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실업등록을 하였지만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고 500마르크까지이고, 순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해고된 기업에서 500마르크까지 보조한다.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급여조건과 계산방법에서 서독과 유사하며 동독의 근로소득이 낮아 1991년 말까지 새로이 실업된 경우와 다른 소득대체급여 지급시 주당 115마르크 이하의 급여수혜자에게는 사회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조금은 국가재정에서 충당되어 그 금액이 고정되었지만 임금수준이 인상되는 까닭으로 1995년 날까지로 연장된 지급기간 이전에 이미 그 의미가 사라졌다.

#### 2) 서독지역

고용촉진법 242조에 따라 서독지역에 새로운 고용촉진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책은 취업하기 곤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서비스분야 및 청소년지원분야에 취업시키고 이들에게 임금을 보조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의 월평균 지급액이 임금보조금으로 최고 2년까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은 보조를 받지 않는 근로자 임금의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고용촉진법 242조항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바. 사회보장급여의 국제적 연계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C)은 회원국내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국경을 초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아이슬랜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sup>9)</sup>

독일도 여타의 유럽연합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럽경제연합(EEC)의 규정 제1408/71조에 근거하여 유럽 연합 내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상호 보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국가들과는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간 이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 1) 실업급여 수급요건

다른 유럽연합국내에 거주하면서 독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독일 출국 이전에 실업후 최소 4주전 독일 노동사무소에 취업알선을 위해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자신이 이주할 해당국가의 노동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9) 현재에는 보스니아, 크로티아, 리히텐슈타인공국, 전 마세도니아 유고슬로비아 공화국, 폴란드, 스위스, 슬로비니아, 터키, 칠레(연금만 가능), 이스라엘, 캐나다(연금만 가능), 모로코, 튀니지아, 미국(연금만 가능) 등의 국가들과도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실업급여 지급수준

실업자의 신분으로써 기타 유럽연합국 중의 일국 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스위스, 슬로브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舊마세도니아의 유고슬라비아공화국 등에 현재 실업자의 신분으로써 있지만 과거 독일에서 일했던 사람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들 국가의 실업보험체계 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3. 스웨덴

### 가. 최근의 노동시장 정책

스웨덴 정부는 최근들어 ‘先勤勞, 後支援’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모두를 위한 근로(work for all)’ 노동시장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노동시장 관련 조치를 마련한 이후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안정사업, 노동공급 관련사업, 노동수요 관련사업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1) 직업안정사업

직업안정사업의 주요 기능은 적합한 직장에 적합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스웨덴의 모든 사용자는 10일 이상의 근무를 요하는 직업에 대해서 정부의 직업안정기관(고용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구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1992년 12월 스웨덴 정부는 민간직업소개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 민간직업소개기관들은 정부당국의 승인없이 동업중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직업소개기관은 구직자로부터 직업알선료는 받지 못하고 대신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직업소개는 360개의 고용사무소와 60개의 전문직종고용사무소(기술, 회계, 금융, 컴퓨터, 문화산업직종, 商船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업안정사업의 또다른 기능은 실업자 또는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경력에 대한 상담제공이다. 이를 위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구직자모임(job club)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과 구직방법, 이력서 작성 등과 같이 구직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상호 교환토록 배려한다.

이밖에도 직업안정기관은 기업의 직업안정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 내 인사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 2) 노동공급 관련사업

### 가)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훈련과 재직근로자를 위한 사업내직업훈련 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고용훈련은 실업자 또는 개별근로자의 교육부족 및 지식부족을 직업훈련을 통하여 충족시킴으로써 일반교육체계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의 전통적인 직업관을 개선하는데 고용훈련이 이용되기도 한다.

고용훈련 참여자는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고용훈련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소요예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훈련 참여자는 하루에 239 SEK에서 564 SEK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평균적인 산업근로자는 시간당 81.60 SEK을 받고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재직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내직업훈련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크기는 훈련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시간당 50 SEK이다.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는 1993/1994년의 회계연도에 사업내직업훈련체제를 단순화하여 훈련비와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의 합계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AMS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이들의 향후 실업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훈련이 종료된 후 1년 이내라 할지라도 또다른 보충적인 훈련을 근로자에게 실시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나)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실업자의 광역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교통비, 취직수당, 이주비 등을 지급한다. 이중에서 교통비와 취직수당은 지역개발보조금을 받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가능하다. 지역개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근로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지만 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문화관련분야의 직장을 가진 근로자 또는 건설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비가 전액 지원된다.

한편 외국에서의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간에는 서로의 국가내에서의 직장탐색시 위와 같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협정이 맺어져 있다.

### 3) 노동수요 관련사업

#### 가)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실업급여 소진자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장기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시적이거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실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대부분 국영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그밖의 건설공사 등과 같은 사회하부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있다. 그러나 이외에 지방정부가 의료시설 및 행정관련 일, 학교와 탁아시설 등과 관련하

여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금수준 및 휴가일수는 동  
일업종의 기존 단체협약에 기준을 두고 정하여 진다. 그러나 고용보장법은  
이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3년에는 59,000명이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8,000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  
나 1991년부터 나타난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 7월에는 15,100명에 이르렀고,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서 AMS는 1992년 8월 약 60억 SEK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의 회계연도중  
37,000명에게 State Railways(SJ), National Maritime Administration,  
National Forest Enterprise 등과 같은 국영기업의 사업에 따른 단기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나)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의 대체고용보조금

이 제도는 1991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에 대해 또다른 근로자를 대체고용하였을 경우 대체고용 근로자에 대  
한 사회보장 각출금을 일부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사무소에 보고한 대체고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중 1일당  
475 SEK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실직자 채용보조금

채용보조금은 3개월 이상 실업중에 있던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지원된다.<sup>10)</sup> 이 때 사용자는 채용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6개월  
간 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AMS는 '현재 고용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도 지원이 가  
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

10) 18~25세 사이의 실업자는 1개월 이상 실업한 경우



#### 라) 자영업 보조금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6개월 동안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사무소는 이들을 위해 창업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 마) 고용개발

1993년 1월 1일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자는 대기기간 없이 즉시 이 고용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근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실업급여는 훈련장려금으로써 이해된다. 또 그 자는 공식적으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고용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비용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는 일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개발 프로그램 참여자로 대체할 수 없다. 고용개발 프로그램에 최저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부조(KAS)를 받는 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사무소는 이 프로그램하에서 일을 할당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참여자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희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고용개발 프로그램을 어떠한 종류의 직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지만 주로 임금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3년에 이 프로그램으로 약 2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보았다.

#### 바) 청소년고용프로그램

1980년대 이후로 일반학교는 16~17세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또는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의 소극적인 청소년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회사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고용토록 유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공공부문이 청소년 고용문제를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1991년 들어선 사회당정부는 다음 두가지의 적극적인 청소년 고용프로그램을 마련하

였다.

첫번째는 직장적응(Workplace Introduction Job) 프로그램으로써 이는 18세 이상의 청소년과 17세 이상 후기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에 들어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현장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임금의 일정부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청소년을 고용한 기간 중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대 60%를 임금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도제(Youth Trainingshi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용훈련(Employment training)의 현장 적용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목적은 18~25세의 청소년들과 후기중등교육을 마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현장실습과 직장체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청소년 도제는 여타의 고용훈련을 받지 못하여 적당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같이 다른 실업대책들이 충분히 청소년에게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이다.

청소년 도제일은 그러나 정규직은 아니어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 도제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이러한 도제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고용사무소에 매주 구직활동과 기타 구직 관련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IV-4> 스웨덴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의 내용

연 령	명 칭	지 원
17~18세	FOLLOW-UP 프로그램	· 학교로 하여금 청소년의 훈련참여 또는 학교출석을 유도
18~19세	직장적응 프로그램 (WORKPLACE INTRODUCTION JOB)	· 임금의 최대 60%까지 임금보조금으로 지급
18~25세	청소년 도제 (Y O U T H TRAINEESHIP)	· 18~19세는 1일당 239 SEK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 · 20~24세는 1일당 338 SEK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업급여 일액을 훈련장려금 으로 지급 ·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급

#### 사)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자가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임금보조금 수준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sup>11)</sup>

임금보조금 이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별 장애인 지원에 대한 장려금,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사용자가 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려금 그리고 장애인 창업장려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스웨덴의 공공회사인 Samhall AB社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1980년대에 70,000~75,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위에서 언급된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1992/93년 회계연도에는 62억 SEK이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되었으며 이외에 Samhall社에 45억 SEK을 임금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11) 장애인의 직무성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또는 장애인의 작업시설이 보통인의 직무수행과 비교하여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편리하게 구축되는 경우에 보통인과 차별하여 장애인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임금보조금 수준을 삭감하거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아) 직장복귀 프로그램

스웨덴의 사회보험사무소는 상병급여와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도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직장복귀서비스는 모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노동시장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사무소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노동시장위원회는 또한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 및 공공기관들에게 자문형식으로 근로생활서비스(working life service)라고 불리는 직장복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1/92년 회계연도중 1억4천 SEK에 달하는 근로생활서비스를 7,000명에게 제공하였고 이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장복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취업을 했거나 또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

#### 자)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AMS의 모든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은 스웨덴 영주권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스웨덴 이민국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의 경우에는 최소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에게는 그외에 특별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고등채용보조금(Higher recruitment subsidy)은 이민자가 임금전액을 받거나 또는 임금삭감없이 근로기간중에 스웨덴어를 배우는 경우에 그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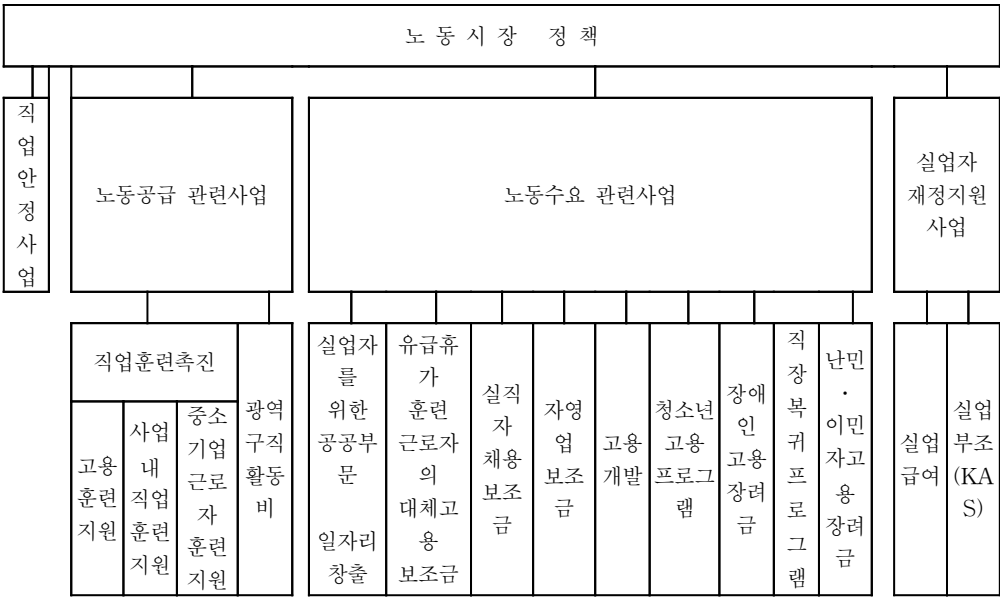
국가는 6개월동안 임금의 50~85%에 해당하는 고등채용보조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이민자가 특정한 전문분야에 일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직업분야에 전공어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12개월까지 연장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임금의 50%로 감소한다.

#### 4) 실업자 재정지원 사업

이밖에 실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로써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소진자 또는 실업기금 비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실업부조(KAS)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장 이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그림Ⅳ-2]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자료 : 유길상·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1996)

#### 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국회에서 1934년 국가지원의 임의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률 시행초기에는 임의의 고용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기금들이 발족되었으나 가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입자가 점차 늘기 시작하여 1940년말에는 14개 기금에 총 21만명이 가입하게 되었다.<sup>12)</sup>

12) 여기서 기금(FUND)이라 함은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서 법인체를 말한다.

특히 시행 2년후인 1937년에 고용보험의 혜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금과 가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40년대말에는 1백만명으로 가입자수가 증가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잠시 가입자수에 있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그 수가 약 2백만명선에 이르렀다.

1974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금가입자를 위해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업급여 자체가 납세의 대상이 되도록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 기금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다.

한편 1974년에 실업부조(KAS)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실업부조법(Cash Labour Market Assistance Act)이 시행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KAS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에 힘입어 기금가입자수는 1970년에 약 200만명에서 1979년에 약 3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8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5만명씩 증가하여 왔다.

#### 다. 실업급여

#####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40개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기금 가입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그러나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2)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기금가입자)가 실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

13) 스웨덴에서는 1997년 10월 현재 자영업자를 위해서 4개의 실업기금이 운영중에 있다.

경우에 지급한다.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가 규정하는 대로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된 자
- 실업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합한 일이나 고용훈련 또는 기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 실업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이하 기준기간)동안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함(자영업자의 경우 특정기금에 24개월 이상).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됨.
- 지난 12개월의 기준기간중 최소 8개월동안은 근로했어야 함.

그런데 위의 세 번째 요건인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피보험기간에 산입된다.

- 피보험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 과거 특정 기금의 피보험단위기간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sup>14)</sup>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일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고용프로그램 등에서의 참여자 훈련기간
  - 육아수당(parental allowance)<sup>15)</sup>을 지급받은 기간과 현역 의무복무기

---

14) 1994년 1월 1일 유럽경제협약(EEA)이 발효된 이후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이 협약에 조인한 국가의 시민에게도 개방되었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연합 국가에서의 근로기간은 이제 스웨덴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중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간

###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각 기금간의 차이가 있다. 1993년 7월부터 최대 실업급여일액은 564 SEK로 조정되었다(표 2 참조).

실업급여일액은 1997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직전 임금의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최대 실업급여일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금수급자는 이직전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으며 연금 또한 실업급여지급액만큼 공제되어 지급된다.

#### •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00일까지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55~64세의 가입자인 경우 최대 450일까지 지급한다.

#### •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5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4)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① 자발적 실업자

---

15) 육아수당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산모와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다. 여기에는 임신수당(pregnancy cash benefit), 출산수당(parent's cash benefit owing to children), 한시적인 육아수당(temporary parent cash benefit) 등이 있다.



- ② 적절한 사유없이 실업한 자
- ③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자
- ④ 적절한 일자리를 고용사무소로부터 알선받았지만 취업을 거부한 자
- ⑤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을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구인자와의 면접시 또는 그밖의 구직활동시 고의로 고용되지 않도록 행위하는 자

그러한 규칙들은 고용훈련, 고용개발 및 직장복귀프로그램 등에도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의 일시제한 요건은 KAS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의 요건 중 ②와 ④항에 대해 급여지급의 일시제한 기간은 45일이다.

최대 1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경우 급여지급의 일시제한 기간은 80일이다.

③과 ⑤항에 있어 급여의 일시제한 기간은 20일 또는 40일이며, 이 기간중 실업자가 일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노사분쟁중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노사분쟁이라 함은 직장폐쇄,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급여수급권의 제한에 대한 AMS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알선된 일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일이 피보험자가 이전에 종사했던 업무인지의 여부와 그밖의 몇가지 관련 요소들을 참고한다. 예컨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내 근로조건과 합치하는지, 노사분쟁이 있는지, 작업장이 근로감독상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만족하는지를 고려한다. 이 밖에 출퇴근시간, 비용, 가족 등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된다.

####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적절한 일을 거절하거나 실업자 자신에게 제시된 조치들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사무소는 실업기금측에 이를 보고한다. 고용사무소가 실업기금측 또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보낸 고용보험에 대한 이의신청건수중 약 85%가 실업급여 수급권 중지 또는 실업급여 신청 제한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툼은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1986~88년 사이와 같은 높은 노동력 수요시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의 이의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고, 1982~83년과 1991~93년의 기간처럼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5) 실업급여의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또는 KAS를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실업기금측이나 지역 KAS 사무소측이 지급된 실업급여를 실업자로부터 환급받아 국가에 반환한다.

국가반환 이외에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실업급여지급일은 실업급여 수급일중에서 감일(減日)할뿐만 아니라 실업기금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부정수급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 6) 보험료

실업기금의 소득은 국가보조금과 기금의 운영비와 형평요금(equalizing fee) 조달을 위해 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회비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현재 40개 기금의 평균회비는 월 507 SEK로 나타나 있다.

실업기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제일 비중이 큰 기금의 원천으로써 1996년 기금총액의 9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보조금 예산은 고용주稅(임금총액의 5.42%)와 기금과 기금이 국가에 납부하는 재원충당비(financing fee)로 마련된다. 국가보조금은 실업기금이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가입회원중 실업된 회원에게도 지급되는 모든 부가급여를 위해서도 쓰여진다. 실업기금은 1995년부터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회비로부터 3%를 각출하고 있다.

또한 형평요금(equalizing fee)을 각 기금에서 각출하여 특정 산출방식에 따른 기금간 운영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높은 실업률을 가진

특정 기금에 지원된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기금에 환속된다.

#### 7) 실업기금의 운영기관

고용보험은 독립법인인 40개(이중 4개는 자영업 실업기금)의 실업기금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금을 발족시킨 노동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기금은 AMS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동의없이 가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기금은 AMS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1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AMS는 기본적으로 실업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에 따라 AMS는 기금의 활동과 관련하여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해당 기금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AMS가 국가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급여가 부정으로 지급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지급된 급여는 AMS를 통하여 국가에 환수된다. 그런데 급여의 부정지급이 기금측에 그 책임이 있다면 해당 기금당국은 회원으로부터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금의 예산중 부정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 환수시킨다.

다른 조직이나 기금당국과 공동행동을 취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실업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의 공동조정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AMS의 사무국장이 각 기금 대표로 구성되는 고용보험대표회의의 의장 자격을 맡는다.

고용보험으로부터의 급여지급은 실업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KAS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 • AMS의 보험室

AMS의 보험실은 AMS가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기능의 책임부서이다. 자신들의 가입자에 대한 기금의 실업급여 지급을 충족하기 위

한 국가의 週 보조는 AMS의 보험국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 및 훈련 이외에 보험관련 연구개발은 AMS의 보험실 업무의 일부이다. AMS의 보험실은 기금의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AMS와 고용사무소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무편람중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한다. 정보 및 감사실은 보험관련 문제를 다루는 직원을 위한 회의와 교육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AMS의 감독기능은 또한 실업급여의 실제 신청자를 다루는 기금측의 감사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매년 40여개의 기금들에 대한 총실업급여 신청자수중 약 1~2%는 AMS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

AMS의 보험국은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연차총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 8) 심사청구

고용보험기금과 KAS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청구한 심사문제에 대한 기금측의 심사건수는 1975~83년 기간중 매년 증가해 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금의 가입자와 KAS 수급자들은 기금측 또는 지역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가진 사람은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라. 실업부조(KAS)

##### 1) 실업부조(KAS)의 적용범위

KAS는 20~64세의 피보험자가 아닌자와 고용보험기금에 12개월 미만동안 가입해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교육 또는 훈련을 이제 막 마친 자와 60세가 된 기금 가입자 그리고 최대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450일을 넘겨 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KAS가 지급된다.

## 2) 수급요건

KAS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MS가 규정하는 대로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된 자
- 실업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실직전 12개월중 최저 5개월 이상 근로했어야 하고 이 5개월 이상의 기간중 최저 75시간 이상을 근로했어야 함.
- 지난 10개월중 최저 90일동안 근로하였거나 또는 고용사무소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어야 함.
- 훈련비가 지원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1년의 전일제훈련에 참여하는 자

## 3) KAS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KAS는 1997년 12월 29일부터 하루에 240 SEK이 지급되며 과세대상이 된다. 단, KAS는 1주 5일 동안만 지급된다.

5일의 대기기간 이후 KAS는 20~25세인 실업자가 최대 150일, 55~59세는 최대 300일 그리고 60~64세는 최대 450일까지 지급된다.

## 4) KAS의 운영기관

KAS의 운영은 AMS와 지방노동위원회(County Labor Board)가 하고 있다. 구직자는 고용보험과 KAS에 대해 고용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자는 급여의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기금이나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 마. 실업급여 및 현금지원(KAS) 관련 통계

스웨덴의 고용보험기금의 연평균 회원수는 1992년 현재 3,668천명으로써 경제활동인구(1992년 4,534천명)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은 8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업기금 회원수 대비 급여수급자 비율은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던 1991년부터 높아져 1993년 현재에는 8.7%로 나타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1991~92년 기간중에는 36만명에서 56만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그 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여 약 81만7,300명에 이르고 있다<sup>16)</sup>.

KAS의 경우 1991~92년 기간중에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해 KAS의 수급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 13만2천8백명의 실업자가 KAS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 1인당 평균 급여수급일수는 실업급여는 1992년 현재 89일이었고, KAS는 66일이었다.

일평균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993년 하반기에 459.29 SEK이었고, KAS의 경우에는 192.55 SEK로 나타났다.

<표IV-5> 고용보험 적용 및 지급현황

(단위 : 명, %, SEK)

---

16)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그 보다는 훨씬 적어서 1983~87년중에는 매년 33~34만명선이었고, 1988년에는 이보다 약간 감소한 31만8천명이었다. 1990년 들어 그 수는 26만2천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17) 실업부조(KAS) 수급자수는 1984~199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198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18~19세의 청소년을 위한 '직장적응(Workplace Introduction Job)' 프로그램에서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KAS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1991	1992	1993
실업보험기금의 연평균 회원수		3,575,262	3,668,424	*
월평균 구직자수		459,400	692,500	908,000
실업자로 남아 있는 월평균 실업자수		137,700	252,400	382,400
월말 기준 월 실업기금 회원수		114,800	214,500	326,100
월 KAS 수급 실업자		20,500	38,200	*
총 기금 회원수 대비 급여수급자 비율		3.2%	5.9%	8.7%
급여수급일수	실업급여	26.9백만일	50.3백만일	84.7백만일**
	KAS	4백만일	7.9백만일	10.1백만일**
1인당 급여수급일수	실업급여	75일	89일	*
	KAS	57일	66일	*
실업급여 지급액		11,986백만	24,071백만	40,308백만**
KAS 지급액		713백만	1,446백만	1,939백만**
재원충당비(Financing fee)		549백만	1,190백만	1,230백만

주 : \*) 1994년 2월 현재 1993년 수치를 알 수 없음.

\*\*) 이 수치는 근로생활개발(ALU)을 포함

<표IV-6>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KAS)의 최대 급여일액과 일평균 급여액

(단위 : SEK)

		1991	1992	1993 1월~6월	1993 7월~12월	1994
최대 급여일액	실업급여	543	564	598	564	564
	KAS	191	198	210	198	245
일평균 급여액	실업급여	455.2	478.16	498.43	459.29	-
	KAS	174.98	183.78	192.55		-

#### 4. 미국

##### 가. 미국 실업보험의 연혁

1935년 연방의 실업보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의 실업보험에 관한 제

도적 장치는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말부터 여러 주에서 실업보험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는 실업보험의 도입으로 자신의 주가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손실될 것을 우려하여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입법화하지 못했다. 이후 1932년 처음으로 위스콘신 주가 실업보험법을 입법화했고, 1936년부터 이 법이 발효되었다. 위스콘신의 실업보험법은 고용주만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형태였고 이것은 이후 연방의 실업보험법의 제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에서도 1910년대 말부터 실업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1920년대말 공황 등의 경제적 상황 하에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1934년 와그너-루이스법안이 상정되었고, 루즈벨트대통령의 지시로 경제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실업보험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연방정부의 역할이었는데 경제보장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정부가 그러한 기준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혼합형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연방-주의 공동운영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경제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법 초안은 1935년 초 대통령에 의해 제안되어 1935년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1935년 8월 14일에 발효되었다. 당시 제정된 연방실업법의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실업보험의 제정은 8일 이상의 근로자를 20주 이상 고용한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충당되었고, 영세기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정부부처 공무원, 비영리기관종사자, 가사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주의 실업보험법의 연방법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연방세의 90% 또는 과세대상 급여의 2.7%까지를 주의 실업보험세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의 실업보험법이 발효한 후에도 각 주에서 실업보험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지만,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의 입법이 완료되었다. 이후 실업보험은 수혜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대를 이루었는데, 1970년대 전까지 실업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는 적용기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별입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피고용자나 퇴역군인의 적용범위를 확



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56년에는 실업보험 적용 고용주가 8인에서 4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로 확대되었고, 1958년 퇴역군인실업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실업안정법 개정으로 연방 실업보험법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적용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로 대폭 확대되었고, 분기간 급여 지급액도 1,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적용제외 대상자였던 비영리기관 종사자, 정부부처 공무원, 특정 서비스직, 해외투자 미국기업 종사자 등이 적용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실업보험의 확대와 함께 연방실업세율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1979년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었다.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하여 오던 실업보험제도는 1970년대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재정문제가 심화되면서 80년대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되었을뿐 아니라, 실업보험제도가 단순히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에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병행하는 제도로 변화될 것을 요구했다.

1981년 종합예산 조정법의 입법 이후 구직활동이나 재훈련 등이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포함되었으며, 직업훈련이 강화되었다. 또한 재취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시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해 미국에서 실업보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적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는 실직 근로자와 고용주의 금전적 동기유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실업보험제도와 기존의 직업안정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각 주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보험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나. 실업보험

미국의 실업보험(Unemployment Compensation)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실업보험이 포함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주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실업보험은 실업의 확장효과를 막기 위해 일차적인 경제적 대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격의 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특히 식료

품, 주거, 의복 등)의 구입을 보장한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일시적인 소득 원조로써 실업보험은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실업보험은 연방실업보험법(Federal Unemployment Act; FUA)을 통해 연방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을 통해 조세상쇄를 받아 연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연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 주는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가지고 주법(state law)으로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연방은 각 주에서 실업보험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나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고용주에게 연방실업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과 주의 연합 운영방식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근로자	11990만명
○ 모든 프로그램의 수급자	770만명
○ 적용 고용주	630만명
○ 모든 프로그램의 지급액	214억\$
○ 운영비	35억\$
○ 주정부의 실업급여 지출	24억\$
○ 연방실업세	62억\$
○ 주 임금세	227억\$

#### 1) 적용대상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은 상공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연방실업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매 20주마다 하루 이상을 고용했거나 사분기당 총임금(payroll)을 1,500달러 이상 지급한 고용주는 연방실업보험법에 적용이 된다.

도입 초기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연방실업법

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으나 1976년 이후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의 근로자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대부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 공직자, 입법의원, 사법부 공직자, 주 방위군, 4인 미만을 고용한 비영리조직은 실업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종교단체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10인 이상 고용된 농장에서 20주 내에 2만달러 이상의 총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농업근로자나 분기당 1,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실업보험에 적용된다. 또한 모든 주에서 학생은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철도근로자는 분리된 연방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며 군 퇴역자와 연방정부 공무원도 연방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의 실업급여는 연방의 기금에서 지출되고 급여의 지급은 주정부에서 운영한다.

## 2)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업한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주의 공공고용국에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각 주의 주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만약 실업이 자발적인 것이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급여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실업 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준시간(based period)과 기준기간 내의 임금기준이 있다. 실업급여수급권리는 기준시간 동안 근로여부가 확인되면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주어진다. 기준기간이란 실업보험을 신청하기 전 5사분기 중 첫 4사분기를 말한다. 주에 따라 기준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 이상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기도 하고, 최소 근로시간을 정하여 이 이상 근로했을 경우 급여자격을 주기도 한다.

몇몇 주에서는 자격요건 중에 기준기간 내의 최소 소득을 정하는데 주마다 적용되는 최소소득은 1,000~2,964달러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최소소득액을 주 실업급여액의 일정배수로 정하기도 한다. 그

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소득 외에 한 사분기 이상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소득이 가장 높았던 사분기(고소득 사분기) 외의 한 사분기에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기준기간의 임금 총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절반 가량의 주들이 기준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의 고소득 사분기 임금의 일정배수로 임금총액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평균 또는 최소 주당 임금 조건과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정 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인 이직, 과실에 의한 실업,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알선을 거절한 경우, 노동분쟁으로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별로 결격사유에 따라 급여제공이 일정기간동안 연기되기도 하고, 급여액이 감액되기도 하고,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실업세법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근로기준에 미달인 일자리를 알선 받아서 거절한 경우,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거나 합법적인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요구받아서 고용기회를 거절한 것이라면 급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신청자가 완전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두고 있는데 3개 주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될 경우 대기기간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한다.

### 3) 재정마련

#### 가) 연방정부의 연방실업세

실업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연방실업세법에 의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실업세로 조달되며, 징수된 세금은 연방통합예산에 속하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적립된다. 실업보험기금은 50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구, 버진군도, 푸에르토리코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53개의 기금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1985년부터 연방실업세법에 적용되는 모든 고용주는 일인 피고용자의 연간 임금 7,000달러까지에 대해서 6.2%의 연방실업세를 낸다. 그러나 이러한 연

방실업세에서 각 고용주가 해당 주에 내는 실업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임금세 (payroll tax)를 공제받는다. 이러한 세금공제는 고용주가 내는 세금 절대액에는 상관없이 실업세율 6.2% 중 5.4%를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에 임금세를 내는 고용주는 0.8% 또는 연간 피고용자 1인당 최대 \$54의 연방실업세를 낸다. 현재 연방실업세율은 6.2%인데 이 세율은 2008년부터 6.0%로 떨어질 계획이다.

공제를 제외한 연방실업세는 실업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과 주의 관리 운영비 전액, 연장급여 지급시 연방정부 분담금인 연장급여액의 50%,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한 주정부에 대한 대출, 연방의 보조 프로그램이나 비상프로그램중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노동 교환서비스, 퇴역군인이나 장애 퇴역군인의 고용과 훈련 서비스, 일부 노동시장 정보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된다.

#### 나) 주정부의 임금세

주정부는 3개의 주를 제외하면 고용주의 기여금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실업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에 대해 5.4%의 임금세를 부과하는 표준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각 고용주의 경험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모든 주에서 경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험율의 산정방식은 각 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업을 경험한 고용주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경험률을 계산한다. 연방법에 의하면 경험율이 낮은 고용주에 대해 부과적인 실업세 공제를 허용하는데, 1984년 이전까지는 경험율이 2.7% 이하인 경우에 부가적인 공제를 허용하였지만, 1985년 1월 1일 이후에는 5.4% 이하인 경우에 부가적인 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고용주의 기여율은 실업보험기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재원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50개 주에서는 FUTA가 제시한 7,000달러 보다 높은 과세 기준임금을 채용하였다. 1998년 하와이의 임금기준은 최대치인 26,400달러였다. 모든 주에서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지불한, 주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의 임금에 대

해 조세를 낸다. 따라서 주마다 과세하는 임금기준과 과세율이 다양하고, 실제 과세율도 주와 주 안의 개별 고용주마다 매우 다르다.

주정부에서 걷어 들인 세금은 연방 재무성 내에 있는 UTF 계좌에 예금되며 급여지불에 필요한 만큼 인출된다. 1997년 12월까지 총 연금 신용기금구조는 대략 440억달러에 이른다

#### 4) 실업급여

##### 가) 정규 실업급여

주마다 실업급여 수준이 다른데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방법은 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실업자가 실업 전 받은 임금수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주들은 급여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실업자의 실업 전 주급의 일정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당 급여액 상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약 4분의 3정도의 주들은 기준 기간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기를 정해서 그 기간의 임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급여산정식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분기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데 이것은 그 기간이 임금이 전시간제 고용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주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임금에 가중치를 두어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여 저소득자의 경우 임금비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6개 주들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하고, 5개주는 최근 일정기간동안 평균 주급을 기본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모든 주들은 실업급여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업급여의 상한선은 일정액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유동적인 상한선으로 정하기도 한다. 대다수인 35개주가 유동적인 상한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동적인 상한선은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에 따라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실업급여의 주당 급여액 상한선은 실업보험 적용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주당 급여액의 상한선은 평균 주급의 49.5~

70%이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초기에는 급여 지급기간이 13주에서 16주였으나 현재 연방정부가 정하고 있는 법정 급여기간은 급여 연도 내에 26주까지이다.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러한 법정 급여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수급자들에게 26주의 급여기간을 적용하는 주는 9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주들은 급여 신청자의 과거 임금수준, 고용기간에 따라 다른 급여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급여기간 외에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두는데 총급여액은 기준기간 동안의 임금소득의 일부분이나 주당 급여액의 일정배수 중 더 적은 것으로 선택하여 총급여액을 제한한다.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주가 실업급여로 피부양자 수당을 지급한다. 피부양자 기준에 있어서는 13개 주 모두가 아동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이 중 9개 주가 미취업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3개주는 그 이외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피부양자 수당은 해당 피부양자에 대해서 동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주마다 수당의 액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0달러이나 그 이하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근로를 통한 소득이 생길 경우라도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한다. 여기서 일정 기준은 주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주에서는 수급자가 정규 고용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보다 적고, 실업보험으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고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업급여액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 나) 연장급여

실업급여의 급여기간은 26주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업율이 높은 주에서나 또는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율이 높은 시기에 있어서는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별 주에서는 실업율의 13주 동안 연속하여 5% 이상이고, 현 실업율이 지난 2년간의 실업율보다 20%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실업율이 6% 이상이지만 지난 2년간 동일기간의 실업율보다 2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주에서 판단하여 연장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연장급여는 최대한 13주까지 지급하며 따라서 실업급여는 연장급여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39주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 급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씩 부담한다.

이러한 연장급여에 있어서 연장급여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실업보호 대책으로 만들고자 1992년 연방실업보상법을 개정하여 연장급여 적용기준을 주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계절조정실업율을 고려한 최근 3개월 동안 총실업율이 6.5% 이상이고 지난 2년간 동일기간 실업율보다 10% 이상일 때 급여기간을 13주 연장하여 지급하며, 총실업율이 8% 이상이고 지난 2년간 동일기간의 실업율보다 10% 이상일 경우 연장급여를 7주 더 연장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최고 20주까지 연장이 되며 총실업급여기간은 46주까지이다.

이 외에 국가적인 경기침체기여서 모든 주가 높은 실업율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방기금의 보충 급여 프로그램으로 연장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은 1970년 동안 두 차례, 1980년 초기에 한 차례,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1991년 11월과 1994년 4월 사이에 적용되었었다.

#### 5) 운영

미국의 실업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한다. 실업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개별 주의 실업보험이 연방정부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주의 성과를 점검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정하고, 특정 경우에 대해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을 할당하고, 주정부가 임금세를 통해 예금한 UTF의 운영을 담당한다. 각 주정부는 개별적인 실업보험체계를 기획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여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기준의 설정과 심사, 급여의 지급을 담당하고, 임금세를 정하고 걷는 일을 한다.



## 다. 관련제도

### 1) 직업훈련

미국에서는 실업보험 외에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과 고용관련 프로그램들이 연방과 주,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파트너쉽(Job Training Partnership)과 복지및취업파트너쉽(Welfare-to-Work Partnership) 등이 있다.

직업훈련파트너쉽 프로그램은 1982년 입법된 직업훈련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개별 주에서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현재 모든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JTPA 지원금은 1/3은 각 주의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할당되고, 1/3은 각 주의 민간부문 경제활동인구의 4.5%를 넘는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1/3은 해당 주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할당되는 지원금은 주정부가 22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14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프로그램과 상시 프로그램,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네 가지 종류의 직업훈련을 모두 제공해야만 지급된다. 22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실업급여 수급자, 식품교환권(Food stamp) 또는 요보호가정 일시부조와 같은 공적부조 수급자 수급자 및 취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현장교육,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기본적인 기술훈련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21세를 대상으로 하는 하계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상시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내 또는 교외에서 1년의 기간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장폐쇄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실업자

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 및 기술훈련 등으로 조기에 개입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연방정부의 JTPA 지원금을 받는 주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실업급여 수급자, 공적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취업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학업중퇴자,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계층, 미혼모나 임산부, 장애인, 노인, 퇴역군인, 전과자, 약물남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복지 협력 프로그램은 복지수혜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미국의 복지개혁과 더불어 도입된 것으로 연방노동성의 지원금으로 복지수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복지수혜자를 고용을 하기 원하는 기업과 연결시키기 위한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취업-복지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복지수혜자를 모집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방식과 민간영리 혹은 비영리기관이 정부나 기업과 계약을 맺어 복지수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 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업이 복지수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방을 이러한 기업의 복지수혜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수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세를 면제해주거나 주가 임금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기존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재원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혜자가 취업으로 공적부조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후 1년 이상 의료보호와 아동양육비 보조를 연장하여 지급하여 복지수혜자의 취업을 장려한다.

## 2) 공적부조

미국의 공적부조는 의료부조를 포함하여 총 12가지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실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요보호가정 일시보호와 식품영양부조인 식품교환권(Food stamp), 여성·육아·아동 식품보조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가구 광열비부조, 의료부조, 주택부조인 공공주택 프로그램, section 8 프로그램, 특별 요보호자 부조, 또한 일반부조, 소득세 공제의 11가지가 있다.

#### 가) 요보호가정 일시보호

요보호가정 일시보호는 기존의 AFDC, 긴급구조(Emergency Assistance), 고용기회 및 기초기술훈련(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JOBS)을 통합한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액보조금(Block Grants for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수급자격은 연방정부의 틀 안에서 주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AFDC 수급자였던 부모가 사망, 가출, 정신나 신체적 무능력자인 경우, 또는 부모의 실업으로 인해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주에서 정한 욕구 기준액(need standard)의 185% 이하이고 재산액이 1,500달러 이하의 가정을 수급자로 한다. 수혜를 받는 가정의 부모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준 시간만큼 근로를 하거나 직업교육 및 관련활동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TANF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AFDC와는 달리 TANF는 평생동안 최대 5년까지 TANF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영구적으로 공적부조 수혜자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취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에는 연방에서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을 결정하였지만 그러한 권한이 주 정부로 이양되어 주마다 급여 형태와 수준이 다른데 대체로 기존의 AFDC와 유사하며 현금, 현물, 직업훈련서비스가 있다.

#### 나) 식품교환권

식품교환권은 가구 총소득이 연방정부의 빈곤선의 130% 이하이고, 가구의 가처분 자산이 2,000달러 이하이며, 가구 세후 소득이 연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빈곤선보다 작은 가구에 대해 지급된다. 수급기간은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수급자격을 재확인하여 수급자격 확인서를 재발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급기간은 부양아동이 없고 18세 이상 50세 이하인 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급기간이 제한된다.

다) 여성·유아·아동 식품보조 프로그램(WIC)

임산부, 출산부, 유아 및 5세 미만의 아동이 전문의료인의 ‘영양상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가구소득이 연방정부의 빈곤선의 185% 이하인 경우 해당 주의 합법적인 거주자에 한하여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WIC 증서를 지급한다. WIC 증서는 지정된 식품소매점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라) 학교급식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각 학교와 아동이설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의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급식에 대한 개인 부담금은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연방빈곤선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무료로, 130~185%인 가정은 40센트 이하의 가격으로, 이외 학생은 전액을 지불하여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회 급식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은 무료급식인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거나 전액을 받는 급식인지에 따라 정액을 보조한다.

마) 의료부조(Medicaid)

의료부조는 현 공적부조 프로그램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주마다 자격조건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소득, 자산, 가용자원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TANF 수급자,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 미만인 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18세 이하의 아동 중 가구소득이 연방빈곤 이하인 가정의 아동, 사회보장법의 입양 및 대리양육지원금 수급자, 메디케어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부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부조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받은 의료서비스까지 소급 지급한다. 주가 운영하는 의료부조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 서비스는 병원 입원·외래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 지방보건소

서비스, 간호조산원 서비스, 산전관리 서비스, 임상간호사 서비스, 일반의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아동예방접종 서비스, 실험실 검사 및 X선, 요양시설 서비스, 연방이 승인한 보건센터 서비스, 2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서비스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 연방정부는 34가지 부가서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료부조의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하며, 의료부조의 재원도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연방이 50%를 보조하며, 의료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해당 주의 1인당 소득과 전국 1인당 소득에 대해 50% 이상, 83%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바) 공공주택부조

공공주택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 공공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공공주택 프로그램의 수급 신청은 지방의 공공주택사무소로 하고, 신청자는 연간소득이 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여야 한다.

#### 사) Section 8 프로그램

Section 8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증서나 임대권리증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민간소유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 기준이 있으며 자신의 조정 월소득의 30%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신청자는 연간소득이 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여야 한다.

#### 아) 특별 요보호자 부조

특별 요보호자 부조 프로그램은 노숙자에게 주택임대를 위한 주택임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오래된 호텔이나 학교, 연방정부 소유의 잉여 건물 및 토

지를 노숙자를 위한 거처로 제공한다.

#### 자) 저소득가족 광열비 부조

저소득가족 광열비 부조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정책보조금으로 각 주가 운영하는 정책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50% 미만이거나 해당 주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에 주택 냉·난방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보조금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택보수 비용으로 일정부분 사용될 수 있다.

#### 차) 일반부조

일반부조제도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거나 공적부조 수혜자 중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자나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나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칭도 서로 다르며 자격요건, 급여 수준과 종류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상이하다.

#### 카)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 제도는 연방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에는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1978년 영구적인 제도가 되었다. 소득세 공제 대상자는 피부양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족 중 근로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이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세금의 액수가 소득세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소득세 공제액은 가구의 소득, 피부양아동의 수, 과세대상인 사회보장급여나 실업급여 등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 수정조정 총소득에 따라 다르다. 특히, 피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공제율 적용한도, 공제 한계율, 최대 공제액, 등이 달라진다.

<표 IV-7>주 실업보험법(1998년 7월 5일 현재)

주	급여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근로자당 근로시간/총 임금액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기준임금 또는고용 (주 급여 양의일정배 수또는 지정액)	대 기 기 간 (주)	주 급여양의 계산 (고소득분기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총실업에 대한 주급여양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최소	최대		기본기간 급여의 비율	총실업 급여 기간(주)			
								최소	최대		
Ala.	hqw의 1- 1/2배	0	고소득2사분기 평균의 1/24	\$45	\$190	\$15	1/3	15+	26	20주	\$8,000
Alaska	\$1,000; 2사분기의 임금	1	한해 임금의 4.4-0.9%와 부양가족당 \$24씩 \$72까지추가	44 -68	248 -320	\$50 이상 소득의 1/4	hqw에 따라 가중치를 준 bpw	16	26	anytime	24,100
Ariz	hqw의 1- 1/2배; 고소득분기의 \$1,000	1	1/25	40	195	\$30	1/3	12+	26	20주	7,000
Ark.	wba의 27배; 두 사분기의 임금	1	주aww의 66(2/3)%까지 의 1/26	53	294	2/5	1/3	9	26	10일	9,000
Calif.	고소득분기의 \$1,300 또는 기준기간 임금이 고소득분기의 1-1/4인 고소득분기의 \$900	1	1/23-1/33	40	230	\$25나 임금의 25%중 큰 쪽	1/2	14+	26	\$100이상인 사분기	7,000
Colo	40	1	신청자의 최고소득 2사분기의 1/26의 60%에서 기준기간임금 의 1/52의 50%까지	25	314	wba의 1/4	1/3	13+	26	anytime	10,000
Conn.	40	0	고소득 2사분기의 1/26에서 주aww의 60%와 부양가족당 \$10의 합까지, 주급여양의 1/2나부양가족 5인까지	15 -25	362 -412	임금의 1/3	uniform	26	26	20주	13,000
Del.	36	0	?	20	300	\$10과 wba의 30% 중 큰 쪽	1/2	24	26	20주	8,500

주	급여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근로자당 근로시간/총 임금액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기준임금 또는 고용 (주 급여 양의 일정 배수 또는 지정액)	대기 기간 (주)	주 급여양의 계산 (상위사분위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총실업에 대한 주 급여양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최소	최대		기본기간 급여의 비율	총실업 급여기간 (주)	최소		
D.C.	hqw의 1- 1/2 배; \$1,950이상;한 사 분 기 에 \$1,300	1	주aww의 50%까지의 1/26	\$50	\$309	임금의 1/5	1/2	20	26	anytime	9,000
Fla	hqw의 1-1/2 배; 고소득분 기의 \$3,400	1	1/26	32	275	8× 연방 최 소 시급	25%	26	26	20주	7,000
Ga.	hqw의 150%, 2사분기의 임 금	0	고소득 2사분 기의 1/48	39	244	\$30	1/4	9	26	20주	8,500
Ha waii	26; 2사분기의 임금	1	주 a w w 의 7 0 % 까 지 1/21	5	356	\$50	uniform	26	26	anytime	26,400
Ida ho	hqw의1- 1/4 배; 최저액보 다 많음 한사분기의 기 준임금; 두사분기의 임 금	1	주 a w w 의 6 0 % 까 지 의 1/26	51	273	wba의 1/2	hqw에 따라 가중치를 준 bpw	10	26	20주 또는 분기에 \$1,500	23,000
Ill.	\$1,600; 고소득분기 외 의 \$440	1	고소득 2사분 기의 신청자 a w w 의 49.5%, 주 qww의 49.5%까지	51	269 -355	wba의 1/2	uniform	26	26	20주	9,000
Ind.	주 급여액의 1-1/4; \$2,750 이상; 지난2사 분기 동안 \$1,650	1	고소득 사분 기 내 첫 \$2,000의 5% 이외 고소득 사분기 임금 의 4%	7	244	\$3또는 기준기 간 고 용자의 wba의 30%중 큰쪽	28%	8+	26	20주	7,000
Iow a	주 급여액의 1-1/4;	0	?	37-4 5	251 -307	wba의 1/4	1/3	7+	26	20주	15,700
Kan s.	30; 2사분기의 임금	1	hqw의 4.25% 주 aww의 60%까지	73	292	wba의 25%	1/3	10	26	20주	8,000
Ky.	1-1/2×주 급여 액; 8×지난 2 사 분 기 의 wba; 한사분기 내의 \$750, 그 리고 다른 사 분기의 \$750	0	b p w 의 1.185%에서 주 aww의 55%까지	22	268	임금의 1/5	1/3	15	26	20주	8,000
La.	\$1,200; 1-1/2×hqw	1	4 사 분 기 의 1/25	\$10	\$215	중dm1 1/2 또는 \$50 이하	27%	26	26	20주	\$7,000



주	기준임금 또는 고용 (주 급여량의 일정배수 또는 지정액)	대기 기간 (주)	주 급여량의 계산 (상위사분위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급여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 근로자당 근로시간/ 총임금액 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총실업에 대한 주 급여량			기본 기간 급여 의 비율	총실업 급여기간 (주)			
				최소	최대			최소	최대		
Maine	2×각 2사분 기의 연간 aww & 6× 기준기간 내 의 연간 aww	1	1주 aww이 52%까지의 1/22+2wba 의 1/2까지 부양가족당 \$10	37 -55	227 -340	\$25	1/2	26	26	20주	7,000
Md.	1-1/2×hqw; 한 사분기의 \$576.01; 2사분기의 임 금	0	1/24+\$40까 지 부양가족 당 \$8	25 -33	250	\$70	unifor m	26	26	anytime	8,500
Mass.	30; \$2,000이 상	1	주 awwdm; 57.5%까지 의 1/21-1/26+ wba의 1/2 까지 부양가 족당 \$25	14 -31	382 -573	wba의 1/3	36%	10 -30	30	13주	10,800
Mich.	주 최소 시급 × 30시간의 고 용	0	신청자 세후 소득의 70%. 최대 주 a w w 의 53%까지	87	300	-	고용 된 wks의 3/4	15	26	20주 또는 CY동안 \$1,000	9,500
Minn.	1-1/4×hqw, 고소득기간에 \$1,000이상	1	1/26	39	331	\$50과 임금의 35%중 큰쪽	1/3	10+	26	20주	17,200
Miss.	40; 한 사분 기의 \$780. 2사분기의 임 금	1	1/26	30	190	\$40	1/3	13+	26	20주	7,000
Mo.	1-1/2×hqw; 한 사분기의 \$1,000; 2사분기의 임 금	1	4.0%	45	205	\$20	1/3	11+	26	20주	8,500
Mont.	1-1/2×hqw; 기준기간 내 의 aww의 7% 또는 aww의 50%	1	기준기간 임 금의 1%EH 는 구 aww 의 60%까지 의 고소득 2 사 분 기 의 1.9%	61	246	wba의 1/4 이상인 소득의 1/2	hqw에 따라 가중 치를 둔 bpw	8	26	현 또는 지난해동 안 \$1,000	16,500
Neb.	\$1,200; 각 2사분기의 \$400	1	1/20-1/24	20	184	wba의 1/2	1/3	20	26	20주	7,000

주	급여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 근로자당 근로시간/총 임금액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기준임금 또는 고용 (주 급여량의 일정배수 또는 지정액)	대기 기간 (주)	주 급여량의 계산 (상위사분위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총실업에 대한 주 급여량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최소	최대		기본기간 급여의 비율	총실업 급여기간 (주)			
								최소	최대		
Nev	1-1/2×hqw	0	구 aww의 50%까지의 1/25	16	267	임금 의 1/4	1/3	12+	26	사분기에 \$225	18,000
N.H.	\$2,800; 각 2갑사분 의 \$1,200	0	연간 임금의 1.0%-1.1%	32	275	wba 의 30%	uniform	26	26	20주	8,000
N.J.	aww 의 20%에 고 용 된 20wks ;또는 12× aww	1	신청자 aww의 60% 또는 주 aww 56-2/3%까 지의 d.a.	60	390	\$5와 wba 의 1/5인 큰 쪽	고용된 주의 3/4	15	26	한해 \$1,000	19,300
N.Me x.	hqw 의 1-1/4	1	1/26; 주 aww의 50%의 10% 이하	44	224	wba 의 1/5	3/5	19	26	20주 또는 \$450인 사분기	14,700
N.Y.	고용된 20 주	1	신청자 aww의 50%	40	300	-	uniform	26	26	\$300인 사분기	7,000
N.C.	6×주 aww	1	주 aww의 66-2/3%까 지의 고소득 기간의 1/26	25	322	고소 등기 간 내 aww 의 10%	hqw에따 라 가중치를 둔 bpw	13-26	26	20주	12,600
N.Dak	hqw 의 1-1/2	1	고소득 2사분기의 1/65 ; 주 aww의 60%까지의 3사분기의 총임금의 1/2	43	271	wba 의 1/5	hqw에따 라 가중치를 둔 bpw	12	26	20주	14,800
Chio	매주 주 aww 의 27.5%의 임 금을 받은 20 주	1	신청자 aww의 1/2+신청자 의 수와 부엌가족 수에 따른 \$1-!83까지 의 d.a.	66	267-358	\$100	20×wba ; 20주 이상의 각 자격주의 wba	20	26	20주	9,000
Okla.	\$1,500 과 hqw 의 1-1/2; \$11,400	1	1/23	16	262	wba 의 1/3	-	20+	26	20주	11,400
Oreg.	1-1/2×hqw; 기준 기간 내 \$1,000또는 고용시간50 0시간 이상	1	주 aww의 64%까지의 hpw의 1.25%	81	346	wba 의 1/3	1/3	4+	26	18주 또는 \$225인 사분기	21,000

주	급여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 근로자당 근로시간/ 총임금액 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기준임금 또는 고용 (주급여양의 일정배수 또는지정액)	대기 기간 (주)	주 급여양의 계산 (상위사분위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총실업에 대한 주 급여양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최소	최대		기본 기간 급여의 비율	총실업 급여기 간 (주)	최소		
Pa.	37+-40; 고소득기간의 \$800과 기준 기간 동안 \$1,320; 고 소득 기 간 이외의 hqw 의 20%이상	1	주 aww의 66-2/3%까지 의 1/23-1/25+부 양가족 1명에 \$5; 2명부터 \$3	35 -40	375 -383	\$6 또는 wba의 40%중 큰쪽	최소16 주에서 최대 18주의 공제	16	26	anytime	8,000
P.R.	\$280 이상인 40×wba; 1 사 분 기 의 \$75 ; 2사분기의 임금	1	1/11-1/26; 주 aww의 50%까지	7	133	wba	unifor m	26	26	anytime	7,000
R.I.	-	1	주 aww의 47%까지의 hqw의 4.6%+\$10과 부양가족 5명까지의 각 부양가족당 급여율의 5%중 큰 쪽	47 -97	364 -455	wba의 1/5	36%	15+	26	anytime	18,200
S.C.	1-1/2×hqw; \$900이상 1 사 분 기 의 \$540	1	주 aww의 66-2/3%까지 의 1/26	20	238	wba의 1/4	1/3	15	26	20주	7,000
S.Dak.	고소득기간의 \$728; 20×고 소득 기 간 이외의 wba	1	주 aww의 50%까지의 1/26	28	203	\$25이 상의 임금의 14	1/3	15+	26	20주	\$7,000
Tenn.	40; 고소득 2사분 기의 \$780.01	1	고소득 2t분기 평균의 1/26	30	255	\$50과 wba의 1/4 중 큰 쪽	1/4	12+	26	20주	7,000
Tex.	37×wba	1	1/25	46	280	\$5과 wba의 1 1/4 중 큰 쪽	27%	9+	26	20주	9,000
Utah	1-1/2×hqw	1	FY 주급의 주 보장 평균의 60%까지의 1/26	17	284	wba의 3/10	27%	10	26	현 CQ 또는 지난 CY동안 \$140	18,500
Vt.	한 사분기의 \$1,299; 총 고 소득 임금의 40%인 기준 기간 임금	1	-	40	275	\$40과 wba의 30% 중 큰 쪽	unifor m	26	26	20주	8,000

주	급여									적용범위 기업규모 (한 근로자당 근로시간/ 총임금액의 규모)	세금 (1998년 조세부가 임금기준)
	기준임금 또는 고용 (주 급여량의 일정배수 또는 지정액)	대기 기간 (주)	주 급여량의 계산 (상위사분위 소득의 일부 또는지정액)	총실업에 대한 주 급여량		무시 소득	52주 기간내 지속기간				
				최 소	최 대		기본기 간의 급여의 비율	총실업 급여기간 (주)			
								최 소	최 대		
Va.	50; 2사분기의 임금	1	고소득2사 분기의 1/50	55	228	\$25	1/4	12	26	20주	8,000
V.I.	1-1/2×hqw; 고소득 기간의 \$858 또는 고 소득 기간의 \$858과 기준기 간의 wba×39	1	주 aww의 50%까지의 1/26	32	232	\$15이 상의 임금	1/3	13+	26	any time	14,300
Wash.	680시간	1	주 aww의 70%까지의 고소득 2사분기 평균의 1/25	87	410	\$5이상 의 임금의 1/4	1/3	16+ -30	26	any time	22,500
W.Va	\$2,200과 2사 분기의 임금	1	주 aww의 66-2/3%까 지의 연임금의 1.0%	24	311	\$60	uniform	26	26	20주	8,000
Wisc	30×wba; 고소 득기간 외의 wba×7	0	최대 wba까지의 hqw의 4%	43	290	\$30+\$3 0이상 임금의 33%	40%	12	26	29주	10,500
Wyo.	1.4×hqw; 기준기간 내 주 aww의 8%	1	주 aww의 55%까지의 hqw의 4%	18	250	wba이 상의 임금	3/10	12 -26	26	현 또는 지난 CY동안 \$500	12,500

## 5. 일본

### 가.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일본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고용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근로자가 실업에 직면했을 경우 보통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기업의 퇴직금을 받게되고, 직업훈련 등을 받으면서 다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며, 특수직의 경우(선원, 공무원 등)는 관련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는 급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고실업 시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저소득층 실업자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고, 계절고, 자영, 가족봉사자 등의 경우는 실업대책사업 등 각종 취로사업에 취로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부사업이나 아동수당제고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이후 상용취직, 자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자립과 소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호제도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 취직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관련정책이 있다.

일본의 '실업보험제도'는 1947년 대량실업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가 1975년 실업보험제도는 고용 및 실업정세의 변화 속에서 실업예방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실업을 다루려는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 고용 및 실업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내용도 탄력적으로 개정되면서 고용실업대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고령구직자급여금제도' 및 재취직수당제도가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그리고 1994년에는 급속한 고연령화와 여성의 직장진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고용계속급여', 육아휴업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98년 3월에는 최근의 고용 및 실업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급여'와 '개호휴업급여'가 창설되었고 국고부담이 감소하는 개정<sup>18)</sup>이 일어났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공적부고제도는 심각한 빈곤과 대량실업을 배경으로 제된 1946년 ‘생활보호법(구)’에 의해 실시되며, 이 법에 의해 무차별 평등하게 국가책임 하에 부조를 받는 것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1950년에는 신헌법의 생존권 이념에 근거하여 현행의 ‘생활보호법(新)’이 성립되었고 이 법에 의해 최저생활을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상자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적용상황이 있어서 매우 복잡한 틀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나. 고용보험제도

##### 1) 실업급여

###### 가) 적용대상과 피보험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파악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사업으로 고용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임의적용대상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고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 일반피보험자
- 고령계속피보험자 :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의 전일부터 계속하여 고용된 자
-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 또는 단기고용(동일사업주에 계속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되는 기간이 1년 미만)에 있는 자
- 일고노동피보험자 : 매일 고용되는 자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피보험자가 된 일용직근로자

---

18) 고령자 구직자 급부금에 대한 국고부담의 폐지(1999년 4월 1일부터), 실업급부에 요하는 국고부담액이 현재 국고가 부담하는 액의 8할에서 7할로 개정되었다.(雇用保険法及び船員保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의 概要, 1998, 3. 20, 労働省 発表資料)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자(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또는 일고노동자 피보험자는 제외)
- 단시간노동자(주당 30시간 미만)로서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 또는 단기고용에 있는 자
- 일고노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한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상회하는 제급여를 받는 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보험자의 경우 1995년말 적용사업소는 약 192만 개소, 피보험자는 3,354만명이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1995년말 5만5천명으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전체 고용근로자의 65% 정도가 되고 있다.

#### 나) 재정

고용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며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부담분이 있다.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내의 사업에 따라 다른데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1,000을 부담하고 국가는 실업급여 중 구직자급여, 고용계속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sup>19)</sup>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1.3/1,000이다.

---

19) 구직자급여에 대해서는 필요비용의 1/4(최고 1/3), 고용계속급여에 대해서는 필요한 급여의 1/8을 부담한다. 국고부담액은 1993년 이후 국고부담액의 80%의 금액을 지원했으나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70%로 감소하였다.

<표IV-8> 고용보험 보험료율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전 체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	4/1,000	4/1,000	8/1,000
3사업을 위한 보험료	3.5/1,000	無	3.5/1,000
전 체	7.5/1,000	4/1,000	11.5/1,000

#### 다) 급여내용

실업급여는 목적과 성격상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구직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구직자급여’, 둘째,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직촉진급여’, 그리고 세 번째로 원활하게 직업생활을 계속 촉진하기 위한 ‘고용계속급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해 1998년 12월부터 ‘교육훈련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다.

##### (1) 구직자급여

구직자급여의 기본수당은 피보험자가 실업 이전 1년간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공공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지급된다.

기본수당액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데 이직 전 6개월의 임금총액을 180으로 나눈 금액(임금일액)의 80%에서 60%(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80%에서 50%)를 지급하고 임금일액의 최저 한도로 4,290엔을 보장한다.

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실직자의 취직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취직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급여일수가 길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일수가 90일이다.

이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후 1년간에 한정하여 지급되는데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취직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 가산되고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표IV-9> 기본수당의 급여일수



	일반피보험자				단시간노동피보험자			
	1~5년	5~10년	10~20년	20년이상	1~5년	5~10년	10~20년	2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80일		90일	90일	180일	
30~45	90일	180일	210일		90일	180일	180일	210일
45~60	180일	210일	240일	300일				
60~65	240일	300일	300일	300일	210일	210일	210일	210일
취직 곤란자	45세 미만 240일 45세 이상 60세 미만 300일				30세 미만 180일 30세 이상 65세 미만 210일			

기본수당 즉 일반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외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용노동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직자급여를 지급한다.

- 고령구직자급여는 고령자에게 구직자 급여를 일시금으로 주어 고령자의 취직을 격려하는 급여이다. 그러나 고령구직자급여의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국고부담도 폐지되었다.
-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 및 1년 미만의 단기고용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생활실태에 대응하여 기본수당의 50일분에 해당하는 특례일시금을 지급한다.
-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업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2개월 동안 26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구직자급여는 특히 불황에 있는 직종의 이직자나 도산으로 인한 이직자, 취직이 특히 어려운 개별 실직자의 경우와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다발지역에서 광역직업소개활동의 대상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실업상황이 악화된 경우<sup>20)</sup>에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훈련수강자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2년 한도로 기본수당을

20) 기본수당의 지급률이 4개월간 연속하여 4%를 넘고, 매월 새로운 기본수당 지급자의 수가 감소경향을 보이지 않는 경우

지급하고, 훈련대기기간(90일 한도) 동안과 수강종료 후에도 30일 한도로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2) 취직촉진급여

취직촉진급여에는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 등 네 가지가 있다.

‘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주의 3분의 1 이상, 또는 45일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기본수당의 30일분부터 120일분까지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상용취직준비금’은 심신장애자, 45세 이상의 취직이 곤란한 수급자격자인 경우에 기본수당의 3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재취직 수당’은 일반피보험자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급여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고노동피보험자였던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된다.

## 라) 급여지급현황

고용보험에서 단기근로자와 고연령계속근로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수는 1995년에 3,354만명, 수급자수는 83만7천명, 1인당 평균 구직자급여액은 약 14만5천엔이었다.

<표IV-10> 고용보험 1인당 급여액 (1995)

내역	급여액(엔)
일반구직자급여(기본액)	144,813
고연령구직자급여	680,710
재취직수당	439,025
상용취직준비금	178,198
이전비	125,495
고연령고용계속급여	74,724
육아휴업급여	97,669
선원보험	180,160

자료 : 厚生省 統計協會, 『保険と年金の動向』, 1997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수<sup>21)</sup>가 1995년말 5만5천명, 수급자 실인원은 3만4천명이며, 평균 수급일수는 월 10.0일, 평균 수급월액은 7만256엔, 총 급여액은 289억6천만엔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일고 고용보험 적용급여 상황(매년 1월 평균)

	피보험자수 (천명)	보 통 급 여		특례급여 초회수급자	총급여액 (백만엔)
		수급실인원 (천명)	수급연일수 (천일)		
1991	80	53	460	43	32,136
1992	69	48	439	3	30,847
1993	64	41	383	2	26,945
1994	61	39	375	3	29,212
1995	55	34	345	1	28,961

자료 : 厚生省 統計協會, 『保険と年金の動向』, 1997

## 2) 고용안정사업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증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고용안정사업은 ①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를 휴업시키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끔 하는 사업주,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기금의 조성 및 원조를 행하고, ②정년연장, 정년에 달한 자의 재고용 등에 의한 고령자의 고용연장, 고령퇴직자에 대한 재취직의 원조 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하고, ③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의 사업장의 이전에 의해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계절적으로 실업하는 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들을 연간을 통해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용에 관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

21) 일고노동피보험자 수첩 교부수로 추계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원조와 조성, 그리고 ④장애인 등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촉진과 기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노동부령으로 원조를 한다. 구체적인 조성과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용조정조성금

지정업종, 지영업종의 하청업종이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조정금을 지급한다. 조성금은 휴업수당액의 1/2(중소기업의 경우 2/3), 교육훈련시 수강임금의 1/2(중소기업은 2/3)을 사업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지급한다.

#### 나) 고용고도화조성금

고용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주가 고도화 계획을 제출하고 인정이 되면 인정계획과 관계되는 사업재구축 등의 실시에 수반되는 실직 또는 배치의 전환에 대해 사업주가 노조와의 협의하에 근무시간 중 15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할 경우 고용안정계획대상 피보험자의 수와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고용고도화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 다)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

55세 이상인 자,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20세 미만의 과부,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여성 가구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을 지급한다.

#### 라) 지역고용개발조성금

고용기회증대촉진지역에 사업장을 설치라고 또는 정비하는 사업주나 고용기회증대촉진지역구직자를 시간제가 아닌 전임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역고용개발조성금으로 지역고용장려금, 지역고용특별장려금 및 지역고용이전급부금을 지급한다.

마) 대규모고용개발촉진조성금

고용기회증대촉진지역 내에서 고용기회의 증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지정 기간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거주지를 변경하여 오는 구직자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년마다 심사하여 고용에 관계되는 자의 수에 따라 조성금을 지급한다.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개호비용조성금의 조성

피보험자가 육아 또는 개호에 관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경감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조성금을 지급한다.

사) 통년교육장려금

노동부장관이 적설 또는 한랭의 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동절기에 위의 사유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1/2을 통년교육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아) 고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

정년이 없거나 60세 이상의 정년을 갖고 있는 사업주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 동안 계획한 사업을 실시하며, 직장개선조치가 완료한 날 제출일보다 많은 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설치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대상 고령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의 고용인원수(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해당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전임 또는 단시간고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65세 미만 고용자의 6%가 초과하는 경우 고령자의 고용인원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 차) 육아·개호 등 퇴직자 재고용촉진급부금

육아·개호 등의 이유로 퇴직했던 실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하는 대상자의 수에 따라 고용한 날로부터 3년간 재고용촉진급부금을 지급한다.

### 3) 능력개발사업

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러 고용보험 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강습, 직업훈련시설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인재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인재육성사업조성금, 중소기업인재육성훈련설비조성금,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과 직업능력개발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 지원평생능력개발 급부금, 수급자격자와 고령 또는 특례수급자격자를 위한 직장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추진자에 대한 강습, 직업안정과 직업훈련 수강촉진을 위한 강습 및 수강급부금, 재취직 촉진강습급부금, 중앙과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협의회 보조, 기능검정시험 업무비보조, 40세 이상의 중고령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직업안정을 위한 수강장려금, 육아·개호휴업자 직장복귀프로그램실시 장려금이 있다.

## 다. 관련제도

### 1)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1971년 창설되어 1972년부터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제한이 있어서 1996년 4인 세대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239.6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소득제한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피용자 및 공무원의 경우 전액 사업주 부담에 의한 특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재정은 피용자의 경우 국가가 2/10, 지방정부가 1/10, 사업주가 7/10을 부담하고, 비피용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4/6, 지방정부가 1/6, 사업주가 1/6을 부담한다. 공무원은 해당단체가 전액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고 첫째, 둘째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00엔, 셋째 아동부터는 월 10,000엔을 지급한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수급자는 1996년 2월말 현재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피용자가 약 148만명, 자영업자 등이 약 36만명, 공무원이 약 19만명으로 통 203만명 정도이다. 또한 지급대상 아동수는 피용자 약 166만명, 자영업자 약 40만명, 공무원 약 21만명이다.

아동수당 외에도 생별모자제대에게 지급되는 ‘아동부양수당제도’와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이 있으며, 수급자수는 1996년말 현재 각각 62만4천명, 12만7천명이다.

## 2) 생활복지자금 대부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세대에 대해 생업비 및 요양비 등의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부하여 주고 민생위원이 필요한 원조지도 를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욕의 조장, 촉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생활 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저소득세대, 신체장애세대, 정신박약세대, 고령자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총 8가지의 대부를 한다.

### 가) 갱생자금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생업비, 지도비, 기능습득비를 대부한다.

### 나) 신체장애자 갱생자금

신체장애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 생업비, 지도비, 기능습득비를 대부한다.

### 다) 생활자금

저소득세대,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에게 생활자금을 대부한다.

라) 복지자금

저소득세대,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고령자세대에게 결혼, 출산, 장제에 필요한 경비, 기능훈련회복기구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의 구입, 주택 이전, 급배수 설비, 또는 난방설비에 필요한 경비, 특별히 고액의 복지욕구 구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대부한다.

마) 장학자금

아동수당의 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수학과 취학지도비를 대부한다.

바) 요양자금

부상 또는 1년 이내의 요양에 필요한 경비를 대부한다.

사) 재해원호자금

각 자금마다 금액의 한도와 상황 방법이 다르며 대체적으로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거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금 사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장 하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복지자금 대부를 위한 재정은 국가가 2/3, 都道府縣이 1/3을 부담한다.

3) 실업대책사업

실업대책사업은 전 산업에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실업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그것에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취업시켜 그 노동수입으로 재취업까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의 실업대책이다.

1949년 ‘긴급실업대책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실업대책사업은 대량실업에 대한 응급적인 실업자 흡수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하여 재취업까지의 노동력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실업대책사업의 일



환으로 1959년 탄광이직자 긴급취로대책사업, 1954년에서 1970년 사이의 특별실업대책사업, 1971년에 특정지역개발취로사업, 1954년에서 1962년에 임시취로대책사업, 1969년에 탄광지역개발취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고용실업사정이 호전되고 실업대책이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전환되면서 실업대책사업의 역할은 감소되었고 사업 자체도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어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1995년 ‘긴급실업대책법’은 폐지되었다.

#### 4) 공적부조제도

##### 가) 적용대상

실업에 대한 2차적 안전망인 공적부조제도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생활보호를 제공한다.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는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선정되는 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갖고 있다.

##### 나) 급여

생활보호에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의 7가지 부조가 있고, 이 외에 근로공제가 있다. 즉 생활보호제도가 지급하는 최저생활비는 생화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의 합이고 이에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가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된다. 그리고 지급액은 생활보호제도의 보족성<sup>22)</sup>의 원칙에 따라 수입충당금을 뺀 액수가 지급되며, 최저생활비의 수준은 피보호자의 연령과 세대구성,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지급된다.

##### (1) 생활부조

생활부조는 식대, 피복비, 광열비, 가구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

---

22) 보호의 요건이 자산, 능력 등의 활용, 부양우선, 다른 법이나 다른 시책의 보호를 우선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번 수입이 있는 경우 부조액에서 차감되게 된다.

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생활비인 기본생활비와 임산부, 장애인, 노령자 등의 특별한 수요에 대한 가산이 있다.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시설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생활보호제도의 주요한 부조인 생활부조의 기준은 후생대신이 매년 기준을 개정한다. 생활부조기준은 초기에 ‘장바구니(market basket)방식, 그리고 이후 앵겔방식으로 산정되었지만 일반인의 소비생활과 생활보호수준의 격차를 축소한다는 방침 하에 ‘격차축소방식’을 통해 산정하였다.<sup>23)</sup>

격차축소방식을 통해 일반소비수준과 피보호자의 소비수준 격차가 60%까지 축소되자 이 비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60%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수준균형 방식’이 1984년부터 사용되었다.

## (2) 교육부조

교육부조는 의무교육 취학 중인 아동에게 필요한 학용품비, 실험실습 견학비, 통학용품비 및 교과 외의 활동비 등의 비용을 초·중학교별로 정해진 기준액을 지급하며, 도서구입비, 학교급식비 및 교통비, 하계시설 참가비가 지급된다. 교육부조는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과 고교, 대학 과정의 교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3) 주택부조

주택보호는 보호세대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소재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일반기준보다 임대료가 비싼 경우에는 별도의 범위 내에서 특별기준이 적용된다.

---

23) 일반세대와 피보호세대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축소한다는 이 방식은 예산편성 직전에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전망에 의한 차년도 국민소비지출의 신장률을 기초로 이에 격차축소분을 가미하여 생활부조기준의 개정률을 정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의 목표수준은 60%였는데 1960년대 38%였던 것이 점차 향상되어 1980년대에는 59.1%이 되었다.

#### (4) 생업부조

생활부조는 생활보호법의 목적 중 하나인 자립조장을 위한 부조로 생업비, 기능습득비 및 취직지도비를 지급한다. 특히 생업비는 스스로의 생활유지비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보호자에 대해 지급하며 사업경영을 위한 시설비, 운영비, 기구 등의 구입비 등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조한다.

#### (5) 의료부조

질병, 부상 시 치료에 대한 부조로 입원, 진료, 투약, 주사나 수술 등에 대해 지급하지만 입원료,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지급한다. 치료의 일환으로 필요한 수혈, 안경 등도 치료재료로서 급여의 대상이 되며, 방문간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도 급여대상이 된다.

#### (6) 기타

이외에 장제부조와 출산부조, 근로공제가 있다. 근로공제는 공제한도액은 피보호세대의 근로의욕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조장의 촉진을 위해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근로수입에 연동하여 공제액을 설정하는 수입금액 비례방식이 채용되었다.

### 6. 캐나다

#### 가. 캐나다 실업급여제도의 연혁

캐나다는 199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실업보험법(the Unemployment Insurance Act)과 국가훈련법(the National Training Act)을 통합하여 고용보험법(the Employment Insurance Act)으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기간 동안의 소득지원이라는 종전의 소극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실직자들의 능동적 직장탐색과 취업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의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2년간에 걸쳐 10만명이 넘는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로 실업급여와 재취업촉진사업의 두 부분을 크게 나누어진다. 실직자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에서는 수급요건의 강화, 최대수급기간의 축소 등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반면, 1시간이라도 일한 경력이 있으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sup>24)</sup> 이는 기간 단위를 종전의 週에서 시간(the hour system)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맞물려 근로시간의 합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종전보다 훨씬 빠른 기일내에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에 대하여 수급액을 줄이는 불이익을 부과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액을 증가시켜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향상,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촉진사업(Re-employment Benefits)은 새로운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이다. 재취업촉진사업은 기능훈련비용대부 및 장려금(Skills Loans and Grants), 자영업지원금(Self-employment Assistance), 임금보조금(Targeted Wage Subsidies), 소득보전지원금(Targeted Earnings Supplements) 등 여러 가지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40만명 정도가 이 사업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1년경까지 7,200억원(\$1.2billion)<sup>25)</sup>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 근로자, 사업주, 공공단체들 상호간의 협력과 공동노력, 그리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의 유연한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동적이었던 실업보험제도를 적극적인 고용보험제도로 바꿈에

---

24) 현재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9만원(\$150)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97년 1월 5일부터는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25) 여기에서의 화폐단위는 캐나다 달러이며, 환율은 \$1에 6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96년 7월 1일과 '97년 1월 5일 등 두차례에 걸쳐 고용보험제도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다. '96년 7월의 제도 변화는 일종의 완충지대와 같은 것으로 종전에 비하여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변화들은 '9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고용보험은 인력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HRDC)가 고용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험료는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사업, 출산수당 등 각종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기금은 정부의 일반회계와 통합되어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지출액의 34%에 달하는 3조원(50억불) 정도의 잉여<sup>26)</sup>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잉여금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독립적 자금운용이나 투자는 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정부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을 받는다.<sup>27)</sup>

현재 방대한 잉여금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진행중인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지원 및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보험료율의 인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계와 정부의 일각에서는 고용안정, 직업훈련, 재취업촉진 등의 사업에 잉여금이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특히 재무성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고용보험의 잉여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측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에 의존하고

---

26) 캐나다가 1940년대에 실업보험을 도입한 초기에는 한때 연간 실업보험지출액의 15배에 달하는 잉여금이 적립된 경우도 있다.

27) 1972년 이전 실업보험기금이 정부의 일반회계와 독립되었 때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였었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의 예측으로 이것이 올바르게 전망되면 상당히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와 40년대 이래의 오랜 경험에 의거하여 단순한 모형으로도 현상과 미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고용보험제도

##### 1) 적용대상

캐나다의 고용보험은 근로능력과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캐나다 거주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실직자 중에서 실업 전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내었고,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지난 42주 동안 420시간에서 700시간의 최소 근로시간(표IV-12) 동안 일한 사람이 고용보험에 의한 일반급여(regular benefit,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IV-12> 지역의 실업률별 최소근로시간

지역의 실업률	지난 52주 동안의 최소(required) 근로시간
0-6%	700시간
6.1-7%	665시간
7.1-8%	630시간
8.1-9%	595시간
9.1-10%	560시간
10.1-11%	525시간
11.1-12%	490시간
12.1-13%	455시간
13.1% 이상	420시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처음 취직한 사람이거나 2년간의 실직후 재취직하는 사람의 경우 910시간의 근로시간이 요구되고,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이나 출산수당이나 육아수당(maternity or parental benefit)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700시간의 근로시간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으로는 자영업자가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실직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라고 하여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인 실직이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성적인 또는 그밖의 학대(harassment)
- 배우자나 자녀로 인한 이주
- 차별
-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근로환경
- 간호가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경우
- 곧 다른 직업에 취직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직장에 임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과도한 시간외근로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자신 때문이 아닌 이유로 상사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고용주가 불법을 행하려는 경우
-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한 경우

실업보험으로 운영되던 1995년까지는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에 대해 주(Week)단위로 계산이 되었지만 고용보험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계산 기준이 근로시간(the hour system)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형태로 고용되었든 또는 전임으로 고용되었든지 또는 시간제 고용이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든지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은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급여의 기준이 계산되게 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기간이 결정이 되므로 2주간 일을 했다고 해도 1주간 일한 사람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급여지급기간이 적을 수 있다.

## 2) 신청절차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개발부(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 HRDC) 산하의 지역사무실인 인력개발센터(Human Resource Centre of Canada : HRC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자료는 사회보험 번호와 고용기록(Record of Employment)이다. 고용기록은 고용주가 고용을 하게 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기간과 임금에 대한 기록이 되어있다. 근로자는 실직할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기록을 받아서 인력개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고 대기기간이 끝난 뒤 인력개발 센터에서 신청자 보고카드(claimant's report cards)를 보낸다. 그러면 신청자는 신청자 보고카드를 2주마다 작성해서 인력개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보고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신청 후 4주가 지나면 실업급여 수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표는 2주마다 지급된다.

### 3) 보험료

보험료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책정되는 소득의 범위는 주소소득 150달러에서 750달러(45만원)까지이며 연간소득 최대 39,000달러(2,340만원)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캐나다에서는 실업보험이 부과되는 소득의 최고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sup>28)</sup> 고용보험적용대상자의 25% 정도가 연간 약 2,340만원(39,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기금의 재정상태, 실업률, 정부의 정책 등의 각종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보험료율은 1996년 가을에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7.08%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sup>29)</sup>

---

28)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기준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단지 일일 수급액의 최고 한도만이 정하여져 있다. 이는 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를 유도하는 한편, 기여와 혜택의 불일치라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29)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이 0.6%(근로자 0.3%, 사용자 0.3%)이고, 고용보험사업전체에 대한 보험료율도 0.9%~1.3%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기준소득의 2.9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1.4배인 4.1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이처럼 높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10%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과 이직전 소득의 55%에 달하는 실업급여액, 폭넓은 적용범위, 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sup>30)</sup>

#### 4) 급여수준과 급여기간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은 지난 26주간의 총수입과 지역 실업률에 따른 minimum divisor, 26주 동안 일한 주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먼저 지난 26주간의 총수입과 근로한 주의 수를 계산하고, 지역의 실업률에 따른 minimum divisor(표IV-13)와 지난 26주간 근로한 주의 수를 비교하여 더 큰 수로 총수입을 나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 수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55%의 급여를 제공한다.

<표IV-13> divisor표

지역의 실업률	minimum divisor
0~6%	22
6.1~7%	21
7.1~8%	20
8.1~9%	19
9.1~10%	18
10.1~11%	17
11.1~12%	16
12.1~13%	15
13.1% 이상	14

30) '95년도 캐나다의 실업률은 9.5%였으며, '96년에도 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94년의 10.4%, '93년의 11.2%에 비하여 낮아진 값으로 최근의 경기호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액도 이직전 12~20주 동안 평균임금의 55%으로 우리나라보다 5%가 높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55%인 실업급여는 최대 주당 413달러를 넘지 못한다. 또한 소득이 29,921달러 이하이고 아동이 있는 가정이거나 Child Tax Benefit(CTB)을 받고 있다면 평균임금의 65%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급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경에는 소득의 80%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급액의 한도인 주당 247,8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1996년 7월부터는 intensity rule이 적용되어서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주의 수에 따라 급여률이 삭감된다. 이러한 삭감은 20주마다 1%씩 이루어지며 최대 5%까지 삭감이 가능하다(표IV-45). 그러나 실업급여 외의 다른 급여(상병수당이나 출산수당, 또는 육아수당)를 받은 주나 취직 중에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며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intensity rule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IV-14> intensity rule

지난 5년 동안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주	고용보험 급여율
0~20주	55%
21~40주	54%
41~60주	53%
61~80주	52%
81~100주	51%
100주 이상	50%

실업급여는 15주에서 45주까지 제공되는데 지급기간은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다르며 근로한 주의 수가 많을수록 길다.

<표IV-15>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 역 의 실 업 률												
근로시간	6%이하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이상
420-454									26	28	30	32
455-489								24	26	28	30	32
490-524							23	25	27	29	31	33
525-559						21	23	25	27	29	31	33
560-594					20	22	24	26	28	30	32	34
595-629				18	20	22	24	26	28	30	32	34
630-664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665-699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700-734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735-769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770-804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805-839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840-87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875-909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910-944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945-979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980-1014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1015-1049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1050-1084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1085-1119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1120-1154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1155-1189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1190-1224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1225-125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1260-1294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1295-1329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1330-1364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1365-1399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1400-1434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1435-1469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5
1470-150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1505-1539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5	45
1540-1574	28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1575-1609	29	31	33	35	37	39	41	42	45	45	45	45
1610-1644	30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1645-1679	31	33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1680-1714	32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45
1715-1749	33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45
1750-1784	34	36	38	40	42	44	45	45	45	45	45	45
1785-1819	35	37	39	41	43	45	45	45	45	45	45	45
1820-	36	37	40	42	44	45	45	45	45	45	45	45

#### 4)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의 강화

캐나다는 피보험자와 고용주의 부정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97년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 이러한 벌칙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부정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부정지급된 금액의 3배까지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부정수급의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시간은 대폭 증가하였다. 즉, '96년 7월 이후에 범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이 1,000달러(60만원) 미만이면 근로시간이 25% 증가되고, 1,000달러(60만원)에서 5,000달러(300만원) 사이면 50%가, 그리고 5,000달러(300만원) 이상이면 75%가 증가된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2배의 근로시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요구된다.<sup>31)</sup>

#### 5) 적용현황

높은 실업률과 광범위한 적용에 기인하여 연간 250만에서 350만의 실직자들이 매년 실업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4,928,000명을 기준으로 약 16.7%에서 23.4%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음을 의미하는데 '95년도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급기간은 21주이고, 주당 수급액은 평균 약 156,000원(260달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실업자의 45%에 해당하는 634,000명의 실업자들이 매주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훈련보조금, 출산수당 등의 다른 급여와 사업들의 수급자를 모두 합하면 매주 1백만명에 가까운 실직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실직자들이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됨에 따라 고용보험 규모도 방대하여 '95년의 경우 GDP의 1.73%에 해당하는 약 8조1천억원(\$13.5billion)이 고용보험사업의 각종 급여로 지출되었다.

#### 다. 관련제도

#### <표IV-16> 재취업촉진사업의 내용

---

31) 그러나 필요한 근로시간이 최대 40주('97년 1월부터는 1,400시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명	대상자	사업내용 및 목적
임금보조금 (Targeted Wage Subsidies)	직장경험의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취업이 곤란한 개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하여 지원대상자의 지속적 고용을 도모함.
자영업지원금 (Self-employment Assistance)	현실적이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영업을 추진하는 개인	자영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여러 가지의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의 구축과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함.
고용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Job Creation Partnerships)	직장경험의 부족으로 취업이 곤란하거나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개인	실직자들이 근로경험을 쌓아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에 사업주,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소득보전지원금 (Targeted Earnings Supplements)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노동시장환경의 적응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개인	근로소득이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보다 많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원함.
기능훈련비용대부 및 장려금 (Skill Loans and Grants)	취업이 곤란한 개인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개인	직업훈련이 필요한 개인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대부 또는 지원하며, 훈련의 내용은 정부가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이러한 재취업촉진사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당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난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고, 출산수당이나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후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벗어난 개인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장을 찾는 경우에도 재취업촉진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6년 7월 1일 이전에는 신청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만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한 것에 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으며, 특히 장기실업자 및 육아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재진입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취업촉진사업에 속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지역공동체의 우선 순위와 사용 가능한 재원의 크기에 달려 있다.

## 7. 아일랜드

### 가.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 1) 사회보장제도의 구분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책정되는 사회보험(PRSI : Pay-Related Social Insurance) 각출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한 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이다. 각 사회보험급여는 소정의 사회보험료의 납부기간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지급된다.

둘째, 자산심사를 통과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부조(이를 공적부조라고도 함)다. 사회부조는 위의 사회보험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셋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자산심사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Child Benefit)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급여이다.

#### 가) 사회보험급여

아일랜드의 모든 거주자는 의료서비스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급여는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Medical Treatment Benefit)
- 상병급여(Cash Sickness Benefit)
-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 산업재해급여(Occupational Injuries Benefit)
- 장애연금(Invalidity Pension)
- 퇴직 및 노령연금(Retirement and Old-age Pension)
- 유족 및 고아급여(Survivor's and Orphan's Benefit)
-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위와 같은 사회보험체계로부터의 사회보험급여 수급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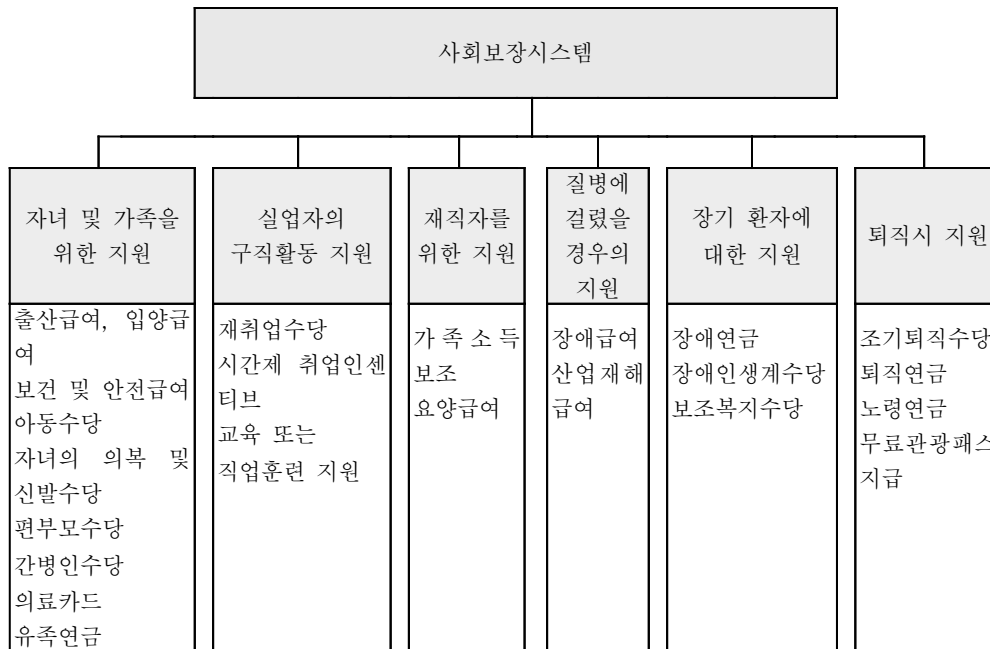
#### 나) 사회부조(공적부조)

18~66세의 실업자가 아일랜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정의 사회보험급여를 소진하였거나 또는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부조를 지급한다.

사회부조는 다음과 같은 부조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 실업부조
- 사회보험급여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를 위한 사회부조에 의한 무각출 노령연금
- 18세 이상의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시각장애인연금
- 사회보험급여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망인을 위한 사회부조에 의한 무각출 유족연금
- 사회보험급여에 의한 고아연금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망인을 위한 사회부조에 의한 무각출 고아연금
- 편부모에게 지급되는 편부모수당(Lone Parents Allowance)
-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간병인수당(Carer's Allowance)
- 21세 미만의 1인 이상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에게 지급되는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

[그림Ⅳ-3] 아일랜드의 전생애에 걸친 사회보장시스템



## 2)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피보험자)

일반적으로 16~65세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주당 30파운드 미만인 근로자 또는 66세 이상의 근로자는 산업재해급여만 대상이 된다.

### ·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임의가입

65세 이하인 자로 사회보험 강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과 같은 특정 급여에 대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로해 왔거나 또는 사회보험료를 156주 이상 납부해 온 경우 또는 피보험자격이 중단된 이후 특정 기한내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3)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는 첫째, 특정의 소득상한액을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둘째,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 그리고 셋째, 고용 및 훈련분담금<sup>32)</sup>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sup>33)</sup>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주당 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출되며 보험료는 노사가 나누어 분담한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기도 한다.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율은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개인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 가) Class A

1995년 4월 6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왔으며, 제조업, 상업 및 서비스업에서 주당 30파운드 이상의 임금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자 또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등급이다.

#### <표IV-17> Class A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

32) FAS 도제훈련분담금으로써 건설업, 인쇄·제지업, 기계·전기업부문의 사업자가 사회보험료 이외로 근로자 임금총액의 0.25%를 납부한다.

33) 의료보험료와 고용 및 훈련분담금은 ①근로자가 의료카드 소지자이거나 또는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자인 경우, ②유족연금, 유기(遺棄) 아내급여(Deserted Wife's Benefit), 사회부조 그리고 EU 회원국 또는 아일랜드와 사회보장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인 경우에 면제된다.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의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30~207 파운드	AO	100파운드 미만	0	8.50*	8.50	0	8.50*	8.50
		100파운드 이상	4.50	8.50*	13.00	0	8.50*	8.50*
207.01 ~270 파운드	AX	100파운드 미만	2.25	8.50*	10.75	2.25	8.50*	10.75
		100파운드 이상	6.75	8.50*	15.25	2.25	8.50*	10.75
	**AW	100파운드 미만	0	8.50*	8.50	0	8.50*	8.50
		100파운드 이상	4.50	8.50*	13.00	0	8.50*	8.50
270파운 드 이상	A1	100파운드 미만	2.25	12.00*	14.25	2.25	12.00*	14.25
		100파운드 이상	6.75	12.00*	18.75	2.25	12.00*	14.25
	**A2	100파운드 미만	0	12.00*	12.00	0	12.00*	12.00
		100파운드 이상	4.50	12.00*	16.50	0	12.00*	12.00

주: \* FAS에서 제공하는 도제훈련분담금(Apprenticeship Training Levy)의 0.25%는 고용주 분담금에 부가됨

\*\* Class AW와 A2는 의료보험카드소지자, 유족연금, 편부모가족수당 또는 유기(遺棄)아내급여 등의 수급자에 적용됨

#### 나) A9

1996년 4월 6일 이후 고용된 지역고용(Community Employment)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등급이다.

<표IV-18> A9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A9	
고용주	100파운드 미만 수당에 대해 0.5%
근로자	100파운드 이상 수당에 대해 5.5%

#### 다) Class B

1995년 4월 6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으며,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상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등록된 의사나 치과의사 등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 등급이다.

<표IV-19> Class B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BO	20파운드 미만	0	2.01	2.01	0	2.01	2.01
		20파운드 이상	0.90	2.01	2.91	0	2.01	2.01
207파운드 이상	B1	20파운드 미만	2.25	2.01	4.26	2.25	2.01	4.26
		20파운드 이상	3.15	2.01	5.16	2.25	2.01	4.26
	B2**	20파운드 미만	0	2.01	2.01	0	2.01	2.01
		20파운드 이상	0.90	2.01	2.91	0	2.01	2.01

주: \*\* 의료카드 소지자나 유족연금이나 편부모가족수당 등의 수혜자

#### 라) Class C

1995년 4월 6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왔으며,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상시 군장교나 의무대(醫務隊)에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다.

<표IV-20> Class C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CO	20파운드 미만	0	1.85	1.85	0	1.85	1.85
		20파운드 이상	0.90	1.85	2.75	0	1.85	1.85
207파운드 이상	C1	20파운드 미만	2.25	1.85	4.10	2.25	1.85	4.10
		20파운드 이상	3.15	1.85	5.00	2.25	1.85	4.10
	C2**	20파운드 미만	0	1.85	1.85	0	1.85	1.85
		20파운드 이상	0.90	1.85	2.75	0	1.85	1.85

#### 마) Class D

1995년 4월 6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왔으며, Class B나 Class C에 언급되지 않은 여타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등급이다.

<표IV-21> Class D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DO	20파운드 미만	0	2.35	2.35	0	2.35	2.35
		20파운드 이상	0.90	2.35	3.25	0	2.35	2.35
207파운드 이상	D1	20파운드 미만	2.25	2.35	4.60	2.25	2.35	4.60
		20파운드 이상	3.15	2.35	5.50	2.25	2.35	4.60
	D2**	20파운드 미만	0	2.35	2.35	0	2.35	2.35
		20파운드 이상	0.90	2.35	3.25	0	2.35	2.35

주: \* FAS에서 제공하는 도제훈련분담금(Apprenticeship Training Levy)의 0.25%는 고용주 분담금에 부가됨

\*\* 의료카드 소지자나 유족연금 혹은 편부모가족수당 등의 수혜자

#### 바) Class E

아일랜드 성직자(Representative Body 교회 소속)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등급이다.

<표IV-22> Class E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의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EO	100파운드 미만	0	8.12	8.12	0	8.12	8.12
		100파운드 이상	3.83	8.12	11.95	0	8.12	8.12
207파운드 이상	E1/E2**	100파운드 미만	0	8.12	8.12	0	8.12	8.12
		100파운드 이상	3.83	8.12	11.95	0	8.12	8.12

주: \*\* 의료카드 소지자나 유족연금 혹은 편부모가족수당 등의 수혜자

#### 사) Class H

연금 수혜자격이 있는 상시 NCO와 국방부 사병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 등급이다.

<표IV-23> Class H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HO	100파운드 미만	0	11.30	11.30	0	11.30	11.30
		100파운드 이상	4.40	11.30	15.70	0	11.30	11.30
207파운드 이상	H1	100파운드 미만	2.25	11.30	13.55	2.25	11.30	13.55
		100파운드 이상	6.65	11.30	17.95	2.25	11.30	13.55
	H2**	100파운드 미만	0	11.30	11.30	0	11.30	11.30
		100파운드 이상	4.40	11.30	15.70	0	11.30	11.30

주: \*\* 의료카드 소지자나 유족연금 혹은 편부모가족수당 등의 수혜자

#### 아) Class J

Class J 보험료는 직종을 불문하고 주당 30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나, 극히 소수의 피고용인에게 있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Class J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66세 이하의 피고용인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표 IV-24> Class J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JO	전체	0	0.50*	0.50	0	0.50*	0.50
207파운드 이상	J1	전체	2.25	0.50*	2.75	2.25	0.50*	2.75
	J2**	전체	0	0.50*	0.50	0	0.50*	0.50

주: \* FAS에서 제공하는 도제훈련분담금(Apprenticeship Training Levy)의 0.25%가 고용주 분담금에 부가됨

\*\* 의료카드 소지자나 유족연금 혹은 편부모가족수당 등의 수혜자

#### 자) Class K

자신의 소득에서 사회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의료보험료나 산재보상연금과 같은 고용 및 직업훈련분담금(Employment and Training Levy) 등이 부과되는 자이거나 또는 법관이나 국정 변호사등과 같은 특정 공무원, 혹은

이전에 Class S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66세 이상의 사람이 이러한 등급에 포함된다.

<표IV-25> Class K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週소득	사회보험 요율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01~29,000파운드		
			근로자	고용주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합계
			%	%	%	%	%	%
207파운드 미만	no contribution payable-record under class M							
207파운드 이상	K1	전체	2.25	0	2.25	2.25	0	2.25

#### 차) Class M

Class M은 제로의 보험료율을 가진 자에게 적용한다(예 : 16세 이하의 피고용인이나 제로의 보험료율을 가진 Class K에 해당되는 자 등). Class M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 카) Class S

일부 회사간부를 포함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거나 투자나 임대 등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다.<sup>34)</sup>

<표IV-26> Class S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34)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는 노령연금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보다 낮은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그러나 저소득의 자영업자는 정액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조세위원회(Revenue Commissioner)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연말 세금정산을 강제받지 않아도 되는 낮은 소득수준인 경우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週소득	사회보험요 율 등급	주소득 등급	누적소득한도	
			24,200파운드 이하	24,200파운드 초과
			%	%
207파운드 미만	SO	20파운드 미만	0	0
		20파운드 이상	5.00	0
207파운드 이상	S1	20파운드 미만	2.25	2.25
		20파운드 이상	7.25	2.25
	S2**	20파운드 미만	0	0
		20파운드 이상	5.00	0

타) Class P

Class S 등급으로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자로써 주소득원이 어업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등급이다. 이 보험료는 Class S 등급에 의해 지불하던 사회보험료 보다 높다.

<표IV-27> Class P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Class P	
모든 소득의 24,000파운드미만	5.00%
24,000파운드 이상	없음

4) 사회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의료서비스, 산업재해급여 또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된다. 그러나 그밖의 다른 사회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단기급여(장애급여, 출산급여, 실업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39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급여를 신청할 시 전년도에 보험료 납부기간(매년 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중에 크레딧(credit)을 받는 경우에도 단기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장기급여(유족연금,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156주

이상(장애연금의 경우는 260주 이상) 납부해야 수급권이 주어진다.

EU 회원국에서 체류시 그곳의 피보험기간도 아일랜드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적용시 국내와 동일하게 고려된다.

근로자에게 미래에 지급될 사회보험급여 및 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부는 특정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크레디트를 두고 있다. 이 크레디트는 실업, 질병 또는 퇴직 그리고 FAS에 훈련참여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크레디트가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한편 사회보험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실직전 일을 했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어떤 근로자 또는 실업자든 그의 직장생활 단계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직장생활에 복귀하여 26주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얻지 못한다.

#### 5) 사회보험급여 및 사회부조 지급수준

아일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험급여 및 사회부조의 지급수준은 다음 표들과 같다.

<표IV-28> 사회보험급여 수준 : 주급여율

(단위 : 파운드)



구분		週개인급여율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성인수 증가시		각 자녀의 全급여율
		'97. 12 이전	'97. 12 이전	-	'97. 12 이전	'97. 12 이후	
퇴직/노령연금	80세 미만	78.00	83.00	66세 미만	51.00	52.50	15.20
	80세 이상	83.00	88.00	66세 이상	55.40	56.90	15.20
유족연금/ 유기(遺棄) 아내급여	66세 미만	71.10	74.10	-	-	-	17.00
	80세 이상	106.10	81.10	-	-	-	17.00
폐질연금 (Invalidity Pension)	65세 미만	69.20	72.20	-	45.10	46.50	15.20
	65~80세 미만	78.00	83.00	-	45.10	46.50	15.20
	80세 이상	83.00	88.00	-	45.10	46.50	15.20
장애/실업/산업재해급여		67.50	70.50	-	40.00	41.20	13.20

<표Ⅳ-29> 사회부조 수준 : 주급여율

(단위 : 파운드)

구분		週개인급여율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성인수 증가시		각 자녀의 全급여율
		'97. 12 이전	'97. 12 이후	-	'97. 12 이전	'97. 12 이후	
무각출 노령연금/ 시각장애인 연금	66세 미만 (시각장애 연금만 해당)	67.50	70.50	-	40.00	41.20	13.20
	66~80세 미만	67.50	72.50	-	40.00	41.20	13.20
	80세 이상	72.50	77.50	-	40.00	41.20	13.20
무각출 유족연금/ 유기(遺棄) 아내 및 재소자 아내수당	66세 미만	67.50	70.50	-	-	-	-
	66~80세 미만	67.50	72.50	-	-	-	-
	80세 이상	72.50	77.50	-	-	-	-
간병인수당		70.50	73.50	66세 이상	72.50	-	-
편부모 가족급여		67.50	70.50	66세 이상	72.50	-	-
조기퇴직/장애수당		67.50	70.50	-	40.00	41.20	13.20
보조복지수당		65.40	68.40	-	40.00	41.20	13.20
실업부조	단기	65.40	68.40	-	40.00	41.20	13.20
	장기	67.50	70.50	-	40.00	41.20	13.20

<표IV-30> 기타 사회보험급여 수준 : 주급여율

(단위 : 파운드)

구 분	週개인급여액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성인수 증가시		각 자녀의 全급여율
	'97. 12 이전	'97. 12 이후	-	'97. 12 이전	'97. 12 이후	
육아급여-최저율	82.30	83.70	-	-	-	-
입양급여-최저율	82.30	83.70	-	-	-	-
산업재해급여	67.50	70.50	-	40.00	41.20	13.20
고아연금/수당	45.60	48.60	-	-	-	-

<표IV-31> 보건수당 수준 : 주급여율

(단위 : 파운드)

구 분	週개인급여율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성인수 증가시		각 자녀의 全급여율
	'97. 12 이전	'97. 12 이후	-	'97. 12 이전	'97. 12 이후	
전염성 질환자 생계수당	67.50	70.50	-	46.10	47.10	13.20
시각장애인 수당- 시각장애연금수령자	21.30	21.90	-	-	-	3.40

<표Ⅳ-32> 아동수당 수준 : 월급여율

(단위 : 파운드)

자녀수	'97. 12 이전	'97. 12 이후
1명	30.00	31.50
2명	60.00	63.00
3명	99.00	105.00
4명	138.00	147.00
5명	177.00	189.00
6명	216.00	231.00

다태출산	특별수당	수당지급율
	출생시 지급액	500
	4세때 지급액	500
	12세때 지급액	500

<표Ⅳ-33> 가족소득보조 수준 : 주급여의 상한액

(단위 : 파운드)

가족규모	'97. 12 이전 소득상한액	'97. 12 이후 소득상한액
1자녀	205	212
2자녀	225	232
3자녀	245	252
4자녀	265	272
5자녀	290	297
6자녀	310	317
7자녀	327	334
8자녀 이상	344	351

주: ※ 가족소득보조는 1주의 소득과 가족규모에 따른 소득한도 차액의 60% 수준으로 책정됨.

#### 6) 자산심사

이전에 전혀 취업하지 않았다거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사회보험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이의 해당자는 사회부조(또는 공적부조)를 받게 된다. 이 때에는 자산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사회부조를 지급한다.

##### 가) 자산심사가 필요한 연금 또는 수당

- 무각출 노령연금
- 간병인수당
- 편부모수당
- 무각출 미망인연금
- 유기(遺棄) 아내수당
- 재소자 아내수당
- 무각출 고아연금
- 실업부조
- 조기퇴직수당
- 시각장애자연금
- 보조복지수당

##### 나) 자산심사 항목

- 현금소득(금융소득 등)
- 임금
-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단, 자택 제외)
- 투자금과 자본의 年가치
- 실업부조나 조기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숙박(boarding and lodging)등과 같은 혜택이나 급여의 가치도 자산심사에 포함
- 보조복지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도 자산심사에 포함

다)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자산항목

- 자택
- 사회복지급여(예: 가족소득보조(FIS), 아동수당, 무각출 노령연금 등)
- Gaeltacht 지방장관의 소관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Gaeltacht 지방에서 아일랜드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부금으로 부터 생기는 소득
- 자선단체로부터의 기부금
- 임대수당(Rent Allowance)
- 보조복지수당
- 독립전쟁 참전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
- 보건위원회(Health Board)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벌어들인 소득
- 보건위원회(Health Board)로부터 나오는 위탁보호수당

#### 7) 사회보장을 위한 등록

아일랜드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은 즉시 지방세무소에 등록하고 사회보험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 8) 사회복지제도 운영조직

노사는 물론 국가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와 고용·훈련분담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에 모두 적립된다. 재정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급여는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반면 사회복지조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잉여인력 해고수당(Redundancy Payments)은 더블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and Employment)가 그 운영을 담당한다.

의료서비스 관련 급여재정은 국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험료 각출금으로

조달된다. 이들은 더블린에 위치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감독하에 있는 8개의 지역보건위원회(Regional Health Board)에서 운영한다.

#### 나. 실업급여

#####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 완전실업자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업하지 않은 자
- 66세 미만인 자
-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자
-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근로시간의 현저한 단축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이 때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주당 최소 1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됨을 증명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노동의 감소가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져야 함)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지난 6일중 최소 3일간 실업된 상태에 있는 자
-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이는 실업자에게 적합한 전일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소개된 적합한 일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만일 지방사회보장사무소에서 소개해 주는 직장을 타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지방사회보장사무소에 출석하여 위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능, 기술자격
- 직장경력
-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가능성

-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약유무

나)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의미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실업자란 뜻이다.

면담중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러한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 어떻게 빈일자리를 찾고 있는가?
- 어떤 일자리에 대해 구직서를 제출하였는가?
- 일자리를 위해 구직서를 제출한 회사는 어디인가?
- 구직서를 제출했던 마지막 시기는 언제인가?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FAS에 등록하였는가?

면담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회사에 제출했던 구직서 양식과 그 회사로부터 받은 회신 그리고 구직활동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면담했던 일자 및 담당자이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1주일을 단위로 볼 때 실업자는 시간제근로 또는 단시간근로를 하면서도 그 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날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다.

(1) 시간제근로(part time work)

실업급여는 주 6일에 대해 지급된다. 그러므로 주에 2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4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sup>35)</sup>

---

35) 실업부조인 경우 시간제근로로부터 발생하는 週소득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 (2) 체계적인 단시간근로(systematic short time work)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날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총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초과할 수 없어서, 예컨대 1주일에 3일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는 2일 동안만 지급된다.

체계적인 단시간근로에 대한 실업급여일액은 주급여액의 5분의 1에 상당한다.

그밖의 단시간근로, 가령 1주일을 근무하고 다른 1주일은 일하지 않는 근로형태로 근로기간이 단축·변경되는 경우 역시 일하지 않는 주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3) 비정규직근로(casual work)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지난 6일중 최소 3일간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4) 야근(night work)

비정규직 신분으로써 야근(밤 12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에 종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보다 단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사회복지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오직 비정규직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근로자의 야근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조건이라 함은 실직전 39주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또는 전년도 회계연도(1월~12월)에 크레디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



는 조건을 말한다. 크레디트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는 Class A, Class H 및 Class P 직군을 적용한다.

EC 회원국 국민이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으로 간주된다.

실업급여 수준은 실업자의 전년도 주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생계보전을 위해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때 부양자녀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는 경우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만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 편부모수당(Lone Parent's Allowance)
- 유족연금(Survivor's Contributory Pension(Widows/Widowers))
- 사회보험급여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무각출 유족연금(Widow's Non-Contributory Pension)
- 유기(遺棄) 아내급여(Deserted Wife's Benefit/Allowance)
- 재소자 아내수당(Prisoner's Wife's Allowance)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5년 4월 6일부터 주당 10파운드까지는 면세된다. 부양자녀로 인한 실업급여의 증가도 면세대상이 된다.

###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전 3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 4일후부터 실업기간중 1주를 단위로 지급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질병수당, 산업재해급여 및 장애인급여, 출산급여 그리고 입양급여 등을 이미 13주 이상 신청하여 온 사람이라면 실직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보통 최장 390일까지 지급된다. 최장의 실업급여 지급은 연금 수령 연령이 되는 65세 이전까지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중 156주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이다.

<표IV-34>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 령	소정급여일수	비 고
18세 미만	156일(6개월)	일요일 제외
18~65세 미만	390일(15개월)	일요일 제외
65세 이상	만 66세까지 지급	65세를 기준으로 156주(3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주: ※ Class P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어선원들은 1년에 13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4) 실업급여의 신청 및 지급

실업급여는 실직일에 본인이 직접 지방사회보장사무소로 출석하여 신청한다. 다만 지방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실직자인 경우 우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직확인서
- 전년도 소득세 납입증명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지방사회보장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직자의 거주지가 지방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우편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 중고령자들에게는 지정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우편환으로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아일랜드 국내에서 4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다른 EC 회원국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가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EC 회원국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로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 오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아일랜드 국외에서 실업급여를 계속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출국에 앞서 최소 2주일전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5) 실업급여 재수급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한 경우에도 재취업하여 13주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실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만족하여야 한다.

#### 6) 그밖의 부가급여

실업급여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급여가 지원된다.

- 무연연료수당(Smokeless Fuel Allowance) : 더블린(Dublin)이나 콕(Cork)과 같은 유연연료의 판매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13주 이상 받고 있는 경우 무연연료수당 지원
- 집세 또는 은행담보물에 대한 이자 지원(Rent and Mortgage Interest Supplement) :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집세와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보조이다. 지역보건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서 지급한다.
- 학령기 자녀를 위한 의복 및 신발수당(Back to School Clothing & Footwear Allowance) : 학교에 입학할 연령의 자녀의 의복과 신발을 구입할 비용을 지원. 매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지급된다.
- 의료카드(Medical Card) :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카드를 지급받는다. 의료카드 소지자는 병원진료비 및 조제비 등이 무료이다. 의료카드는 지역보건위원회에서 발급한다.
- 잉여인력 해고수당(redundancy payments) :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기업  
• 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and Employment)가 관장하는 잉여인력 해고수당(redundancy payments scheme)의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잉여인력으로 간주되어 실직하는 경우 특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일시불로 잉여인력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아일랜드 국내에서 근로에 종사한 근속연수 및 근

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산출된다. 여기서 잉여인력이라 함은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두가 정리되면서 발생한 해고자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당하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만일 잉여인력으로 간주되어 실직한 실업자가 12,000파운드 이상의 잉여인력 해고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9주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7) 실업급여 지급결정 및 심사청구

사회복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지급결정과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시 그에 대한 처분은 사회복지부의 심사관이 담당한다.

다만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급결정은 보건위원회(Health Board) 위원장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부의 심사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심사관의 처분결정을 받은 후 21일 이내로 사회복지부로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부로 접수된 심사청구건은 사회복지부와 독립된 기관인 사회복지심사청구실(Social Welfare Appeals Office)에서 재심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한 본인이 구두로 진행되는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회복지부 심사관의 결정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심사청구 청문회는 사회복지심사청구실의 심사관과 사회복지부의 심사관 그리고 심사청구인 또는 필요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참석하는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형태의 청문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심사청구실 심사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에서 지명한 평가자가 참석하기도 한다.

청문회 자리에서 사회복지부의 심사관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심사청구 신청자는 사회복지부의 심사관이 내린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충분하게 탄원할 수 있다.

#### 다. 실업부조

#### 1) 실업부조의 수급요건

실업부조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실업자
- 18~66세인 자
-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자
-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연속된 6일중 3일 이상 완전 실업되어 있는 자
- 자산심사를 통과한 자
- 국내 거주자

그러나 신규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이후 그리고 중등교육(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을 마친 이후 13주 이내에는 소득부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고등교육과정(우리나라의 대학교 수준)에 있는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에는 실업부조 지급이 제한된다.

#### ○ 일을 하면서도 실업부조를 수급하는 경우

1주일을 단위로 볼 때 실업자는 시간제근로 또는 단시간제근로를 하면서도 그 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날에 대해 실업부조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다.

##### 가) 시간제근로(part time work)

시간제 또는 비정규직(1주일에 3일까지)에 종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週소득의 60% 수준으로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이때에는 자산크기와 부양자녀의 유무도 실업부조 급여액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밖에 15개월 이상 실업부조를 받아 왔던 실업자가 시간제근로로 취업하는 경우 그는 매주 시간제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특별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시간제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체계적인 단시간근로(systematic short time work)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날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체계적인 단시간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업부조 또한 총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1주일에 3일 근로한다면 실업부조는 2일동안만 지급된다.

그밖의 단시간근로, 가령 1주일을 근무하고 다른 1주일은 일하지 않는 근로형태로 근로기간이 단축·변경될 때 역시 일하지 않는 주에 대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다) 비정규직 근로(casual work)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일수 및 급여수준 등은 실업급여와 동일하다.

만일 1주일에 1일, 2일 또는 3일을 일하며 실업부조를 신청할 경우 일한 날에 대한 근로소득은 자산평가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실업부조의 최대 일급여액에 1일 15파운드를 합한 금액을 순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산심사시 자산으로 고려된다.

라) 야근(night work)

앞의 실업급여 부분에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하면서 야근(밤 12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에 종료)을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단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 역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오직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근로자의 야근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마) 자영업

자영업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득부조가 지급된다.

#### 2) 실업부조의 급여수준

실업부조는 우선 연령이 아닌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된 개인별 지급율과 자산의 크기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15개월(390일) 동안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실업자라면 장기의 실업부조율에 따라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 1인당 40파운드, 부양자녀 1인당 13.20파운드씩이 추가된다.

남편과 부인이 모두 소득부조를 신청하였을 경우는 이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부조액은 개인별 실업부조액에 부양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에 상당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회부조나 연금 또는 실업부조를 수급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실업부조를 신청하였을 경우 부부 모두가 신청하였을 경우의 실업부조액 보다는 낮은 수준의 실업부조액을 지급받는다.

#### 3) 실업부조의 지급기간

실업부조는 통상적으로 신청일 이후 4일후부터 매주 지급된다. 그러나 만일 실업부조 신청 이전 52주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던 실업자라면 실업부조를 신청한 당일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실업부조는 실업기간중 소득부조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55세가 되는 해에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업부조 대신 조기퇴직수당(Pre-Retirement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다.

#### 4) 실업부조의 신청 및 지급

실업부조를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전직실업자인 경우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보장사무소에 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실업부조는 보통 수표로 매주 지급되지만 지역 사회보장사무소에서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거주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지정 우체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우편환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우편환으로 매주 지급된다.

그리고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우체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우편환으로 지급될 수 있다.

#### 5) 그밖의 부가급여

실업부조 이외에도 실업부조 수급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 버터교환권(Butter Voucher) : 실업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버터를 살 수 있는 교환권 지급
- 연료수당(Fuel Allowance) : 15개월 이상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연료비 명목으로 연료수당 지원. 10월 중순부터 익년도 4월중순까지 지급된다.
- 무연연료수당(Smokeless Fuel Allowance) : 더블린(Dublin)이나 콕(Cork)과 같은 유연연료의 판매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13주 이상 받고 있는 경우 무연연료수당 지원
- 집세 또는 은행담보물에 대한 이자 지원(Rent and Mortgage Interest Supplement) :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집세와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보조
- 학령기 자녀를 위한 의복 및 신발수당(Back to School Clothing & Footwear Allowance) : 학교에 입학할 연령의 자녀의 의복과 신발을 구입할 비용을 지원. 매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지급된다.
- 의료카드(Medical Card) :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카드를 지급받는다. 의료카드 소지자는 병원진료비 및 조제비 등이 무료이다. 의료



카드를 지역보건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서 발급한다.

#### 6) 시간제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기실업자가 시간제근로로 취업하는 경우 특별 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 소득보조금을 받으려면 실업부조 수급자가 장기의 실업부조 수급유를 적용받기 이전부터 시간제근로를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근로라 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주일에 24시간 미만의 근로
- Class A 또는 J의 사회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근로
-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

시간제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실업자는 통상적인 실업부조 대신에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보조금의 수준은 독신, 부부/동거 또는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보조금은 시간제근로에 대한 임금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7) 자산심사

실업부조를 수급하기 위해서 실업부조 신청자는 반드시 자산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심사대상이 되는 자산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주택은 제외)
- 신청자에게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숙비용
-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의 일부
- 투자액과 재산(주택은 제외)의 현금가치, 은행의 저축계정의 잔고, 현금

자산의 크기는 위의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 자산을 모두 합하여 투자액 및 재산의 현금가치 등은 그것의 5% 그리고 은행잔고의 10% 등으로 기준하여 산출한다. 1주의 자산가치는 이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신청자의 연간 자산가

치를 52(1년은 52주)로 나누어 평가된다.

#### 라. 아일랜드 사회보험급여 및 사회부조 지급의 최근 동향

사회보험급여지급을 실업자 지원 및 고용지원으로 나눌 경우 이들 부문에 있어 '97년도 전체 소요비용은 '96년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실업자 지원을 위한 지출은 8.6%나 증가하였다. 다만 실업자 지원중 실업부조의 경우에는 '96년에 비해 무려 11.8%나 감소한 반면 실업급여는 3.8%가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96년에 비해 46.5%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지원 중 실업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시 관련비용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수당(Area Based Enterprise Allowance), 재취업수당(Back to Work Allowance), 재교육수당(Back to Education Allowance)을 중심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 가족소득보조를 위한 지출은 18.7% 증가하였다.

<표IV-35> 실업자 및 고용지원에 대한 비용지출('96~'97년도)

(단위 : 아일랜드 파운드, %)

사회복지급여지급 항목	'96년도	'97년도(추정 치)	전년도 대비 증감율(%)
전체	1,095,370	1,047,392	-4.4
실업자 지원			
합계	1,011,152	924,003	-8.6
사회보험급여			
실업급여	207,380	215,280	3.8
실업급여와 더불어 지급 되는 임금 관련급여1)	49	1	-98.0
사회부조			
실업부조	803,723	708,722	-11.8
고용지원			
합계	84,218	123,389	46.5
가족소득보조	21,888	25,989	18.7
취업수당	40,063	58,565	46.2
학생 하계방학 취업지원 (Students Summer Jobs Scheme)	9,305	9,018	-3.1
지역고용촉진수당 (Area Based Enterprise Allowance)	5,583	15,372	175.3
재취업수당 (Back to Education Allowance)	5,891	12,497	112.1
시간제근로 인센티브 (Part-Time Job Incentive Scheme)	1,418	1,477	4.2
기타2)	70	471	572.9

주: 1) 실업급여와 더불어 지급되는 임금 관련 급여는 '94년 7월 28일부터 처음 신청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여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예컨대 Jobstart Scheme 참여자에 대한 크리스마스 보너스(Christmas Bonus), 취업을 하는 장기실업자의 아동수당(Child Benefit)에 대한 계속지급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됨.

자료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표IV-36> 연도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에 대한 지원실적('88~'97년도)

(단위 : 아일랜드 파운드)

연도	전체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더불어 지급되는 임금관련급여	실업부조
1988	675,458	215,249	20,160	440,049
1989	684,635	186,254	14,911	483,470
1990	706,222	172,211	11,981	522,030
1991	830,384	213,291	14,760	602,333
1992	980,421	242,380	18,662	719,379
1993	1,048,179	240,073	19,396	788,710
1994	1,030,684	215,108	16,047	799,529
1995	1,003,491	200,716	3,764	799,011
1996	1,011,152	207,380	49	803,723
1997 <sup>1)</sup>	924,003	215,280	1	708,722

주: 1) 1997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표IV-37> 연도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와 smallholders('88~'97년도)

(단위 : 명)

연도	전체	실업급여	실업부조	smallholders
1988	231,166	76,452	139,651	15,063
1989	220,181	64,423	141,107	14,651
1990	211,982	58,644	140,318	13,020
1991	236,930	69,354	155,306	12,270
1992	269,216	75,914	181,048	12,254
1993	285,513	75,508	198,491	11,514
1994	275,246	66,201	198,509	10,536
1995	267,911	61,122	196,792	9,997
1996	265,118	60,927	194,794	9,397
1997 <sup>1)</sup>	237,068	60,867	167,892	8,309

주 : 1) 1997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표IV-38> 1997년도 월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와 smallholders

(단위 : 명)

월	전체	실업급여	실업부조	smallholders
1월	252,205	63,021	180,666	8,518
2월	249,589	63,468	177,618	8,503
3월	249,346	65,507	175,401	8,438
4월	240,843	59,711	172,743	8,389
5월	231,092	56,604	166,197	8,291
6월	232,935	58,327	166,214	8,394
7월	237,230	61,307	167,625	8,298
8월	238,831	62,612	167,878	8,341
9월	230,853	58,076	164,498	8,279
10월	224,199	57,926	158,092	8,181
11월	226,046	59,936	157,992	8,118
12월	231,649	63,914	159,777	7,958
월평균	237,068	60,867	167,892	8,309

자료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 마.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 1) 재취업수당(Back To Work Allowance)

3년까지 사회보험급여를 받으며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실업자 또는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 해에는 급여의 75%를 지급받으며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는 각각 50%와 25%씩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 이외의 연료수당, 버터교환권, 임대료 및 은행담보물 이자보조 그리고 의료카드와 같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 시간제근로에 대한 인센티브(Part-Time Job Incentive)

1주에 3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15개월 이상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당 24시간까지 일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임금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

는 표준 週보조금을 받는다.

### 3) 지역고용(Community Employment) 프로그램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12개월 이상 지급받고 있는 22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지역고용에 관해 주 39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시간 이외에 별도로 자신의 소득보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주당 소득이 250파운드 보다 작을 경우에는 의료카드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 이외의 연료수당과 같은 부가급여도 수혜가능하다.

### 4) Jobstart 프로그램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3년 이상 받고 있는 경우 해당한다. Jobstart 프로그램하에서 고용주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52주 동안 1주에 80파운드의 채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채용된 사람은 3년동안 의료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이 1주에 250파운드 보다 적은 사람인 경우 이전부터 받아 왔던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 이외의 부가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족 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도 받을 수 있다.

### 5) 직장경험(Workplace) 프로그램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경우의 실업자는 이 프로그램하에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기업에 5주 동안의 직장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해당자는 통상적인 사회보험급여 또는 사회부조와 의료카드와 같은 그밖의 부가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당 15파운드의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받을 수 있다.

### 6) 전일제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Whole Time Jobs Option/Job

Initiatives)

5년 이상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36세 이상의 실업자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년간 전일제 근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료카드와 가족소득보조도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7) 지역고용촉진수당(Area Enterprise Allowance) : 특정지역에서만 활용 가능

지역파트너쉽(Area Partnership) 기업들은 자영업을 하기 원하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다양한 도움과 훈련을 제공한다.

12개월 이상 실업되어 있으면서 파트너쉽 지역에서 거주하고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지역고용촉진수당(Area Enterprise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촉진수당을 1년 받고 나면 그 이후엔 재취업수당(Back to Work Allowance)을 3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다.

8) 장기실업자를 위한 시간제근로 제공 프로그램(CORI-Part-Time Job Opportunities Scheme)

1년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22세 이상인 실업자 그리고 조기퇴직수당 수급자 등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시간제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교육이 제공되며 그 기간중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는 연료수당과 같은 부가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고용(Community Employment)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받는 차이가 있다.

9) 지방고용서비스(Local Employment Service)

이들 서비스는 직장, 직업정보, 직업상담, 교육, 직업훈련, 고용지원 그리고

Job Club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 10) Step

정부가 최근에 청소년의 취업을 위해 새로이 마련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하에서 6개월 이상 실업하고 있는 18~19세의 청소년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11)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따른 지원(VTOS :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

6개월 이상 실업하고 있는 21세 이상의 실업자는 VTOS(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에 참여하면서 중등교육훈련수당(Second Level Allowance) 및 고등교육훈련수당(Third Level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VTOS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중에 사회보험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가) 중등교육훈련수당(Second Level Allowance)

VTOS(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에 의해 6개월 이상 실업하고 있는 21세 이상의 실업자는 지역전문학교, 종합학교, 중등학교 또는 직업학교 등을 다닐 수 있다.

그 과정은 그러나 반드시 전일제 수업이어야 하고 중등교육수료증(Junior Certificate), 중등교육이수증(Leaving Certificate) 또는 ‘시 및 길드 인증서(City & Guild Certificate)’ 등과 같은 공인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최고 실업급여액 만큼의 지원금과 도서구입수당(연 1회)을 받는다. 학교방학기간에는 일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 나) 고등교육훈련수당(Third Level Allowance)

VTOS(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cheme)에 의해 6개월 이상 실업하고 있는 21세 이상의 실업자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



하고 있는 대학교, 전문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최고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지원금과 도서구입수당(연 1회)을 받는다.  
학교방학기간에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의 청소년이 고등교육훈련수당(Third Level Allowance)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부가 그 사람의 고용전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대학원과정 진학에도 지원할 수 있다.

#### 12) 학생 하계방학 취업지원 프로그램(Students Summer Jobs Scheme)

이것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이들에게 여름방학기간중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6~17주 동안 200시간까지 일함으로써 소정의 소득한도까지 자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일자리 알선은 해당 학생과 후원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며 주당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8. 호주

#### 가. 호주의 실업부조제도

호주는 자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실업자 또는 이주한지 104주 이상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업자 소득보장(Income Security for the unemployed)」이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내에서 실업자 및 그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실업자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게 지급되는 실업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고, 둘째, 실업자의 자립과 재정적인 독립에 대한 유인성을 제공하며, 셋째, 18세 미만의 실업자에 대해 부모의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은 1년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과 1년 이상 장기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및 중고령수당(Mature Age Allowance)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6년 9월 20일 이후로는 구직수당을 지급하던 18세 이상의 실업자는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으로, 그리고 18세 미만의 실업자는 청소년훈련수당으로 통합되었다.

<표IV-39> 호주의 실업관련 수당 및 수급연령

수 당	대상자와 목적
청소년훈련수당 (Youth Training Allowance;Y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이상, 18세 미만</li> <li>· 청소년이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새출발수당 (Newstart Allowance;N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60세 미만</li> <li>·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li> </ul>
중고령수당 (Mature Age Allowance;M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연령(65세) 미만</li> <li>· 다른 소득지원을 받아 왔고, 최근의 근로경험이 부족해서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는 노령의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li> </ul>

한편 실업자는 위의 수당 이외에도 주택임대보조금(Rent Assistance), 벽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특색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사회보장측면에서 전적으로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소득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노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고 일반조세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사회보장에서 실직자와 학생에 대한 소득보장을 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6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자와 학생을 위한 소득보장의 목적은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다. 즉 실직자와 학생을 위한 소득보장은 하나의 연장선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실업관련수당

##### 가)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YTA)

청소년훈련수당은 구직수당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참여 또는 직장탐색 활동 중에 있는 18세 미만의 실업청소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일 도입되었다. 이 수당은 ‘고용·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DEET)’가 아닌 ‘사회보장부’ 예산에서 지급된다.

#### (1) 자격

청소년훈련수당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실직자이고, 공인된 교육, 훈련, 구직 또는 다른 고용준비활동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근로 불가능한 경우
- 16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경우(특정 조건에서는 15세 미만도 가능)
- 승인된 훈련과 자발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가 불가능한 YTA 수급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YTA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청소년훈련수당을 받던 자가 만 18세가 되면 자신의 2주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의 내용을 담은 소득자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자술서는 새출발수당을 위한 신청서로 간주되고, 그 이후부터 청소년훈련수당지급이 정지되며 대신 새출발수당을 받게 된다.

새출발수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소년훈련수당의 수급자는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심사를 한다. 부모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당이 삭감되며, 부모 소득, 자산심사 이후에는 당사자 소득심사를 한다.

청소년훈련수당 수급의 대기기간 및 대기기간 연장 또는 정지는 새출발수당과 동일하다

#### (2) 급여수준

구 분	급여액
독신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최고 \$145.40
독신이며 집을 떠나 공인된 실직기관에 있는 경우	최고 \$240.00
부양아동이 없고 독립한 독신의 경우	\$240.00
부양아동이 있는 독신의 경우	\$347.50
부양아동이 없는 부부의 경우	\$240.00
부양아동이 있는 부부의 경우	\$290.90
취직 수당	\$50
입학 수당	\$200

#### 나) 새출발수당

새출발수당은 일시적으로 실업한 18세 이상인 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 그의 소득부조를 위해 지급된다.

##### (1) 수급요건

- 18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연령(65세) 미만인 경우
- 실직자로 등록된 경우(실업자)
- 연방고용청에 등록된 자
-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승인된 훈련 또는 직장체험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구직활동서약서(activity agreement)을 작성하고,<sup>36)</sup> 서약서 내용을 준수

36) 「새출발구직활동서약서(Newstart activity agreement)」에 포함될 내용을 위해 실업자와 그의 구직활동을 돕게 될 연방고용청의 직원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논의에는 개인의 교육, 기술, 경험, 연령, 육체적 조건, 노동시장 상황, 훈련시설의 이용가능성 등과 관련한 요소들이 참고된다. 이렇게 작성된 구직활동서약서는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진술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직업훈련
- 효율적인 구직활동 연습
- 직장체험
- 의료 또는 재활활동
- 연방고용청(CES)의 노동시장프로그램에의 참여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근로할 능력이 없는 NSA 수급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NSA를 받을 수 있음

1996년 7월 1일부터 구직수당 및 새출발수당 수급자의 경우 소득부조금의 수급이전 12개월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9개월로 단축되었다.

1996년 3월부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의 능력이 상실된 실업자는 새출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기간에 한하여 구직활동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출발수당 수급자는 청소년훈련수당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출발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연령, 소득, 결혼여부, 그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크기가 결정되어 지급된다.

## (2) 신청

새출발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연방고용청에 실업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실업등록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사회보장사무소에 수당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출발수당의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 이 때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직확인서를 당장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청서 제출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대기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지만 특정의 경우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대기기간은 실업자가 연방고용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새출발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승인된 훈련 및 자발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나 모든 풀타임의 교육훈련과 자원봉사는 연방고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37)</sup>

---

· 자원봉사와 같은 그밖의 활동

37) ‘자원봉사(voluntary work)’란 적어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남아있는 18~49세 인 자가 1년에 30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50세 이상인 자가 1년에 65일까지 풀타임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NSA 급여는 독신/부부, 부양아동의 유무, 연령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불한다.

###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구직활동과 관련한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새출발수당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한다.<sup>38)</sup>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 알선해 주는 직장에 취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 사회보장부 또는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직장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고용·교육·훈련부(DEET)’가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 노동시장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구직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꺼이 준수할 수 있는가

### (4) 수당의 가불(假拂)

새출발수당을 3개월 이상 지급받고 있던 자는 미래에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수당을 사전에 가불 받을 수 있다. \$500까지는 일반적인 직장탐색을 위하여 그리고 \$1,000까지는 새출발수당의 구직활동서약서에서 인정된 구직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불이 가능하다. 단 \$1,000를 가불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에 한한다.

###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및 교육수강장려금(Education Entry Payment)

장기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수급

---

를 말한다.

38)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예전에는 질병수당(Sickness Allowance)으로 전환되었던 것이 1996년 3월부터는 기존에 수급하고 있던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기간에 한하여 구직활동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0(18세 미만)과 \$100(18세 이상)을 지급한다. 1994년 5월부터 1995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이 취업장려금을 받은 실업자는 62,640명이었다.

한편 1994년 1월부터 12개월 이상 연방고용청에 실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수급자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200의 교육수강장려금을 지원한다.

#### 다) 중고령수당

60세 이상 65세 미만(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중고령자가 실업한 경우 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본 수당을 지급한다.

중노령수당은 본래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얻기 힘든 중고령의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96년 7월 1일 이후로는 새로운 수급 대상자를 허용하지 않는 한시적 조항에 의해 1994년 3월에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1995~96년도 예산 수립 시 정부는 중고령수당 제도를 영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더욱이 중고령자의 실정에 보다 적절하게 수당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 (1) 자격

1996년 7월 1일 전까지는 중고령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

- 60세 이상 노령연금 연령(65세) 미만인 자
- 실업수당을 12개월 이상 수급한 자
- 중고령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이전에 연방고용청에 실업자로서 12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자
- 최근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근무경험이란 지난 12개월 중 13주 이상 동안 최소한 주당 20시간의 근로를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본래 폐지하기로 했었던 중고령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급조건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다.

1996년 6월 30일 현재 중고령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은 1996년 7월 1일 이전의 조건하에 중고령수당 지급을 계속해서 받는다.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고령연금체제하의 소득 및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수당체계하의 소득 및 자산심사를 받아 수당을 지급받는다.

1996년 7월부터 ‘수당지급 이전 연방고용청에 12개월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되었다.

한편 중고령수당 지급시 신청자의 구직활동심사는 행하지 않는다.

## (2) 수당의 신청 및 수급

사회보장사무소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실업자 중에서 중고령수당의 수급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그에게 ‘당신은 ○년 ○월 ○일부터 중고령수당의 수급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사회보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신청서는 당사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구하여도 얻을 수 있다.

중고령수당의 지급액은 독신의 경우 \$347.80, 부부의 경우 각각에게 \$290.10이다. 수당의 지급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 주택금융조합 또는 신용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당은 2주 단위로 지급되지만 \$500까지는 한번에 선불로 받을 수 있다(단, 그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으나, 그 다음의 26주부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고령수당 수급자가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전임이나 시간제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새출발수당과 마찬가지로 \$200의 교육수강장려비(Education Entry Payment)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취업으로 인하여 중고령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 교육수강장려비는 \$100로 삭감된다.

만약 중고령수당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65세 이상)이 되면 중고령수당은 자동적으로 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노령연금으로의 전환 이전에 사회보장사무소는 중고령자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송부하여 그 사실을 알리게 된다.

한편 중고령수당은 수급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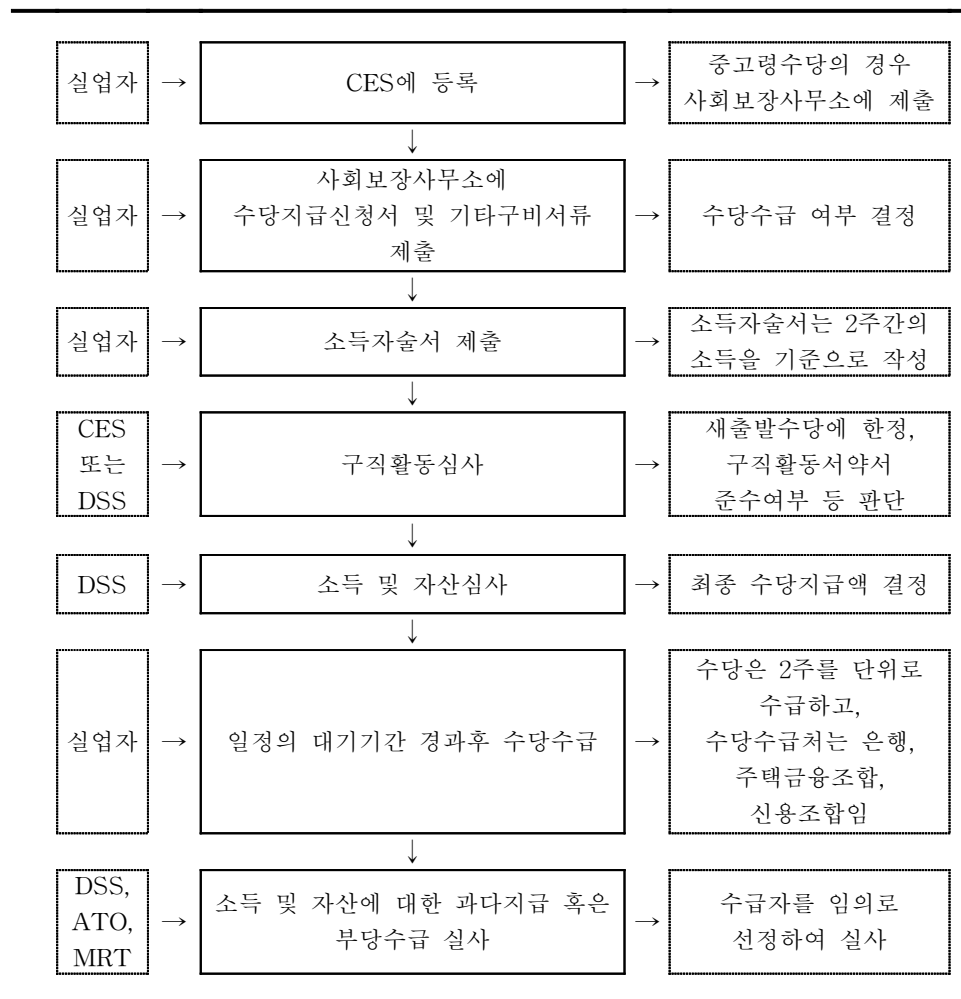


에도 지급된다(1996년 6월 30일까지는 26주였음).

#### 라) 실업관련 수당 신청 및 수급절차

실업관련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sup>39)</sup>. 신규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영주권자 포함)는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림Ⅳ-4] 청소년훈련수당 및 새출발수당 수급절차



39) 뉴질랜드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우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주 : CES ; 연방고용청(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  
DSS ;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ATO ;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MRT ; 소득 및 자산 실사팀(Mobile Review Teams)

#### (1) 실업등록 및 신청서 제출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는 우선 연방고용청(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 ; CES)에 실업등록하여야 한다. 중고령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는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서류를 구하고 작성한 후 신청한다.

수당신청서 제출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자신 및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지급 신청서는 사회보장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역사무소와의 거리 및 시간, 교통비, 풀타임의 훈련과정의 참여,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능력 상실(의사의 소견서 필요)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만일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면 소득부조금(수당) 지급일 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후 소득자술서를 발부받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2주마다 지정한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2주마다 소득자술서를 제출하면서 2주마다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면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50세 이상
- 이미 12개월 이상동안 수당을 받은 자
- 수당을 과다지급 사례가 없는 자
- 정기적인 파트타임 소득이 없는 자
- 고령연금 수급연령(만 65세) 이전 6개월 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자

청소년훈련수당, 새출발수당 또는 중고령수당 신청자가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의 고용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부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받은 고용주는 법률에 의해 이직확인서를 청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보상금, 휴가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

신청자가 실업자가 위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사무소의 직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 (2) 소득 및 자산심사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3개월 이상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부의 담당직원과 수당수급 자격, 수급액, 수급지속의 조건,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면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신원, 연령, 거주지, 소득 및 자산과 관련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있지 아니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심사대상이 된다<sup>40)</sup>.

소득심사시 기준은 수급자의 2주간 소득이며, 기준소득 이상인 경우 수당에서 일정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표IV-40참조). 자산심사의 경우에는 자산한도기준액을 초과하면 매 1,000달러 이상 초과시 수당수급시 3달러가 감액된다(표IV-41참조). 그런데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 수급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로 발생하는 60달러의 소득까지는 소득심사시 영향을 주지 않게 하였다.

<표IV-40> 2주간 소득기준에 따른 수당감액

(단위 : 호주달러)

---

40) 부모의 자산이 393,7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당의 최저 수준인 65.75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 수당 또는 원호연금 또는 교육지원금(Austudy)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구 분	감 액
60달러 미만	수당이 감액되지 않음
60이상 140달러 미만	달러당 50센트
140달러 이상	달러당 70센트

<표IV-41> 자산심사시 기준한도액

(단위 : 호주달러)

구분	자산한도액
자택을 소유한 독신	118,000
자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독신	202,000
자택을 소유한 부부	167,500
자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부	251,500

주: 자산한도액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수당지급액 결정

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률과 소득 및 자산심사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수당수급률의 크기는 수급자 연령과 자녀 또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표IV-42>와 <표IV-43>와 같다.

수당은 소정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2주를 단위로 지급되며(18세 미만은 1주도 가능),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또는 신용조합(credit union)을 통해 지급된다.

<표IV-42> 부부기준의 수당수급률

(단위 : 호주달러)

구분	2주당 수급률
자녀를 가진 부부 모두 18세 이상 또는 21세 이상	(각각) 290.10
자녀를 갖지 않은	
21세 이상 부부	(각각) 290.10
18~20세 부부	(각각) 265.50
18세 미만 부부	(각각) 240.00
부양자녀 있는 18세 미만의 독신(청소년수당만해당)	(각각) 240.00

<표IV-43> 독신기준의 수당수급률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2주당 수급액
부양자녀 없는 독신	
18세 미만(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45.40
18세 미만(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사는 경우)	347.50
18세 미만(CES의 승인아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240.00
18세 미만 최저(부모와 동거 또는 독립하여 기거)	65.75
18~20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174.80
18~20세(CES의 승인아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265.50
21~59세	321.50
60~64세	347.80
부양자녀 있는 18세 이상의 독신	347.80
부양자녀 있는 18세 미만의 독신(청소년수당만 해당)	336.10

(4) 대기기간 및 대기기간의 연장 또는 정지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의 수급시 대기기간은 28일이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수당의 지급이 특정기간 연장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①실업이 근로계약의 종료로 기인하는 경우와 실업한지 28일 이내에 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대기기간이 7일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기간의 연장은 12개월마다 1회만 적용된다.

②실업한 시점 또는 (실업된 후 4주 이내로) 수당신청을 한 시점에서 개인의 유동자산이 10,000달러(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0달러(독신인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 대기기간이 7일 연장된다. 유동자산의 법정 제한액 초과에 따른 이러한 대기기간의 연장도 12개월마다 1회만 적용된다.

③연방고용청이 판단하기를 수당수급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거주지역을 옮기면서 자신의 취업전망을 고의로 어둡게 하는 경우

➡ 통상적인 대기기간에 12주가 추가된다.

④난민 또는 인권보호 차원의 이민자가 아닌 그밖의 신규 이민자의 경우

➡ 대기기간은 26주이다.

⑤적어도 6개월 이상의 풀타임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폐강 혹은 종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개월 사이에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21세 이상의 경우의 대기기간은 6주이고, 21세 이상이지만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또는 21세 미만의 경우의 대기기간은 13주이다. 그러나 특별히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대기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⑥실업이 직·간접으로 충분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징계로서 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러한 실업이 처음으로 발생할 때에는 2주동안 수당지급이 정지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8주동안 수당지급이 정지된다.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해 그 후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 6주의 지급정지 기간이 추가된다.

#### (5) 수당지급의 제한

청소년훈련수당이나 새출발수당을 현재 수급하고 있는 자도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별한 사유없이 연방고용청에서 알선하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한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면담을 거절하거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새출발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연방고용청에서 알선하는 적절한 훈련과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처음으로 지급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수당을 재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의 지급정지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번째의 지급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는 8주가 경과하여야만 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다. 3번째 이후부터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6주 이내에는 수당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6) 수당의 과다수급 또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실사

실업관련 수당 수급자의 실사는 수당이 지급된 후 12주후에 우편으로 시행된다. 1994년 3월부터 전체 수급자의 40%가 이러한 우편을 통한 실사를 받고 있다.

또한 12주 후부터는 임의로 선정된 수급자(전체 수급자의 10%)를 대상으로 ‘사무실 면담(in-office interview)’이 행해진다.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훈련수당 수급자는 매년 사회보장부와 연방고용청의 공동면담을 해야 하고 수당신청을 하게 되는 2주마다 면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출발수당 수급을 1년 이상 2년 미만동안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면담이 그리고 3년째부터는 사회보장부와 연방고용청 공동의 심층 면담에 응해야 한다.

이밖에 이동실사팀(Mobile Review Teams)에 의해 수당수급자 중 임의로 선택하여 실사를 하기도 한다.

한편 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ACM(Accelerated Claimant Matching) 시스템과 Data-matching Program 등의 전산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ACM 시스템은 사회보장부로부터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하고, Data-matching Program은 연방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수급자의 신원, 수당지급액,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실업관련 수당의 잘못된 과다수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1994~95년 사이에 구직수당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부는 639건의 부당수급사례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1991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위반으로는 665건을 기소하였다. 1914년 제정된 형법(Crimes Act)에 의해서는 42건을 기소하였는데 그 중 40건이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당의 과다수급 또는 부당수급 방지 노력으로 통해

1994~95년 사이에 8,710만달러의 수당의 과다수급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조치함으로써 5,250만달러의 부채 감축효과를 보았다.

마) 실업관련 수당의 지급실적

1994~95년의 실업자에 대한 실업관련 수당지급 총액은 <표IV-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부 지출의 22%인 78조달러였다(운영비 포함). 이중 사업비 74조달러만을 고려하면 그 중의 49.6%인 36.8조달러가 새출발수당으로 지급되었고, 45.6%인 33.8조달러가 구직수당으로 지출된 것이다.

1995년 5월 현재 청소년훈련, 구직수당 그리고 새출발수당의 수급자수는 총 794천명이다. 이중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그리고 청소년훈련수당 수급자는 각각 21천명(3%), 393천명(49%) 그리고 379천명(48%)으로 나타났다(표IV-45참조). 1995년의 호주 경제활동인구가 9,001천명이었으므로 경제활동인구의 8.8%가 실업관련 수당을 받은 셈이다. 이것을 1994~95년 사이에 실업자 1인당 실업수당 평균수급액으로 환산하면 9,364달러로 추산된다.

구직수당의 월평균 수급자 추세를 보면 1992년 544천명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1995년 5월에는 393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새출발수당 수급자수의 정점은 1991년 7월의 164천명이었다. 1995년 5월 새출발수당 수급자가 실업수당 전체 수급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월의 47%에서 48%로 상승하였다.

수당 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우선 성별 비중은 남자(71%)가 여자(29%)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구직수당이나 새출발수당 모두 25~34세의 연령대에서 수급자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수급자의 결혼여부는 결혼한 실업자가 27%고 독신의 실업자가 73%로서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당을 수급하는 사례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5년 5월 현재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94천명의 행위를 분석한 결과 단기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는 3.2%에 불과하고 94.3%가 직장탐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46참조).

<표IV-44> 실업관련 수당 지급실적



(단위 : 1,000달러, %)

항 목	1993~1994(집행)				1994~1995(집행)			
	소계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중고령수당	소계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중고령수당
사업비 (A)	7,676,575 (100.0)	3,653,536 (47.6)	3,945,484 (51.4)	77,555 (1.0)	7,435,265 (100.0)	3,389,154 (45.6)	3,687,622 (49.6)	358,489 (4.8)
운영비 (B)	427,913 (100.0)	234,935 (54.9)	192,978 (45.1)	0 (0.0)	365,338 (100.0)	198,768 (54.4)	162,959 (44.6)	3,611 (1.0)
총운용비 (A+B)	8,104,488 (100.0)	3,888,471 (48.0)	4,138,462 (51.1)	77,555 (0.9)	7,800,603 (100.0)	3,587,922 (46.0)	3,850,581 (49.4)	362,100 (4.6)

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Annual Report(1994~95)

## &lt;표IV-45&gt; 실업관련 수당 수급인원 실적(1995년 5월 현재)

(단위 : 명, %)

	계	청소년훈련수당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794,821 (100)	21,162 (3)	393,831 (49)	379,828 (48)
성별				
남자	559,439 (71)	11,246 (53)	268,257 (67)	279,936 (74)
여자	235,382 (29)	9,916 (47)	125,574 (33)	99,892 (26)
연령별				
18세 미만	37,401 (4)	20,865 (99)	16,534 (9)	2 (0)
18~20	112,567 (15)	297 (1)	69,727 (18)	42,543 (11)
21~24	142,734 (18)	0	78,579 (19)	64,155 (17)
25~34	202,237 (25)	0	101,556 (23)	100,681 (26)
35~44	137,768 (17)	0	61,505 (14)	76,263 (20)
45~54	103,624 (13)	0	40,571 (10)	63,053 (17)
55~59	43,674 (5)	0	14,571 (4)	29,193 (8)
60~64	14,726 (2)	0	10,788 (3)	3,938 (1)
결혼여부				
독신	564,523 (73)	20,490 (97)	286,892 (76)	257,141 (69)
결혼	230,298 (27)	672 (3)	106,939 (24)	122,687 (31)
결혼자중 부양자녀				
있음	138,893 (60)	63 (9)	62,286 (58)	76,544 (62)
없음	91,405 (40)	609 (91)	44,653 (42)	46,143 (38)

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Annual Report(1994~95)

## &lt;표IV-46&gt; 구직수당 및 새출발수당 수급자의 활동형태(1995년 5월 현재)

(단위 : 명, %)

계	직장탐색	단기훈련과정 참여	이민자교육과정 참여	일시적 질병	기타
794,821 (100.0)	749,144 (94.3)	25,817 (3.2)	1,829 (0.2)	15,190 (1.9)	2,841 (0.4)

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Annual Report(1994~95)

## 9. 중국

### 가. 실업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기업혁신의 진전에 따라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고용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자수의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의 고용위기는 이제까지의 고용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950년대에 정부는 ‘이공대진(以工代賑 ; 일을 주어 실업자를 구제함)’의 방법으로 구사회가 남겨 놓은 400만명의 실업자에 대해 직장을 제공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다. 1960년대에는 대중운동, 행정명령 등의 수단으로 대약진의 후유증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처리하여 기업이 감원시킨 약 2,000만명을 농촌으로 돌려보냈고 또한 일부의 도시 사람들도 농촌으로 이주시켜 고용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돌아갔던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복무기업(勞動服務企業)을 운영하는 등 고용정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었다. 다행히 1980년 이후 들어서는 개방·개혁정책 도입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였고, 그 덕분에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최근의 고용위기에 대해 중국정부가 그 전에 사용했었던 ‘이공대진’ 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일사불란한 채용이나 인원 배치 등의 실업대책으로는 예전만큼의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정책, 예컨대 노동시장의 정비와 같은 새로운 실업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실업보험제도는 바로 이러한 시장경제의 변화에 대응해 도입된 것이라 하겠다.

## 나. 실업보험 관련법

지금까지 수차례의 고용위기를 넘기기 위해 중요한 고비마다 중국 정부는 실업자의 생활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공포해왔다. 1950년 5월 19일 정부가 공포한 ‘실업자 구제에 관한 잠정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률은 실업보험의 각도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사회구제와 실업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한 것이다. 보다 중요한 법률로서 1986년에 공포한 ‘국영기업 근로자 대업보험 잠정규칙<sup>41)</sup>(이하 ‘실업보험잠정규칙’으로 칭한다)’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은 실업보험 대상을 국영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문제와 실업보험에 관한 중국 초기의 법규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업보험잠정규칙’이 공포된 이후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제정한 주요한 법규는 <표IV-4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 1993년의 ‘국유기업근로자 대업보험규정(이하 ‘실업보험규정’으로 칭한다)’과 ‘국유기업부여공안(배치)규정’도 중국의 실업보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률로 남아 있다.

<표IV-47> 주요 실업보험 관련 법규

년 월 일	법 규 명	공포부서
1986. 7. 12	국영기업 근로자 대업보험 잠정규칙(실업보험잠정규칙)	국무원
1984. 3. 20	향진대업자(실업자)의 등록관리법	노동인사부
1989. 4. 21	국영기업공 대업기금관리법	"
1992. 5. 3	집단소유기업근로자 대업보험 관리에 관한 통지	"
1992. 10. 19	대업보험 운영관리체제에 대한 통지	"
1993. 4. 12	국영기업 근로자 대업보험규정(실업보험규정)	"
1993. 4. 20	국영기업 富余공안(배치)규정	"

1993년의 ‘실업보험규정’은 1986년의 ‘실업보험잠정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법률인데 ‘실업보험잠정규칙’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표

41) 중국에서는 失業保險을 待業保險이라고 부른다.

IV-48참조).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실업보험규정’은 실업보험제도 확립의 목적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예를들면 실업보험제도의 확립 목적이 노동력의 합리적 이동의 촉진에 있다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국유기업의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실업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사회안정의 유지 등 실업보험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실업자의 증대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됨을 인식하고, 사회보험의 정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그 다음의 큰 변화는 실업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실업보험규정’에서는 ‘실업보험잠정규칙’에서 정한 네가지 종류의 실업자 외에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 회사의 정리 또는 해산을 명령받은 기업의 근로자들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또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국유기업으로부터의 실업자 대부분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IV-48> 1986년과 1993년의 실업보험 규정의 비교

항 목	1986년 실업잠정규칙	1993년 실업보험규정
적용 범위	①파산을 선고한 기업의 근로자 ②파산이 임박한 기업의 법정 정리기간 중의 퇴직자 ③근로계약이 정지 또는 해지된 근로자 ④기업에서 해고시킨 근로자	왼쪽에 열거된 4종류 외에 ⑤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 회사의 정리 또는 해산을 명령 받은 기업의 근로자 ⑥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를 명령받은 기업의 근로자 ⑦법률 혹은 省, 구, 직할시 정부의 규정에 의해 대업보험을 받는 그 외의 근로자
적용 대상 기업	국영기업	국영기업
공포 목적	근로지도 개혁의 추진 노동력의 합리적 이동 실업자 생활의 보장	국유기업의 노동관련제도의 개선 실업자 기본생활의 보장 사회안정의 유지
실업보험금 조달과 관리	①기업이 납부하는 대업보험 기금 ②대업보험 기금의 이자수입 ③지방재정에 따른 보조금	좌동
보험 효율	기업은 근로자 표준임금총액의 1%에 상당하는 비율로 보험금을 납부	기업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0.6~1%
기금의 용도	①대업구제금 ②대업기간 중의 의료비, 장례보조금, 직계친족부양보조금 ③파산기업 정년퇴직자의 어려움, 퇴직금 ④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의 실업구제금 ⑤전직훈련비 ⑥생산자구비 ⑦기금관리비	①은 왼쪽의 ①④와 같고, ②는 ②③과 같으며, ③은⑤와 같고, ④는⑥과 같고 ⑤와⑥도 같다. ⑥정부가 인정한 생활난의 해결과 재취업에 필요한 그 외의 비용
구제 기금 기한	①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최장 24개월분을 지급 ②5년 미만은 최장 12개월분을 지급	①은 왼쪽의①②와 동일. ②구제금의 지급기준은 정부규정내 사회구제금의 120%-150%에 상당

#### 다. 실업보험 적용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에게 실업보험이 적용된다.

##### 1) 파산을 선고한 기업의 근로자

파산을 선고한 기업의 근로자란 ‘기업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행해져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근로자를 말한다. 파산기업의 근로자는 생산중단 또는 생산부진으로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들(= 정공대강자)<sup>42)</sup>과는 다른데 그것은 ‘정공대강자’가 실업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근로계약이 정지 또는 해지된 근로자

중국의 국무원이 공포한 ‘국영기업 근로계약제 시행에 관한 잠정규칙’(1986년 7월 12일)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기업과 근로자 쌍방에게 주어져 있다. 기업측은 ①계약근로자로 수습기간 중 채용조건이 맞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②계약근로자로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해 때문에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③‘국영기업규칙위반직원의해고에관한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의 조건하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①근로안전과 위생조건이 나쁘고, 근로자의 건강이 현저하게 침해받는 것을 국가의 관계기관이 인정한 경우, ②기업이 근로계약이 규정하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 이전까지 상대방 측에게 통고하여 계약해지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파산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잠정규칙’의 ③과 ④의 대상자로 한정되고 있다(표 2의 적용범위 참조). 그러나 적용대상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보험규정’에서는 실업보험 적용대상자를 일곱가지 범주로 확대하였다.

---

42) ‘정강대강자’라는 말은 ①생산중지, 또는 정지 상태의 기업에 있는 근로자, ②사업장에서 퇴직당하거나, 자택이나 기업 내에서 재배치를 기다리는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3)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 회사의 정리 또는 해산을 명령받은 기업의 근로자

1992년 이후 중국은 기업경영 메커니즘의 전환시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중점사항으로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기업개혁의 모델 지역과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개혁, 연합, 합병, 주식합작제, 리스, 경영청부제와 기업의 매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국유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해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기업개혁에 따라 일부의 중소기업이 정리 또는 해산 대상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실업자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 생산중지 또는 기업의 정리를 명령받은 기업의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4) 법률, 법규 규정 혹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 실업보험을 받은 그 외의 근로자

‘실업보험규정’은 국유기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이다.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 예를 들면 외자계 기업의 실업자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가 나오기 전에 ‘실업보험규정’은 법률, 법규, 규정 혹은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규정이라 하는 애매한 개념을 갖고 모든 기업의 근로자를 실업보험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노동법 제9장(사회보험 및 복리)에서 근로자는 ①정년퇴직, ②질병, 상해, ③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체장해 또는 직업병, ④실업, ⑤출산·육아라고 하는 5종류의 사회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나타내고, 실업보험의 대상자를 외자계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규정’에서도 또는 노동법에서도 외자계기업 근로자의 실업보험제도 포함여부를 어느 쪽도 분명히 하지 않고 노동법과는 별도로 ‘실업보험규정’에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규 등에서 적용범위를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5) 지방 법규와 외자계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규정

외자계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고된 종업원의 생활을 보장, 다시 말해 외자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적용 확대와 지방차원의 실업보험법 제정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앙차원의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외자계기업 및 사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합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몇몇의 지방정부 예컨대 상해, 관동, 천진 등 연해지역의 지방정부는 노사관계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동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의 실업보험법규를 공포해, 독자적인 실업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표IV-49참조). 이들 법규에 의해 공인된 실업자는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표IV-49> 주요 지방차원의 외자계기업 실업보험규정과 적용대상

공 포 일	법 규 명	공포기관	적 용 대 상
1993. 2. 16	천진시 외상투자기업중 방직공 대업보험잠정법	시노동국	①파산기업 근로자 ②근로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근로자 ③기업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 ④기업의 생산기술 조건의 변화 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
1989. 4. 15	심양시 노동국 교관의 외상투자기업중 방직공 대업보험 유관문제 통지	시노동국	상동
1992. 10. 15	상해시 대업보험잠정규정	시정부	①전민소유제기업사업부문 ②성진집단소유제기업사업부문 ③외상투자기업 ④주식운영기업 ⑤성진사영기업 ⑥국가기관, 단체 ⑦시정부가 허가한 그 외 부문

자료: 중국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전문위원회 『외상투자기업노동법규편』

#### 라. 실업보험 재원조달 및 보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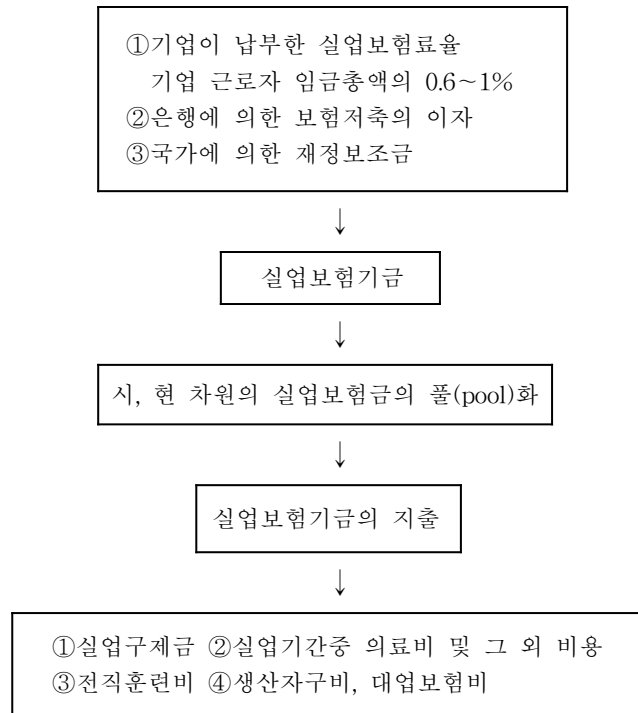


실업보험기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가 <그림 IV-5>에 나타나 있다. 현행 실업보험기금제도하에서 실업보험기금의 재원은 주로 ①기업이 납부하는 실업보험금, ②보험금의 금융기관 이자수입, ③국가 재정보조금 등 3개 부분이다. 결국 근로자 개인에게는 실업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으로부터 실업보험기금 징수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실업보험제도 개혁사에서 논의가 가장 많았던 과제이다. 1986년의 ‘실업보험잠정규칙’에 의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표준임금총액의 1%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때 표준임금이란 기본급, 직무급, 년공급 등을 포함한 임금의 개념이다.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있어서는 1%의 보험료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나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경력이 오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 縣의 국유기업과 같은 경우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연금마저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993년도 공포된 ‘실업보험규정’에서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0.6~1%를 실업보험료로 한다’고 하여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상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실업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태의 변화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을 매월 실업보험관리운영기구가 은행에 개설해 놓은 실업보험 전용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한이 끝난 그 날로부터 일정율로 체납금을 부과한다. 체납금의 징수율은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정한다.

[그림IV-5] 실업보험기금의 조성 및 지출 흐름도



#### 마. 실업보험의 세부사업

중국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실업보험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근로능력과 취업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을 상실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해 정부 또는 사회의 구제기관이 생활구제금이나 그밖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의 실업보험체제는 단순히 실업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전직훈련, 직업소개 등을 통한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서 중국의 실업보험제도가 갖는 여러 기능을 실업관련 법규를 통해 살펴보자.

‘대업보험규정’에서는 실업보험기금이 ①실업자의 실업구제금, ②실업구제금을 받는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의료비, 장례보조비, 직계친족부양보조비, ③실업자의 전직훈련비, ④실업자의 생산 및 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자구비, ⑤

실업보험기금 관리비, ⑥실업자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심사, 허가하는 그 외의 비용지원 등 6개 항목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기금의 지출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실업보험은 두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뉜다. 그 하나가 생활구제기능으로써 위에서 본 ①~②의 지출항목이 실업보험이 갖는 본래의 구제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상해시를 예로 들면 1986년 10월 및 1990년 12월에 시정부는 총 20.3만명의 실업자에게 총 889만원(1인당 평균 43.7元)의 실업구제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총 8,000명의 실업자에게 38만원(1인당 평균 47.5元)의 의료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들 실업구제금과 의료보조금지급은 생산중지 중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실업보험이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고용촉진 기능이다. 위의 ③과 ④의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④의 지출항목은 생산활동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생산자구비제도, 직업소개제도 및 전직훈련제도 모두는 정부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업자만을 구제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이처럼 실업자의 사회복지권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의 측면에서 실업보험금 지급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연관시켜 지원하는 것에서 중국 실업보험제도의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정부는 고용촉진 기능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1992년 10월 19일 '실업보험기금 관리체제 등의 시간에 관한 통보'를 공포하고, 실업보험기금의 관리 및 실업보험의 지급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따로이 구분하여 생각하는 일부의 지방 노동부에 대해 '실업보험관련 사업의 주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있고, 단순히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업기금의 재원조달 및 관리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 실업자의 재취직을 연관시켜 전직훈련과 직업소개 등의 취업서비스와 연계시켜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력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내 노동력취업국과 실업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복리국이 실업보험 관련사업에 공동책임을 가지는 것도 고용촉진과 실업보험의 중요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보험규정’에서 정한 6개의 실업보험기금의 용도는 지출의 목적에 따라 이 6개 항목은 세 종류의 지출로 크게 나뉜다. 첫 번째 종류는 실업구제비의 지출로서 위의 ①~②가 그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 종류는 전직훈련과 생산자립에 대한 지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관리비 및 그 외의 지출이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 종류에 관해 설명한다.

#### 1) 전직훈련비

전직훈련비는 직접 실업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생활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다. 주로 정부가 실업 중인 실업자를 모집해 목적별로 계획을 세워 직업훈련을 하는데 전직훈련비가 사용되며, 그밖에 실업자의 전직훈련용 시설 건축비 및 강사 등의 인건비로도 사용된다.

#### 2) 생산자구비(生産自求費)

‘생산자구비’는 전직훈련비와 같이 실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생활구제금은 아니다. 생산자구비는 주로 실업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고, 이 지원금이 생산자립에 필요한 설비의 구입에 사용된다. 단, 생산자구비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의 융자금이고 반드시 상환해야만 하는 지원금이기도 하다.

한편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노동복무기업 및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과의 협력으로 실시되는 생산자구(生産自求) 사업에서도 생산자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실업보험기금에서 전직훈련비와 생산자구비를 어떤 비율로 지출하는가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정부가 결정하지만 ‘일의 내용과 기금의 지불능력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고, 전용과목을 명시하여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야만 한다’고 ‘국유기업 근로자의 실업보험규정 적용에 관한 노동부의 의견통보’(1993년 5월 7일)에서 관리에 대한 통제규정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직훈련비와 생산자구비를 실업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투기에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 바. 실업보험 세부사업 지원금의 지급기준

실업보험금의 지급종류와 기준은 각 지역의 노동부에서 결정하지만 ‘실업보험규정’에서 정해진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실업보험규정’에 따르면 지급의 종류에는 ①실업구제금(실업보험금), ②실업기간 중의 의료비 및 직계친족의 부양보조금, ③파산을 선고한 기업 근로자의 난직금 및 퇴직금, ④전직훈련비 및 생산자구비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실업구제금 지급기준

실업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실업보험잠정규칙’과 ‘실업보험규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실업보험잠정규칙’은 ‘실업구제금은 근로자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기 이전 2년동안 본인의 평균 연간 표준임금액의 60~7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업보험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정부가 정한 사회구제금의 120~150%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험의 적용대상과 같은 형태로 ‘실업보험규정’은 단순히 지급기준에 관한 원칙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결정권을 각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예를들면 북경시 정부는 실업구제금을 매월 최저 150元, 최고 188元으로 규정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정한 사회구제금의 120~150%에 상당한다. 실업자의 그가 속한 연수에 따라 북경시 정부는 각각 다섯 종류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IV-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경우는 사회구제금의 120%, 근속연수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는 130%,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경우는 150%로 각각 지급한다. 단, 실업후 13개월부터는 일률적으로 사회구제금의 120%를 지급한다. 사회구제금의 지급기준이 물가상승과 경제발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만, 시노동국은 사회구제금의 변화에 따라 실업구제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표IV-50> 실업보험금의 수급기간 및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비 고
수급기간	①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에게 최장 12개월분의 구제금 지급	표준임금의 60~75%
	②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자에게 최장 24개월분의 구제금 지급	1년째는 표준임금의 60~70%, 2년째는 50%
지급기준	사회구제금의 120~150%	

자료: 「실업보험규정」

## 2) 난직금(難職金) 및 퇴직금의 지급기준

난직금(難職金) 및 퇴직금의 지급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로 실업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이전 이미 연금의 풀(pool)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과거의 난직금 또는 퇴직금제도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한다. 또 법으로 정해진 난휴(難休) 또는 퇴휴(退休)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채우지 않고 5년 정도 앞당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중 난휴 또는 퇴휴의 자격을 채운 경우 첫 번째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난휴금 또는 퇴휴금을 이어 받은 사람은 실업구제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 3) 실업기간 중의 의료보조비

실업기간 중 의료보조비 지급기준은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결정하지만, 실업자의 장례보조금, 직계친족부양보조금 그리고 구제금의 지급기준은 해당 사회보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4) 수급기간

실업구제금의 수급에는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실업보험규정’에 따르면 구제금의 수급기한이 본인의 근속연수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예컨대 근속연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의 경우는 최장 2년으로 한다. 북경시는 실업구제금의 수급기한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으로 하는 5개의 수급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구제금

의 수급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금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생활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제금의 수급기한이 지났더라도 재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구제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다.

#### 사. 실업보험기금 지원실적

199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7,920만명의 재직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보험자는 전체 근로자의 68.5%를 차지한다. 국유기업의 피보험자의 경우 6,836만명으로서 국유기업 근로자의 86.3%가 실업보험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도 실업보험기금의 수지를 보면 수입이 8.37억원, 지출이 2.50억원으로서 5.87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표IV-51참조). 2년 후인 1993년도 실업보험기금의 수지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은 17.44억원, 지출은 9.4억원, 해당년도 잔고 총액은 8.04억원이었고, 그간의 보험기금 잔고는 총 41.84억원에 달해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51> 실업보험기금 수지결산표(1991년)

(단위 : 억원, %)

수 입		지 출	
항 목	결산액	항 목	결 산 액
실업보험기금 총수입	8.37	실업보험기금 총지출	2.50(100.0)
		실업구제금, 의료지원금, 난·퇴직금	0.24(9.6)
		전직훈련비	0.93(37.2)
		생산자구비	0.43(17.2)
		실업보험관리비	0.72(28.8)
		기타비용1)	0.31(12.4)
전년도에서 이월	19.31	지출누계	25.18

주 : 1) 기타비용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

자료 : 국무원 연구실 『중국 사회 보험 제도 개혁』에 따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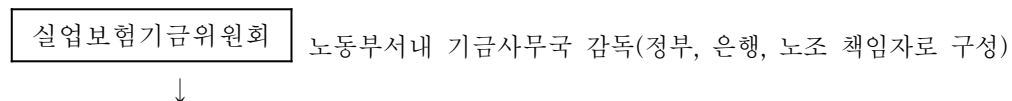
#### 아. 실업보험기금 관리운영기구

중국의 실업자 및 실업보험기금 관리운영의 책임기구는 노동행정 주관부서 및 그 관할하의 노동복무공사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노동복무공사와 실업보험기금과의 관련에 관해 살펴보자. ‘실업보험잠정규칙’에 따르면 노동복무공사의 책임은 ①실업자의 등록, 기록작성, 등록카드의 작성과 관리, ②실업보험기금의 관리와 지급, ③실업자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④실업자의 전직훈련, ⑤자영업과 자가생산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가 포함된다. 노동복무공사가 중국의 실업보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림IV-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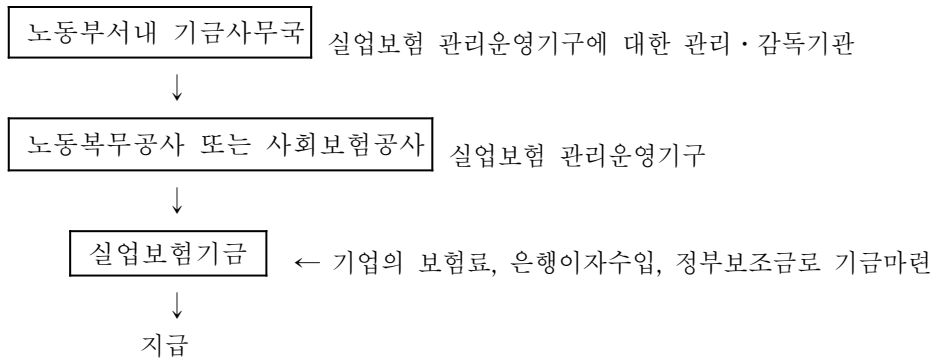
노동복무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잠정규칙’ 제13조에 ‘각급 노동복무공사는 실업자 및 실업보험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정하거나 전임 관리자를 배치한다. 省,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는 단순화의 원칙에 근거해 전임 직원수를 정하고, 관리경비는 실업보험기금의 관리비로부터 지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업보험규정’은 실업보험기금의 관리에 있어 노동복무공사의 역할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 규정 제4장 제17조에서 ‘縣 차원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는 실업보험기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업보험기금의 관리를 지도·감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 정부의 책임자가 맡고, 노동, 재정, 계획(경제)위원회, 심사·계획, 은행 등의 부서와 노동조합에서의 책임자들이 위원직을 맡는다. 사무기구는 노동행정부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실업보험 관리부서의 명칭은 다르다. 최근에는 노동복무공사가 변한 사회보험공사가 연금 및 실업보험구제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IV-6] 노동복무공사와 실업보험기금 관리운영의 흐름도







#### 자. 실업보험제도의 향후 개혁 방향

1986년부터 실업보험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이 제도는 실업자의 생활보장, 노동관련제도의 개혁 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제도 운영중에 ①피보험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②실업보험의 사회 풀(pool)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③지출 강조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④관리비가 높은 경우 등의 상황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실업보험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편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 1) 실업보험 관련규정의 명시화

현행 실업보험법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실업보험법을 우선 정비하여 실업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보험의 실제 적용범위, 요율, 대우기준, 관리운영기구 및 그 직무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2)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도 중요하다. 1993년 ‘실업보험규정’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이제까지 네가지 종류에서 일곱가지 종류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계기업을 포함하는 그 외 기업의 근로자는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 입법형태로 보험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차원에서도 지방입법을 추인(追認)하거나 또는 지방정부가 받아들인 경험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3) 보험기금 재원의 확대와 3자 부담원칙의 적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자 개인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의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와 같은 형태의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보험료를 각출하는 3자 부담원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입법은 이미 3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경우는 3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재정으로부터 기금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한편 기업도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도 일률적으로 1인당 월 2원의 기준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4) 기금지출 구조의 개선과 기금사용의 효율성 제고

1993년 기금 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실업구제금에 대한 지출은 총지출의 28%, 전직훈련비와 생산자구비는 40% 그리고 관리비 및 기타의 지출에 32%가 지출되어 전직훈련비, 생산자구비 및 관리비의 지출이 실업구제금에 대한 지출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직훈련비와 생산자구비의 증가는 직업훈련원의 건설 및 노동복무기업에 대한 보조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 보다는 실업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는 전직훈련이나 자기부조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중국 실업보험제도의 또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업보험기금의 지출구조가 실업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적극적인 실업보험제도로서의 제도운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5) 관리비 지출 증가의 억제

그런데 기금지출을 살펴보면 관리비 지출의 증가율이 행정부서의 행정비 지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의 지역에서는 실업보험 담당자의 급여(상여금 포함)를 자유로이 인상시키거나 실업보험기금

을 건물의 건축비, 승용차 등의 내구소비재 구입에 유용하기도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향후에 이를 방지하는 엄격한 조치를 만들어 이와 같은 실업보험금의 유용과 관리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10. 이스라엘

### 가. 이스라엘 실업보험제도 연혁

1970년 4월 1일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실업보험제도는 직업훈련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순수 실업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 징수가 개시된 후 약 3년이 지난 1973년 1월 1일부터 지급되었으며, 당시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잃고 세계 곳곳을 방랑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위치에 국가를 재건한 이후부터 국방에 매우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때문에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역자가 구직하지 못하였거나 설령 구직하였더라도 미흡한 임금조건에 놓여 있는 경우 이를 보조하는 장려금제도를 잘 정비해 놓았다.

이러한 전역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장려금 지급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초의 장려금 지급은 1982년 1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전역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1991년 7월 1일에 이스라엘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알선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전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1994년 8월 1일부터는 전역자에 대한 지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저임금의 직장에 취업하는 전역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 나. 실업보험

### 1) 적용대상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고용자인 이스라엘의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근로하는 일시거주자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며,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뿐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준비가 되어있는 실업자를 말한다.

이밖에 실업급여의 적용범위에는 전역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복무를 마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전역자도 포함된다.

### 2) 재원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에 있어서 보험료의 부담은 정부, 피고용자, 고용주가 부담한다(표IV-52참조) 전역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국방부에서 부담한다.

<표IV-52> 이스라엘의 실업보험료율

(단위 : %)

	보험료율	할인된 보험료율1)
근로자	0.15	0.08
사업주	0.04	0.04
국방부	전역 군인을 위한 실업급여	
정 부 (근로자를 위한 지원)	0.11	0.07

주: 1) 보험료 각출액이 평균임금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평균임금의 1/2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여 부과함.

### 3) 보험료 징수

실업보험료는 크게 근로자와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징수된다.

#### 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지만 그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각출한다. 이 집단은 키브츠 또는 협동조합 마을주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등을 포함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maximum income ceiling)은 1995년 1월에 조사된 평균임금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편 일부 특정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키브츠 주민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사용주는 그러한 근로자가 고령연금의 수급자가 아니라면 그들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반면 정부의 특정 관리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이스라엘의 영주권자가 아닌 근로자는 산업재해와 회사파산 및 기업분리 및 출산휴가의 경우와 관련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 나)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험료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란 다음과 같은 신분을 지닌 자로 정의한다. 즉,

- 자영업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마을의 주민 포함)
- 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자영업자도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시급근로자, 임금 이외의 소득을 갖는 고령연금 수급자, 학생, 해외에 체류중인 자국민 등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험료 납부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당해연도 소득이다. 보험료 징수대상도 피용근로자 이외에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 다) 징수기관

국립보험청(NII : National Institute of Insurance)에서 실업보험료를 징수·관리한다. 이 기관은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도 함께 징수·관리하고 있다.

라) 보험료 적자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최근 들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에서 여러 법률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1987년 4월 1일 제정된 경제안정화법이었으며 여기서 사업주 및 피용근로자가 아닌 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보험청(NII)은 보험료 징수액의 감소로 인한 적자분을 재무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데 그 적자보전 수준은 그동안 <표IV-53>와 같이 변하여 왔다.

<표IV-53> 보험료 적자분에 대한 재무부의 보전

개정 연월일	개 정 내 용
1990년 4월 1일	적자보전 수준은 2.8%이었으나 이 때 4.3%로 상향조정
1991년 5월 1일	적자보전 수준이 사업주에 한하여 6.3%로 인상
1992년 10월 1일	자영업자에 대한 보전 수준이 6.3%로 인상
1993년 1월 1일	일하지 않는 피보험자와 비자영업자에 대해 보전이 취소됨
1994년 10월 1일	사업주에 대한 보전 수준이 6.77%로 재인상
1995년 2월 1일	국립보험청(NII)이 징수하는 세율을 인하하였고, 정부는 인하분만큼에 해당하는 액수를 NII에 적자 보전함. 적자보전 수준은 1.95%임

4)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적으로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조건하에서는 18세 이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권이 부여된다.

이스라엘의 기준기간은 하루 단위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신분별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360일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다. 근로자의 종류별 기준기

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표IV-54>과 같다.

<표IV-54> 이스라엘 실업보험의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구 분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비 고
상용근로자	360일	180일	또는 540일 중 270일
일용근로자	360일	150일	또는 540일 중 225일
청소년근로자	360일	100일	
전 역 자	없 음	없음	

1차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보험의 기준기간은 2차의 실업신고일 이전의 360일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근로자가 180일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50일 등이다. 다만 이 때는 2차의 실업발생이 1차의 실업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만일 24개월 이후에 2차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면 540일의 기준기간 중 상용근로자는 270일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225일로 피보험기간이 각각 변경된다.

#### 나) 대기기간

실업급여는 4개월마다 5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

#### 다) 실업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의도적이거나 부당한 사유로 실업하는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의한 적절한 취업알선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또는 취업 거부일로부터 9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 라) 실업급여 수준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근로자의 피보험기간과는 상관없이 연령과 부양가족

의 수 그리고 전역 여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 마) 지급수준

일반적인 실업 급여 일액은 실업 이전의 75일간 임금의 평균 일액의 50%이다. 전역자의 실업급여 일액은 평균급여 일액의 1/2의 80%인데 이 때에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실업급여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받는 임금을 차감한 액수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 바)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일수는 45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실업자의 경우 1년에 175일이다. 반면 전역자의 최대 지급일수는 1년에 70일이고, 이외의 모든 경우는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1개월을 포함하여 1년에 138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사) 실업급여의 금액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에서 퇴직연금 수급 일액의 60%를 감하여 지급된다. 실업자가 퇴직 연령 이후에 근로를 하고 퇴직연금을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40%를 보장해준다.

부적합한 일을 제공받은 35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실직된 지 60일 동안 급여를 준다. 이 급여는 평균 일일 근로수입과 실업급여와의 동액 또는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 일일급여의 75% 간의 차이만큼(만약 후자가 더 높다면) 지급된다.

<표IV-55> 이스라엘의 실업급여 (1998년 8월 현재)

(단위 : shekel)

1인 급여 일액 한도	전역장병의 급여 일액 한도	부부의 급여 월액 한도
403.05	83.91	8,849

주 : 1달러는 3.5104 shekel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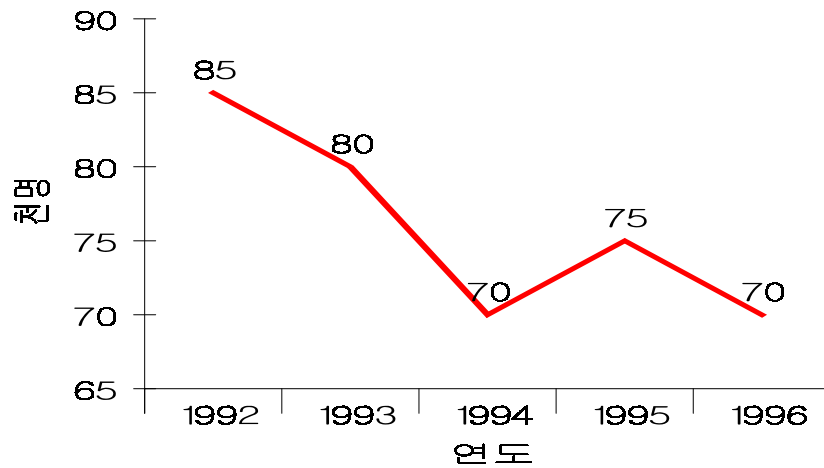


#### 5) 실업급여 지급현황

<그림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월 평균 실업급여 수급자는 1992년 약 85,000명이던 것이 1996년에 이르러서는 약 70,000명 선으로 감소하여 1995년을 제외하고 매년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 왔다.

[그림IV-7] 이스라엘의 월 평균 실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이스라엘 국립보험청(NII: National Institute of Insurance), 1998

#### 다. 실업자를 위한 기타 수당

##### 1) 조기재취직장려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실업후 60일이 지난 후)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때 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60일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 최대일수에서 뺀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장 150일 동안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액보다 임금이 낮은 직장에 취업한 35세까지의 실업자에게는 75일 동안 특별수당이 주어진다.

## 2) 전역장려금

전역일로부터 24개월 중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직업안정기관이 알선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전역자에게 전역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이 알선한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의 11개월 중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대해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1/2을 138일 동안 지급한다.

전역일로부터 21개월 중 적어도 25일 동안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에 종사한 전역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는 전역일로부터 22~24개월 등 3개월간 25일 동안 적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전역장려금이 지급된다.

## 3)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장려금

15~18세의 청소년은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 자신에게 적절하지 못한 훈련임을 인식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그가 이전에 일한 경험이 있고 적어도 자기 가족부양비의 20% 이상을 부담하여 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장려금은 평균임금의 1/2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과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지금까지 각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2가지로 압축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각국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시사를 얻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유희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구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실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잉여노동력에 대한 정리가 촉진되어 실업자가 증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순효과가 결정되는데,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직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함과 동시에 잉여노동력에 대한 합리적인 직업전환과 대비

치 등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노동력의 질적 수준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직업훈련제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실업급여의 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바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중심으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한정적으로 추진하고 그 대신 고용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기업의 고용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업급여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부록. 고용보험 실시국가의 실업보상제도(1997년 현재)

### A.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sup>43)</sup>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 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7년 법제정, (1991)</li> <li>사회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실직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li> <li>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소득의 1%</li> <li>사: 임금총액의 4%</li> <li>정: 없음</li> <li>실직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 중 가장 많은 임금의 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수립 및 일반감독: 노동사회보장부</li> <li>사회보장행정부가 운영</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0년 법제정, (1977)</li> <li>강제보험 및 실업부조의 이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일정액(3,740실링)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건설공</li> <li>공무원은 적용제외, 건설근로자는 특별제도 적용</li> <li>최초 실업급여신청 전 24개월동안 52주 이상 보험료 납부, 두 번째 실업급여신청시부터는 최근 12개월동안 20주 이상 보험료 납부</li> <li>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li> <li>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로 인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 거절(4주간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3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3%</li> <li>사: 임금의 3%</li> <li>정: 적자보전 및 긴급부조 비용</li> <li>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전 임금의 40~50%</li> <li>(120개 임금계층별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차등화)</li> <li>급여상한: 월 12,759실링</li> <li>급여하한: 월 1,653실링</li> </ul> </li> <li>실업급여지급기간: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라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2개월간 20주이상 고용: 12주</li> <li>최근 24개월간 52주이상 고용: 20주</li> <li>최근 5년간 156주이상 고용: 30주</li> </ul> </li> <li>부양가족 보조급여: 부양가족 1인당 월 627실링</li> <li>기본급여 및 부양가족보조급여액은 최대 실업 전 임금의 80%</li> <li>실업부조: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진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업급여액의 92~95%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사회부 및 산하고용사무소</li> <li>고용사무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li> <li>보험료 징수는 의료보험기금사무소에서 다른 사회보험료와 통합징수</li> </ul>

43)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로 바뀌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와 슬라비아로 구분되었다. 칠레는 실업부조가 실업보험으로 바뀌어 강제실업보험국가로 분류하였다.

국 명	법제정 (헌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방 글 라 데 시	• 1965년 법제정, (1965)	• 상업 및 공업근로자	• 전액 사용자 부담	• 노동인력부
		• 비자발적 이직자일 것	• 급여수준: 실업이전 기본급의 50% • 급여기간 상용근로자: 120일 계약근로자: 60일 임시근로자: 30일 • 추가지급 : 상용근로자는 1년 에 1달, 계약근로자는 14일분	
바 베 이 도 스	• 1982년 법제정 (1982)  • 사회 보험	•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16~64세의 근로 자	• 노: 임금의 1.5% • 사: 임금의 1.5% • 정: 고용주 입장일 때를 제외 하고는 없음	• 정책수립 및 일 반 감 독 : 재정부 • 급여지급: 국립보험청
		• 자영업자, 가족근로자 및 공무원은 적용제외 • 피보험고용기간이 52주 이상일 것 • 실업발생 전 3분기 동 안 2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3일간의 대기기간이 경 과했을 것	• 평균임금의 60%를 26주까지 지급	
벨 기 에	• 1920년 법제정 (1992)  • 사회보험	• 모든 피용자	• 노: 임금의 0.87% • 사: 임금의 1.46% • 정: 적자발생시 보전	• 정책수립 및 일 반 감 독 : 고용노동부 • 보험료 징 수: 사회보 장청 • 실업급여 자 격 심사: 30 개 고용사무 소(노·사· 정 3자 위원 회에서 운 영) • 실업급여 지 급: 공공급 여사무소 또 는 노동조합
		• 지난 18개월 내 312일 이상 또는 지난 36개월 내에 60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했을 것(연 령에 따라 자격일수 증 가) •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 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 을 것 •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 합한 직장알선에 대한 거절(8~52주 급여제 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장일 경우 실업 이전 임금의 60%(1996년부터는 한달에 56,994 프랑 지급)를 지급하고 실업기간 1년 초과시 단계적으 로 급부율 감소, • 동거인은 첫해에 임금의 55%, 다음해부터 35% • 별도의 부양가족보조급여는 없 으나 실업기간에 따른 급여율 감소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등화	

국명	법제정 (헌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5년 법제정 (1986년, 1990년에 개정)</li> <li>강제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집행: 근로자부조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4년간중 3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요건 충족</li> <li>소득조사를 받을 것</li> <li>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닐 것</li> <li>60일의 대기기간</li> <li>다른 소득이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의 3배까지 지급)</li> <li>60일의 대기기간 후 16개월 중 원하는 4개월동안 지급</li> <li>급여하한: 최저임금액</li> </ul>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5년 법제정 (1989)</li> <li>강제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와 직업훈련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총액의 5%</li> <li>정: 실직공무원과 직업훈련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를 위한 급여비용</li> <li>사회보장비용이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사회위원회</li> <li>사업집행: 노동사회위원회의 지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년간 6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지정학교졸업자</li> <li>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과 훈련알선을 거절하지 않을 것</li> <li>실업 이후 7일 이내에(해고통지후 1개월 이내) 고용사무소에 등록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기간과 연령, 성별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임금의 60% 수준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급(최저임금의 90~140%한도내에서)</li> <li>학교졸업 미취업자는 최저임금의 80%</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0년 법제정 (1996년)</li> <li>사회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근로자, 연방정부공무원, 자영업민</li> <li>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지방공무원은 임의가입할 수 있다.</li> <li>기타 자영업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2.9%</li> <li>사: 피보험자의 부담률의 1.4배(4.13%)</li> <li>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인력개발부</li> <li>사업집행: 고용보험위원회</li> <li>보험료 징수: 국세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실업전 1년동안 420~700시간 이상 피보험자였을 것</li> <li>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또는 질병, 가족 간호, 임신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li> <li>자발적 실업이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업이 아니어야 하며 직업알선 거절 또는 직업훈련 중도포기시 7~12주간 급여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이전 1년간의 평균임금의 55%(최고 주당 \$413한도)</li> <li>\$25,921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족수당을 지급</li> <li>상병수당은 15주까지 지급하고 아동간호수당은 10주까지 지급</li> <li>대기기간은 2~50주</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6년 법제정 (1993)</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영기업의 근로자</li> <li>1년 이상 고용</li> <li>비자발적인 실업일 것</li> <li>지방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정기적 보고를 할 것</li> <li>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지방정부의 보조액에 따라 0.6~1%</li> <li>정: 지방정부의 보조금</li> <li>지방공적부조액의 120~150%</li> <li>5년미만의 피보험자는 1년간, 5년이상의 피보험자는 2년간 수급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 고용국</li> <li>사업집행: 지방 고용사무소</li> </ul>
키프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6년 법제정 (1980)</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63세의 피용자</li> <li>파트타임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는 적용제외</li> <li>최근 1년간의 20주를 포함하여 26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li> <li>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매주 직업안정기관에 구직활동상황을 보고할 것</li> <li>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에 의 직접적 참여, 취업알선의 거절의 경우 6주간 자격 상실</li> <li>3일(임의가입자는 30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6.3%</li> <li>사: 임금의 6.3%</li> <li>정: 임금의 4%</li> <li>모든 사회보험료 포함)</li> <li>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60%</li> <li>피보험기간이 26주인 경우 13주간 지급하고 피보험기간이 26주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주에 대해 1일씩 급여기간 연장(최장 26주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험위원회 (노·사·정 3자로 구성)</li> <li>사업집행: 노동사회보험부 사회보험국</li> </ul>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1년 법제정 (1988)</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24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li> <li>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li> <li>60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2%</li> <li>사: 임금의 1%</li> <li>정: 없음</li> <li>실업 전 임금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 정액급여 지급</li> <li>과부이거나 21세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 홀아비, 기타 부양 친척이 없는 경우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복지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장청</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9년 법제정 (1975)</li> <li>강제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용자</li> <li>임시 농업근로자, 가사종사자, 공무원 및 60세 이상의 피용자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의 2%</li> <li>정: 적자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월 연속을 포함한 6개월 이상의 피보험고용을 충족시킬 것</li> <li>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고 고용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li> <li>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7일 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최종월 임금의 60%를 16주간 지급</li> <li>실업 전 24개월간 계속 피보험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28주까지 연장가능</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05년 법제정 (1984)</li> <li>강제보험과 실업부조의 이원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피고용자</li> <li>실업부조: 저연령구직자, 자녀를 가진 최근에 과부·이혼·별거한 여자, 최근 제대자, 죄수, 견습공, 실업급여를 소진한 장기실업자</li> <li>공무원, 가사근로자, 계절제근로자, 건설근로자, 부두근로자, 상선원, 비행사 등은 특별제도로 보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월급여가 13,720프랑까지는 3.01%, 13,720~60,320프랑까지는 3.60%</li> <li>사: 월급여가 13,720프랑까지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5.13%, 그 이상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5.26%</li> <li>정: 실업부조 전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보험조직(UNEDIC-ASSEDI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2개월간 91일 또는 507시간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상태에 있을 것(60세 이하)</li> <li>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인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실업부조의 경우 장기실업자이고 소득조사기준에 맞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급여는 동일하게 임금일액의 57.4%를 지급, 이후 4~27개월에 있어서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6개월단위로 연장되는 삭감하여 연장급여도 다르게 지급</li> <li>급여하한은 1일 101.92프랑이나 52세 이상의 실업자, 1년 이상 실업한 경우, 지난 5년간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127.82프랑까지 증가한다.</li> <li>실업부조는 59세까지 6개월마다 심사하여 지급. 60세 이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다.</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7년 법제정 (1969)</li> <li>강제보험 및 실업부조의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근로자,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건설공, 훈련생</li> <li>임시근로자, 가족근로자는 적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3.25%</li> <li>사: 임금의 3.25%</li> <li>정: 실업부조비용, 실직자의 사회보험부담금, 고용촉진법상의 보조금 및 적자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연방노동사회부</li> <li>사업진행: 연방고용청, 지방고용청 및 지역고용사무소(노·사·정 3자 기구)</li> <li>보험료 징수: 의료보험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동안 360일(계절근로자는 180일)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실업발생 즉시 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노무제공이 있을 경우 주 20시간 미만의 노무 제공</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적절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의 거절(12주간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과세 후 임금의 68%(아이가 없으면 63%)</li> <li>피보험고용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기간 차등화</li> <li>최근 3년간 12개월 이상 고용:4개월</li> <li>최근 4년간 18개월 이상 고용:6개월</li> <li>최근 4년간 24개월 이상 고용:8개월</li> <li>최근 4년간 30개월 이상 고용:9개월</li> <li>최근 4년간 36개월 이상 고용:12개월</li> <li>중고령자에 대한 급여기간의 특례</li> <li>42~43세:14~18개월</li> <li>44세~48세:20~22개월</li> <li>49세~53세:24~26개월</li> <li>54세 이상:28~32개월</li> <li>소정의 실업급여를 소진한 저소득 실업자에게는 실업부조로서 과세 후 임금의 57%(독신자는 53%) 지급</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그 리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5년 법제정 (1994)</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 및 상업종사 근로자</li> <li>선원 및 인쇄공은 특별 제도에 의해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33%</li> <li>사: 임금의 2.67%</li> <li>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집행: 인력고용청 및 동지방 사무소</li> <li>보험료 징수: 사회보험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의 실업급여신청의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80일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 두 번째 실업급여신청부터는 최근 14개월 동안 125일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일할 수 있고 고용사무소에 등록할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월급의 50% 또는 임금총액의 40%</li> <li>급여하한: 미숙련근로자 임금의 66.5%(1일 1,383드라크마)</li> <li>부양가족 1인당 실업 전 임금의 10%를 부양가족 수당으로 지급</li> <li>대기기간 6일이 지난 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li> </ul>	
아 이 슬 란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6년 (시행안됨) 법제정 (1993, 1997)</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총액의 1.35%</li> <li>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실업보험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세에서 69세의 아이슬란드 거주인</li> <li>실업 전 12개월 동안 425시간(1997년 7월부터 400시간)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3일 이상 실업한 경우</li> <li>고용사무소에 매주 출석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간의 고용시간에 따라 일일 최저 620.52크라운(425시간고용)~최대2,482크라운(2,080시간고용)</li> <li>실업급여 지급기간: 최대 52주(1997년 7월부터 5년)</li> </ul>	

국 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이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7년 법 제정 (1990)</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법 적용 대상자</li> <li>자영업자, 임의적 피보험자, 정년퇴직자, 근로능력 상실자, 건설근로자 보험 가입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의 3%</li> <li>정: 적자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발생 전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했을 것</li> <li>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li> <li>자발적 이직, 자신의 과실에 의한 실업, 적절한 직업알선을 거부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보험기간과 결혼여부에 따라 12~50개월동안 지급</li> <li>최소한 평균임금의 55%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4명까지 1인당 실업급여액을 10%씩 증액, 최대한도는 평균급여액의 80%</li> </ul>	
에 이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1년 법 제정 (1993)</li> <li>강제보험 및 실업부조 의 이 원 제 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6세 이하의 피용자</li> <li>시간제 근로자, 가족근로자, 자영업자, 1995년 이전에 고용된 공무원은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주 소득이 I£80 이하의 경우 무부담, I£80~188의 경우(연 수입 I£22,300까지) 5.50%, I£188이상(최고한도 없음)일 경우 추가적으로 2.25% 더 부담. 자영업자의 경우 I£20이상 I£188이하(연 소득 22,300까지)이면 5.0%, 188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2.25% 더 부담.</li> <li>사: 근로자 1인당 주 I£250까지의 임금지급액에 대해 8.5%, 주 I£250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2%, 건설, 인쇄, 교통, 엔지니어링 분야의 사업주는 2.25% 추가부담(최고한도는 연 I£26,800)</li> <li>정: 적자보전, 실업부조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장부 산하 지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세에서 65세로 최근 1년 동안 39주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실업부조의 경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에이레 거주자로 최소한 390일 이상 실업되었고, 실업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적합한 취업알선의 거절(6주간 자격정지),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분규기간 동안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급여는 주 I£64.50</li> <li>실업급여를 소진한 실업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주 I£62.40까지 지급하고 15개월 후에는 I£64.50 지급</li> <li>부양자가 있는 경우 성인부양자에 대해 주 I£38.50, 아동에 대해 주 I£13.20 지급</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및 현행법: 1970</li> <li>• 강제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65세(여자 60세) 이하의 근로자</li> <li>•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가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15~18세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임금의 0.15%</li> <li>• 사: 임금의 0.04%</li> <li>• 정: 임금의 0.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감독: 노동사회부</li> <li>• 사업집행: 국민보험공단 및 지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근로자의 경우 실업 전 360일 중 150일 이상 또는 실업 전 540일 중 225일 이상 피보험고용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li> <li>• 월급근로자의 경우 실업 이전 360일 중 180일 이상 또는 실업이전 540일 중 270일 이상 피보험고용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li> <li>• 신규이민자의 경우 실업 이전 360일 중 75일 이상 또는 실업 이전 540일 중 125일 이상의 피보험고용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li> <li>• 소수민족의 경우 실업 전 360일 중 100일 이상의 피보험고용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li> <li>•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li> <li>• 자발적 이직 또는 취업알선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 5일간의 대기기간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 이전 75일간 평균임금의 40~80%를 매년 138일(45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75일)까지 지급</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이탈리아	1919년 법제정 (1939,1968, 1970,1975, 1988및1991) · 강제보험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 근로자</li> <li>· 건설근로자는 특별보조 급여 적용도 받음.</li> <li>· 최근 2년간 52주 이상 (건설근로자는 43주, 제 조업근로자는 1년간 6 개월 이상) 고용되어 보 험료 납부</li> <li>· 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 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 (30일간의 실업급여 수 급자격 정지)에 해당하 지 않을 것</li> <li>·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 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없음</li> <li>· 사: 임금총액의 1.61%(산업 경영자) 또는 1.91%(제조업 과 상업). 산업근로자는 또 한 특수실업을 위한 0.3% (건설업은 0.8%)와 임금보 조기금을 위한 2.2%(50인 미만 사업장은 1.9%)을 부 담</li> <li>· 정: 관리운영비 및 농업근로 자, 청소년근로자, 임금보조 기금 보조</li> <li>· 실업급여: 실업 이전 임금의 30%를 180일까지 지급</li> <li>·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지급</li> <li>·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급 여: 실업 이전 임금의 80% 를 90일간 지급(연장가능)</li> <li>· 제조업근로자의 타지역 이 주근무시: 근로자의 연령과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임금 의 80%를 1~4년까지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감독: 노동사회보 장부와 재 무성</li> <li>· 사업 집행: 국민사회보 험공단 및 산하 지방 사무소</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7년 법 제정 (1975, 1994)</li> <li>사회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5인 미만의 농업·임업·수산업 사업장 근로자는 임의가입</li> <li>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고용기간이 4개월 이하인 계절근로자는 적용 제외</li> <li>일용직근로자, 선원, 공무원은 특별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0.4%</li> <li>사: 임금의 0.75%(계절근로와 건설업의 경우 0.95~10.5%)</li> <li>정: 실업급여비용의 1/4 및 관리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성</li> <li>사업집행: 도도부현 및 공공직업안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2개월간 6개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4주마다 보고할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중대과실에 의한 이직,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1~3개월간 급여정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대기기간 7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임금의 60~80% 지급</li> <li>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기간 차등화</li> <li>1년 미만 고용: 90일</li> <li>1년 이상 5년 미만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세 미만: 90일</li> <li>45세 이상 55세 미만: 180일</li> <li>55세 이상 65세 미만: 210일</li> </ul> </li> <li>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미만: 90일</li> <li>30세 이상 45세 미만: 180일</li> <li>45세 이상 55세 미만: 210일</li> <li>55세 이상 65세 미만: 240일</li> </ul> </li> <li>10년 이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미만: 180일</li> <li>30세 이상 45세 미만: 210일</li> <li>45세 이상 55세 미만: 240일</li> <li>55세 이상 65세 미만: 300일</li> </ul> </li> <li>심신장애자 등 취업곤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5세 미만: 240일</li> <li>55세 이상 65세 미만: 300일</li> </ul> </li> <li>급여기간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개별연장급여: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90일 차등 적용</li> <li>-개별연장급여: 60~90일</li> <li>-훈련연장급여: 30~90일</li> <li>-광역연장급여: 90일</li> <li>-전국연장급여: 90일</li> </ul> </li> <li>사향산업, 산재, 기술 취득, 이주, 설비에 대해 부가급여지급</li> <li>단시간근로자는 90~210일 지급</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년 법 제정 (199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급여: 모든 피용자</li> <li>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70인 이상 고용사업장</li> <li>60세 이후 신규고용자, 시간제 · 일용근로자, 계절적 ·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0.5%</li> <li>사: 임금의 1.5%~0.9%(기업 규모별 차등화)</li> <li>정: 관리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집행: 지방노동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간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료 납부</li> <li>이직 후 즉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실업을 인정받을 것</li> <li>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직업지도의 거부시에는 수급자격 제한</li> <li>2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li> <li>실업급여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차등화(30~210일)</li> <li>직업훈련수강시 2년까지 실업급여 연장</li> </ul>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1년 법 제정 (1976, 1978)</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 일정조건하의 자영업자, 신규학교 졸업자 및 16~24세의 직업훈련 수료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특별부조의 2.5%</li> <li>사: 없음</li> <li>정: 市 재정수입의 2%와 지방 세수입의 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집행: 고용청 및 지역고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간 중 26주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자영업주는 5년, 신규학교 졸업자는 26주 이상의 등록된 실업자일 것</li> <li>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li> <li>자발적 이직, 취업알선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3개월간의 기본급의 80%(부양아동이 있으면 85%)를 신규학교졸업자는 최저임금의 70%, 자영업자는 80%(최저임금의 2.5%한도 내에서), 365일간 지급</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 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6년 법 제정 (1987)</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실업 전 1년간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20~49주의 보험료 납부시 실업급여수준을 감액함)</li> <li>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피용자는 기본임금의 8.3% (주당 Lm3.54~Lm9.86), 18세 이하는 Lm3.54로 동액부담), 자영업자는 세전수입에 따라 주당 Lm5.50~Lm15.10</li> <li>사: 기본임금의 10%(피용자 1인에 대해 주당 최소 Lm4.24~Lm11.83)</li> <li>정: 총 보험료의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감독: 사회 복지 부</li> <li>사업 집행: 사회 보장 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가 있는 가장의 경우 일액 Lm3.14지급, 이외에는 일액 Lm2.04지급</li> <li>소득조사기준이 맞는 리우에 거주하는 가장에게는 특별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Lm5.27, 이외에는 Lm3.42 지급</li> <li>156일까지 지급</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6년 법 제정 (1949, 1987)</li> <li>강제보험 제도와 실업부조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공무원은 특별제도로 보호</li> <li>최근 39주 동안 26주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최근 5년중 4년 동안 52일 이상 임금을 받았으면 연장급여 지급(12세 미만의 자녀 간호를 위해 보낸 기간도 자격기간으로 인정됨)</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산업별로 차등(평균적으로 임금의 2.20%)</li> <li>사: 산업별로 차등(평균적으로 임금의 5.05%)</li> <li>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감독: 사회 보장 위원회 (노·사·정 3자 구성)</li> <li>사업 집행: 산업별 노사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급여는 최저임금의 70%, 연장급여는 마지막 임금의 70%(최대 임금일액은 289길더)</li> <li>대기기간 없이 6개월간 지급가능</li> <li>수급자격자의 연령·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4년반동안 실업급여 연장가능</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06년 법제정 (1970)</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 (공무원, 선원 포함)</li> <li>특정 상황의 64세 이상 자영업자</li> <li>실업급여 신청시의 임금이 실업발생 전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또는 실업발생 전 3년간의 평균임금이 더 높을 경우는 3년간의 평균임금)의 75% 이상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총액의 7.8%, 자영업자는 10.7%</li> <li>사: 임금의 14.1%</li> <li>중앙정부: 적자보전</li> <li>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개인의 사회보장분담금 산정기준 소득의 각각 0.11%와 0.42%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비용을 포함한 것임.</li> <li>1일 실업발생 전 연평균소득의 0.2%(실업 전 임금의 73%)씩 지급 1일 438크로네까지 지급</li> <li>급여상한 : 1일 438크로네</li> <li>18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당 지급</li> <li>3일간의 대기기간 경과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차등화 64세 이하: 80주 65세 이상: 매년 52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내무부</li> <li>사업집행: 고용청 및 지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할 것</li> <li>실업 이전 1년간 180일 이상 고용되었거나 신규학교 졸업자, 전역자, 육아휴직종료자 또는 형기를 마친 죄수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의 3%</li> <li>정: 적자보전</li> <li>전국 평균임금의 36%를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9개월, 이외에 12개월, 25년 이상(여자), 30년 이상(남자) 고용되었던 경우 18개월, 30년 이상(여자), 35년 이상(남자) 고용되었던 경우, 어려운 직종에서 15년 이상 일했고 노령연금 수급이 2년이하 남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24개월 지급.</li> <li>회사의 파산으로 실업한 경우 개인 평균 월급액의 75%지급</li> <li>전문적인 기술훈련을 받는 실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115%를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사회정책부</li> <li>사업집행: 지방정부의 일선 노동사무소</li> <li>보험료 징수: 사회보장청</li> </ul>

국 명	법 제 정 (현행법) 및 제도 유형	적용 범위	비용 부담	관리 운영 기관
		수급 요건	급여 내용	
포 르 투 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5년 법 제 정 (1989, 1993)</li> <li>강제보험 및 실업 부 조 의 이 원 제 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근로자 및 최초 구직자</li> <li>임시 및 단시간근로자와 가사노동자, 자영업자는 적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1%</li> <li>사: 임금의 23.75%</li> <li>정: 3.5% (노·사는 모든 사회보험비용을 포함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반 감 독 : 고용사회보장부</li> <li>사 업 집 행 : 실업센터 및 지역사회보장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4개월 동안 540일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실업부조의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자발적 이직자가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실업급여&gt;</li> <li>평균임금의 65%를 대기기간 없이 수급자격자의 연령에 따라 10~30개월간 지급</li> <li>급여하한: 최저임금액</li> <li>급여상한: 최저임금액의 3배</li> <li>&lt;실업부조&gt;</li> <li>1독신: 최저임금의 70%</li> <li>24인 미만 가족: 최저임금의 90%</li> <li>4인 이상 가족: 최저임금의 100%</li> <li>급여기간: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5~15개월</li> </ul>	
루 마 니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법 제 정 (1994)</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근로자</li> <li>군전역자, 신규졸업 미취업자 또는 18세 이상의 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li> <li>사: 임금의 5%</li> <li>정: 적자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반 감 독 : 노동사회보호부</li> <li>사 업 집 행 : 지방노동사회보호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2개월 동안 6개월간 고용되어 있었을 것(특정 유형의 경우 24개월동안 12개월)</li> <li>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할 것</li> <li>소득이 최저임금의 1/2 이하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기간이 1~5년인 경우 실업 전 3개월간 임금의 50%를 지급, 고용기간이 5~15년인 경우 5%가 인상되고, 15년 초과시에는 추가로 5% 인상</li> <li>급여상한: 최저임금의 75%</li> <li>신규졸업 미취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60%(대출자는 70%)를 270일간 지급</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7년 법 제정 (1966, 1994)</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총액이 연76,752 랜드 이하의 근로자</li> <li>가사노동자, 가정부, 가족근로자, 주당 8 시간 이하 일하는 임시 · 단시간고용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0%</li> <li>사: 서비스지급을 포함하여 임금의 1.0%(의료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임)</li> <li>실업 이전 주(week) 임금의 45%를 26주까지 지급</li> <li>보험료 납입기간의 1/6까지 지급</li> <li>대기기간 7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진행: 실업보험기금 및 실업급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52주중 13주 이상 보험료 납부</li> <li>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li> <li>질병과 임신에 의한 실업이 아닌 경우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li> <li>파업참가에 의한 실업이 아니며,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훈련을 거절하지 않을 것</li> <li>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스 페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법제정 (1994)</li> <li>강제보험 및 실업부조의원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 및 서비스부문 근로자, 철도근로자, 광부, 선원</li> <li>자영업자, 단시간 · 임시근로자 적용제외</li> <li>농업근로자 및 조합원은 특별제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11개 직종군으로 구분, 평균적으로 임금의 1.6%</li> <li>사: 11개 직종군으로 구분, 평균적으로 임금총액의 6.2%</li> <li>정부: 일부보조</li> <li>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 급여기간 차등화</li> <li>급여율은 최초 6개월간 70%, 이후에는 60%</li> <li>급여상한: 전문직 최저임금의 220%(자녀가 있는 경우), 170%(독신의 경우)</li> <li>급여하한: 아동이 있으면 최저임금액 100%, 독신은 75%</li> <li>부분실업시 근로시간 감소율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지급</li> <li>실업부조: 최저임금의 75%를 6개월간 지급(18개월까지 연장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고용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6년간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 납부</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자</li> <li>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스 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4년 법 제정 (1982)</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실업한 스위스 거주자</li> <li>실업 전 2년간 6~18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li> <li>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li> <li>매달 고용사무소에 보고할 것</li> <li>5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5%</li> <li>사: 임금총액의 1.5%</li> <li>정: 총지출액의 2%과 적자보존</li> <li>실업 전 임금의 67.9%, 피부양자가 있고 3,526프랑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79.2%, 장애가 있거나 소득이 3,526프랑 이하인 경우 77.6% 또는 79.2%</li> <li>실업급여수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차등화, 50세까지는 150일, 50~60세는 250일, 60세 이상은 400일까지 지급(520일까지 연장가능)</li> <li>부분실업 시 단기근로자의 경우 21개월간 상실임금의 78.4%, 악천후에 의한 경우 6개월까지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기금에 대한 감독: 산업무역노동부와 고용사무소</li> <li>보험료징수 감독: 사회보험부</li> <li>사업 집행: 실업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자 16~59세, 여자 16~54세의 국민</li> <li>지난 12개월 동안 12주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li> <li>과실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 부정한 급여신청시에는 실업급여를 감액·정지 또는 급여자격 박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임금총액의 2%</li> <li>정: 연방, 지방정부의 재정보조</li> <li>처음 3개월간은 최근 2개월간 평균임금의 75%, 다음 4개월동안은 60%, 다음 5개월 동안은 45%를 지급</li> <li>최저한도는 최저임금, 최고한도는 평균임금의 100%</li> <li>취업한 적이 없는 실업자는 최저임금의 75%를 13주간 지급</li> <li>피부양자에 대해 1인당 실업급여의 10%를 지급</li> <li>대기기간 3개월</li> </ul>	
러 시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1년 법 제정 (1991, 1992, 1994)</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감독: 노동사회부</li> <li>사업 집행: 고용청 및 동 지방사무소</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1년 법제정 (1995)</li> <li>강제보험 및 실업부조의 이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週소득 £62 이상인 피용자</li> <li>자영자, 특정 기혼여성, 과부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첫주에는 62파운드의 임금에 대한 2% + 그 이상 소득의 8.4%</li> <li>사: 임금총액의 3%~10%(근로자의 임금블록별로 차등화)</li> <li>정: 소득조사급여와 기타 부조급여의 비용 (국민보험료-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모두 포함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고용청, 급여청직업센터, 고용사무소, 급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의 자로 실업했거나 주 16시간 미만 고용되었을 것 (특정 조건하에서는 16~17세도 가능)</li> <li>실업 전 2년간의 각 조세연도에 週최저소득액의 25배 또는 실업 직전 조세연도에 주최저소득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국민보험료 납부</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시 전문심사원이 심사를 함</li> <li>3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여기반형 급여는 6개월간 18세 이하는 £29.60, 19~24세는 £38.90, 25세 이상은 £49.15의 정액급여를 6개월까지 지급.</li> <li>자산조사에 의한 실업부조는 연령, 가구주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29.60~£49.15의 급여를 나이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li> </ul>	

국 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5년 법 제정 (1932 ~ 37)</li> <li>강제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별 임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업, 제조업 근로자, 농업근로자의 2/5, 가사노동자, 주/연방 공무원의 대부분</li> <li>특정분기 급여지급액이 20만 달러 미만이거나 10인 미만 고용한 농장에 고용된 농업근로자, 임시근로자, 4인 미만의 비영리기관 근로자, 가족근로자, 자영업주, 종교단체근로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없음</li> <li>사: 연방정부에 임금의 0.8%, 주정부에 5.4% 납부</li> <li>정: 연방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실업세 수입으로 주정부의 고용보험 관리운영비 전액 및 연장급여비용의 1/2를 지급하고, 보험제정의 적자가 발생한 주에 대한 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연방노동부 및 각 주노동부</li> <li>사업집행: 각주의 지역고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발생 이전 52주 동안 週실업급여의 30배 또는 최고분기 임금의 1.2~1.5배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을 가득했을 것</li> <li>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을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li>1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11개 주에서는 대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임금의 약 50%를 26주까지 지급</li> <li>불황시에는 최고 13주까지 기본급여 연장</li> <li>주정부중 1/4 정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li> <li>부분실업자에게는 부분실업급여 지급</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우루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4년 법제정 (1945, 1981)</li> <li>강제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및 상업근로자</li> <li>은행원, 농업근로자 및 가내근로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이 15%</li> <li>사: 임금의 12.5%</li> <li>정: 적자보전</li> <li>*상기비용부담은 모든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사회보장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장은 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 중 6개월(월급근로자) 또는 150일(일급근로자) 이상의 고용 또는 최저임금의 6배(부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상의 임금을 받았을 것</li> <li>자발적 이직, 파업에의 직접 참여,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50%를 120일간 지급</li> <li>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에게는 실업급여의 20%를 부양가족수당으로 180일까지 지급</li> <li>실업급여 상한: 최저임금의 8배</li> <li>실업급여 하한: 최저임금의 50%</li> </ul>	
베네수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9년 법제정</li> <li>강제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근로자</li> <li>임시·계절근로자, 가내근로자는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총액의 0.70%</li> <li>사: 임금총액의 1.50%</li> <li>정: 없음</li> <li>*상기 비용부담은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험청 및 고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24개월 중 52주 이상 보험료 납부</li> <li>일할 의사와 상태 및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li> <li>1개월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임금의 60%를 13~26주까지 지급</li> </ul>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1991.2.1 발효) 법제정</li> <li>(1992, 1996)</li> <li>사회보험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는 체코국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0.4%</li> <li>사: 임금총액의 3.2%</li> <li>정: 적자보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은 노동사회부</li> <li>노동사무소와 사회보험사무소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3년간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노동사무소에 실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3개월간은 실업 이전 임금의 60%, 다음 3개월간은 실업 이전 임금의 50% 지급</li> <li>재훈련시 70%, 지급</li> <li>최대 월당 4,788크라운(재훈련시 5,702)</li> </ul>	



B.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

국 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 범위	비용 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덴 마 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07년 법 제정 (1907 : 피용자, 1976 : 자영업자)</li> <li>임의보험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상업, 사무직, 농업, 수공업, 운송업, 채석업,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기금에 가입된 피용자, 자영업자, 16~65세인 노동자, 18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실업기금에 대한 회비</li> <li>사: 부가적인 3%의 부가가치세의 일부</li> <li>정: 보험에 가입한 노·사비용 부담합계와 동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부 및 고용청</li> <li>사업집행: 공인된 실업기금(각 실업기금은 개별노조에 의해 운영됨) 및 동 지방사무소</li> <li>보험료 징수: 개별노조의 실업기금 및 산하 지방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12개월 동안 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3년간 26주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 적합한 취업알선의 거절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li>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등록할 것</li> <li>임의조기퇴직급여의 경우 60~66세이고 지난 25년간 20년 이상 실업기금에 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임금의 90%</li> <li>급여상한액: 1일 525크로네</li> <li>대기기간 없이 2.5년까지 지급 가능(주 5일)</li> <li>임의조기퇴직급여는 30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그 이후 82% (각각 135,980크로네와 111,540크로네까지)</li> </ul>	
핀 란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7년 - 실업보험, 1960년 - 실업부조, (1984)</li> <li>임의보험 및 실업부조의 의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64세의 피용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실업기금 지출액의 5.5%</li> <li>사: 실업기금 지출액의 47%</li> <li>정: 기본급여비용으로 실업기금 지출액의 47.5%, 실업부조는 전액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보건부</li> <li>실업급여지급: 공인된 실업기금</li> <li>실업부조지급: 사회보험공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실업부조&gt;</li> <li>17~64세인 핀란드 거주자</li> <li>&lt;기본급여&gt;</li> <li>신규구직자인 경우 최소한 5개월동안 고용되었을 것(두번째부터는 면제)</li> <li>&lt;소득비례급여&gt;</li> <li>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실업 이전 24개월 동안 26주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비자발적 이직, 파업,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 거절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li>5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실업급여&gt;</li> <li>월소득 10,620마르크 이하이면 1일 118마르크+임금일액의 42% 월소득이 그 이상이면 1일 266.57마르크+임금일액의 20% 지급(아동급여는 실업부조와 동일)</li> <li>최대 임금일액의 90%를 500일까지 지급(주 5일)</li> <li>&lt;기본급여&gt;</li> <li>소득조사</li> <li>1일 118마르크(자녀 1인의 경우 24마르크, 2인의 경우 35마르크, 3인 이상의 경우 45마르크 추가)를 500일까지 지급</li> </ul>	

국명	법 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4년 법 제정 (1973)</li> <li>임의보험과 노동시장 현금급여의 이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65세(여자는 60세) 이상으로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실업보험기금의 가입자</li> <li>노동시장 현금급여 프로그램은 20세 이상의 비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실업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월 33~100크로노</li> <li>사: 실업보험프로그램과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5.42%</li> <li>정: 없음. 적자보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중앙노동시장위원회 (노·사·정 3자구성)</li> <li>사업집행: 40개의 실업보험기금</li> <li>노동시장 현금급여 프로그램은 4개의 지역사무소와 노동위원회, 지역 고용사무소에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이전 12개월 중 5개월이상 보험료납부</li> <li>공공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이 있을 것</li> <li>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 참여에 의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의 거절(60일간 수급자격정지)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실소득의 75%지급(1일 230크로노~564크로노까지 지급)</li> <li>실업급여는 주 5일씩 최고 300일간 지급되나 55세 이상 64세의 실업자에게는 450일까지 지급</li> <li>노동시장 현금급여는 1일 230크로노씩 20~54세인 경우 150일, 55~59세인 경우 300일, 60~64세인 경우 450일까지 지급됨.</li> </ul>	

C. 실업부조제도 실시국가

국가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4년 법제정 (1991)</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유급취업자</li> <li>소득조사를 받을 것</li> <li>16~64세(여자60.5세, 1997년부터는 61세)의 근로자로 실업 전 1년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li> <li>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것(2주 이상 자격정지)</li> <li>1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li>성별, 결혼상태 및 부양가족유무에 따라 차등지급</li> <li>주당 실업급여 수준은 결혼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존재여부에 따라 A\$ 72.50~288.90까지 차등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험부에서 사회보험정책 총괄</li> <li>1997년 7월부터 공공부문 서비스 전달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7년 법제정 (1981)</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소득조사를 받을 것</li> <li>최근 2년 동안 52주 이상의 피보험고용기간 충족</li> <li>구직자 등록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li> <li>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li>최초 90일: 月 5,620페소</li> <li>91~180일: 月 10, 414페소</li> <li>181~360일: 月 7,810페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노동복지부</li> <li>사업집행: 사회보장청</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7년 법제정</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59세의 저소득자</li> <li>1년 이상 계속 국내 거주자</li> <li>고용사무소에 실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li> <li>소득 및 저축액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소득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li>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구당 실업부조금액 차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부 및 노동부</li> </ul>

국명	법제정 (현행법) 및 제도유형	적용범위	비용부담	관리운영기관
		수급요건	급여내용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7년 법제정 (1991)</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용자</li> <li>실업 이전 48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것</li> <li>취업알선을 거절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 임금의 15%</li> <li>사: 총임금의 5%</li> <li>정: 없음</li> <li>실업 후 첫 1년은 세후 평균임금의 70%, 2년째에는 50%를 지급</li> <li>급여하한: 최저임금</li> <li>급여상한: 최저임금의 2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부</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0년 법제정 (1964)</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소득 이하의 피용자</li> <li>12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자</li> <li>소득조사를 받아 일정소득 이하로 판정받을 것</li> <li>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li> <li>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노사분규에 관여, 취업알선의 거절(26주간 급여정지)에 의한 실업이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li>소득수준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li> <li>2~10주간의 대기기간(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경과 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복지부</li> <li>사업집행: 지방사회복지사무소</li> </ul>
튀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2년 법제정</li> <li>실업부조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사회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비농업부문의 근로자</li> <li>국민사회보장기금에 12분기(3년) 이상 보험료 납부</li> <li>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li> <li>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업일 것</li> <li>실업자는 부양가족이 있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정부부담</li> <li>최저임금의 3배까지 가능하며 3개월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감독: 사회부</li> <li>사업집행: 국민사회보장기금</li> </ul>